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문정화  
고아라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고아라(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1년 06월 30일

저자 문정화, 고아라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b>제2장 자활사업 정책 동향</b> .....	<b>9</b>
제1절 자활사업 개요 .....	11
제2절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 .....	40
제3절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실태 .....	65
<b>제3장 자활사업 사례 분석</b> .....	<b>73</b>
제1절 자활사례 분석 개요 .....	75
제2절 평택시 .....	77
제3절 인천시 .....	87
제4절 부천시 .....	107
제5절 시사점 .....	120
<b>제4장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b> .....	<b>125</b>
제1절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	127
제2절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140
제3절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분석 .....	159
제4절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	167
제5절 소결 .....	172

<b>제5장 고양시 자활사업 운영실태 및 참여자 종사자 FGI</b> .....	<b>175</b>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	177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FGI 분석 .....	201
제3절 자활사업 종사자 FGI 분석 .....	230
제4절 소결 .....	254
<b>제6장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b> .....	<b>259</b>
제1절 고양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 .....	261
제2절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263
<b>참고문헌</b> .....	<b>280</b>
<b>부록</b> .....	<b>283</b>
<b>Abstract</b> .....	<b>296</b>

## 표 목차

[표 2-1] 자활사업 주요 지원내용	16
[표 2-2]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관련 업무 수행 인력 현황	19
[표 2-3] 2021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21
[표 2-4]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참여대상자	21
[표 2-5] 자활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24
[표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수당) 지급 요약표	28
[표 2-7]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사업내용	33
[표 2-8] 자활사업 주요 프로그램	34
[표 2-9] 2021년 자활사업 예산 현황	36
[표 2-10]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37
[표 2-11] 2017년 서울 자활사업 운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	38
[표 2-1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	53
[표 2-13]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적립방식 변경 전후 비교	56
[표 2-14]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사용방식	57
[표 2-1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62
[표 2-1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전후 변화	62
[표 2-17] 자활사업(자활기업 포함) 참여자 현황	66
[표 2-18]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현황	67
[표 2-19] 경기도 사군별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황 및 예산	68
[표 2-20]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연차별 종사자 현황	71
[표 2-21] 경기도 내 자활기업 유형 및 업종	71
[표 2-22] 경기도 교육사업 실적	72
[표 3-1] 사례조사 대상 지역자활센터 기본사항	76
[표 3-2] 평택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79
[표 3-3]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80

[표 3-4]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81
[표 3-5]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활용 내역 .....	86
[표 3-6]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	89
[표 3-7]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	89
[표 3-8]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90
[표 3-9]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내용 .....	91
[표 3-10]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	95
[표 3-11]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	95
[표 3-12]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96
[표 3-13]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	101
[표 3-14]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	102
[표 3-15]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102
[표 3-16]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	109
[표 3-17]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	110
[표 3-18]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110
[표 3-19]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	115
[표 3-20]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	116
[표 3-2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	117
[표 3-2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내 부천민들레주민협동회 .....	119
[표 4-1] 고양시 기초수급자 현황 .....	129
[표 4-2] 고양시 2015~2020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130
[표 4-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31
[표 4-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32
[표 4-5] 고양시 자활 관련 조례 .....	134
[표 4-6] 고양시 2021년 자활사업 예산 .....	135
[표 4-7] 고양시 2010~2021년 자활사업 예산 .....	137

[표 4-8] 고양시 자립지원팀 업무 .....	139
[표 4-9] 지자체별 자활사업 담당조직 .....	139
[표 4-10] 고양지역자활센터 2001~2021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 .....	141
[표 4-11] 고양지역자활센터 시설 현황 .....	143
[표 4-12] 경기도 지자체별 지역자활센터 설립 현황 .....	144
[표 4-13] 2021년도 고양지역자활센터 예산 .....	145
[표 4-14] 고양지역자활센터 2009~2020년 이용자 현황 .....	146
[표 4-15] 고양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	147
[표 4-16] 고양지역자활센터 2009~2020년 자활사업단 현황 .....	148
[표 4-17] 2021년 고양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	149
[표 4-18] 게이트웨이 추진과정 .....	150
[표 4-19] 자산형지원사업 .....	153
[표 4-20] 자산형지원사업 추진실적 .....	154
[표 4-21] 고양시 자활기업 운영 현황 .....	156
[표 4-22]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2019년 기준) .....	163
[표 4-23] 고양시 자활기금 집행 현황 .....	163
[표 4-24] 경기도 주요 지자체 자활기금 활용 현황 .....	165
[표 4-25] 2020년 고양시 자활기금 사업 .....	166
[표 4-26] 2021 시군종합평가 지표 .....	168
[표 4-27] 보건복지부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2011-2019) .....	168
[표 4-28] 고양시 자활성공률, 탈수급률, 취·창업률(2016-2020) .....	169
[표 4-29]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	170
[표 5-1] 참여자 설문조사 내용 .....	178
[표 5-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0
[표 5-3] 만성질환 여부 .....	181
[표 5-4] 주관적 건강인식 .....	181

[표 5-5] 기초생활수급여부 .....	182
[표 5-6] 월평균 가구 소득 .....	182
[표 5-7] 보유자격증 여부 .....	183
[표 5-8] 직업훈련 경험 여부 .....	183
[표 5-9] 창업 경험여부 .....	184
[표 5-10] 참여시기별 행복도 .....	185
[표 5-11] 자활사업 참여시기 .....	186
[표 5-12]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2021년 4월 기준) .....	186
[표 5-13] 자활사업 참여전 경제활동 .....	187
[표 5-14] 자활프로그램 참여 전 실직기간 .....	187
[표 5-15] 참여중인 자활사업(중복응답) .....	188
[표 5-16] 센터까지 이동시간(왕복) .....	188
[표 5-17] 주이용 교통수단 .....	189
[표 5-18] 자활사업 참여경로 .....	189
[표 5-19] 자활사업 참여 이유 .....	190
[표 5-20] 자활사업 참여 전 정보 확보 정도 .....	190
[표 5-21] 초기 자활계획 수립시 담당자와 논의 충분성 .....	191
[표 5-22] 상담·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192
[표 5-23] 자활센터 만족도 .....	193
[표 5-24]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	194
[표 5-25] 탈수급 가능성 및 경제적 자립가능성 .....	195
[표 5-26] 자립(생계대책) 계획 .....	195
[표 5-27]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	196
[표 5-28] 경제적 자립의 걸림들 .....	196
[표 5-29] 고양시 자활사업 문제점 .....	197
[표 5-30] 필요한 정책적 지원 .....	199



[표 5-31]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FGI 주요 질문 .....	201
[표 5-32] 자활기업 참여자 특성 .....	202
[표 5-33] 자활근로 참여자 FGI 대상자 일반현황 .....	210
[표 5-34]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대상 FGI 주요 질문 .....	230
[표 5-35]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FGI 참여자 특성 .....	231
[표 6-1] 16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현황 .....	269
[표 6-2] 지역별 센터별 전문가 채용사업단 수 .....	271
[표 6-3]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	277
[표 6-4] 지역자활센터 센터 추가 설치(안) .....	278
[표 6-5]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 .....	278

## 그림 목차

[그림 1-1]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8
[그림 2-1] 추진체계 및 추진 주체별 역할	14
[그림 2-2] 자활사업 단계별 지원체계	17
[그림 2-3]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흐름도	18
[그림 2-4] 자활사업 참여 구조(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만 포함, 2019년 말 기준)	43
[그림 2-5] 자활사업 참여 현황(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포함, 2019년 말 기준)	43
[그림 2-6] 조건불이행자 증가 추이	46
[그림 2-7]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48
[그림 2-8]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및 활성화 기대	49
[그림 2-9] 자활역량별 자활참여 대상 재구조화	50
[그림 2-10]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다변화 사업 모형	63
[그림 2-11]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현황	65
[그림 3-1] 평택지역자활센터 조직도	78
[그림 3-2] 평택두레생협	84
[그림 3-3] 평택 공공자전거대여소	85
[그림 3-4]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조직도	88
[그림 3-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계획 체크리스트	91
[그림 3-6]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조직도	94
[그림 3-7]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조직도	100
[그림 3-8]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사업단	104
[그림 3-9]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조직도	108
[그림 3-10]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제빵사업단(HACCP 인증)	113
[그림 3-1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조직도	114
[그림 3-1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 비전	118
[그림 4-1] 2010~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27

[그림 4-2] 2010~2019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128
[그림 4-3] 자활사업 참여자 구조 .....	133
[그림 4-4] 2001~2021년 고양시 자활사업 예산 .....	138
[그림 4-5] 고양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142
[그림 4-6] 고양지역자활센터 위치 .....	144
[그림 4-7] 고양지역자활센터 이용자 현황 .....	147
[그림 4-8] 고양시 기업연계형 자활사업 - 우수 자활기업(CU '함께여는가게' 백석점, 화정점) ....	157
[그림 4-9] 고양시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 구축 .....	158
[그림 4-10]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요내용 .....	160
[그림 4-11] 보건복지부 제시 기금의 용도 .....	162
[그림 4-12] 고양시 자활기금 집행 현황(2012-2020) .....	164
[그림 5-1] 행복도(삶의 평가) .....	184
[그림 5-2]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중복응답) (n=47) .....	200
[그림 6-1]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자활사업 지원 .....	265
[그림 6-2] 고양시 자활사업 로드맵 .....	279



## 요 약

### 1. 서론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workfare) 정책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제로 개편, 문재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양시의 자활사업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양시의 자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중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능력미약자,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자활사업 목표인 탈수급, 취·창업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자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됨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 취·창업 알선 등 통합적 지원으로 효과적인 자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대상자 변화, 자활근로사업 내용,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금 활용, 인력과 공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고양시의 자활사업 여건 및 성과 분석,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타 지역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	자활사업 개요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 경기도 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통계분석</li> </ul>
지자체 자활사업 사례연구	경기광역자활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진 인터뷰</li> <li>· 관련 자료 분석</li> </ul>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분석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분석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분석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현황 분석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통계분석</li> </ul>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실태 분석 고양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li> <li>· 초점집단면접 (FGI): 성별, 연령별, 참여사업을 고려한 4개 집단</li> </ul>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경험 및 인식조사	고양시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점집단면접 (FGI)</li> </ul>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고양시 자활사업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자문회의</li> </ul>

## 2. 자활사업 정책 동향

### □ 자활사업 개요

-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지원, 창업지원 중심의 자활기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까지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사업이 운영 중임
- 자활사업의 추진체계로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도 일부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참여자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등이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저소득층임
- 자활사업은 크게 자활사례관리와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구분됨
  - 자활사례관리(Gateway)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 Individual Service Plan)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 및 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됨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창업자금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 등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  
산품, 서비스 우선구매,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등임

- 자활장려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2016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가 2019년 1월에 재도입되었음

#### ○ 자산형성지원사업

-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등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하는 사업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됨

#### ○ 예산 및 사업추진 실적

- 2021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예산은 727,88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을 포함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실인원) 204,962명임. 이 중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자는 전체의 90%인 184,190명임

#### ○ 자활사업의 성과

- 지난 3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수 및 탈수급율, 자활성공률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함. 참여자는 2017년 4.1만명, 2018년 4.2만명, 2019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탈수급률은 2017년 25.1%, 2018년 27.2%, 2019년 38.8%로, 자활성공률은 2017년 34.4%, 2018년 31.1%, 2019년 42.3%로 상승함



## □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

### ○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 - 자활사업 추진현황

- 2019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161.8천명이며, 자활근로에 69.7천명, 자산형성지원사업에 92.1천명이 참여하고 있음. 자활근로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에 46.6천명, 자활기업에 2.3천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20.8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I 8.1천명, 희망키움통장 II 67.3천명, 내일키움통장 8.2천명, 청년희망통장 8.5천명이 참여함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예산(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제외)은 2019년 6,038억원(국비), 2020년 6,831억원임

####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방향성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설정, 2023년까지 자활근로 참여자 5.8만명에서 7.5만명으로 증가, 광역·전국 자활기업 41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자활성공률 41.4%(2019년)에서 45%로 향상,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통한 지표 활용을 핵심지표로 설정함
-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으로 국민취업제도와의 연계,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역할강화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제시
-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 재설계 방안으로 자활목표를 개인별로 다변화, 이에 맞는 사업의 다변화, 개인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
-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방안으로 자활기업에 마일스톤 방식 인센티브 지급, 규제 완화, 판로지원 등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성장 지원, 성공적 자활모델로서 광역·전국자활기업 육성 등 제시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23년까지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신규 4만 명까지 확대 목표, 대상자와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향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지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기능 명확화 및 인력 등 지원구조 체계화, 참여자 이력관리로 맞춤형 자활 지원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에 집중되어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자활급여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명시, 지원 방안으로 개인별 강점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사회적 역량을 제고 및 자활근로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지원 전문서비스를 연계하여 관계망 형성을 유도하고 자립욕구를 고취하며, 사회통합(삶의 질, 관계 역량 등) 관련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밝힘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2019.9)

- 2019년 9월, 자활일자리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빈곤·탈수급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지침을 개정함
- 자활사업 미참여 중인 참여대상(차상위자 등)에게 자활사업 참여 안내 조치, 게이트웨이 전담과리자 및 전문가 채용 조건 완화,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적립 방식 변경,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사용범위 확대, 자립성과금의 차등지급 허용,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조성 기준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기업 문호개방을 위해 자활기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자체 수행 사업 위탁,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확대 및 규모화 추진,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찰 가점 확대 및 수의계약제도(5천만원 이하) 신설,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2014년 8월부터 근로빈곤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목적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시행
- 유형 다변화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능 다변화는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 2020년 8월 현재 21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완료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지원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됨. 사업비 통장 및 매출액 활용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고, 센터 운영비 보조금 비율을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매년 10%씩 줄여나가게 되는데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보조금의 의존 비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화 및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부과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실태

### ○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020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3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4,299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391명임. 자활기업은 180개소가 있으며 2,192명이 종사하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 391명의 종사자가 근무, 정규직이 209명(53.5%), 비정규직이 182명(46.5%)임

### ○ 경기도 도자체 자활사업 현황

- 희망디자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재무 및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사업, 2020년에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20개소가 참여,

예산은 총640,000천원(도비 192,000천원 / 시비 448,000천원)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시군별 교육편차 해소 목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직능교육(기술·자격증취득, 창업 준비교육 등) 및 소양교육(전담인력 양성교육, 대인관계, 안전, 인문학 등) 제공,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재무설계사, 직업상담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2020년에 총 329,250천원(도비 98,775천원, 시군비 230,475천원)이 소요됨

### 3. 자활사업 사례 분석

#### □ 평택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시장진입형 6개, 사회서비스형 13개, 인턴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게이트웨이, 시간제자활근로 등 총 24개의 자활근로사업 실시, 2020년 참여인원 총 320명, 5개의 자활기업에 83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적극적인 공공입찰 참여, 시민 욕구에 기반한 사업단 개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9개의 사업단에 220명이 참여 중이며, 2개의 자활기업에 16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인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적극 협력, 참여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동아리 모임 및 자활공제협동조합 운영, 사업단별 반장(참여자 대표)제도 운영, 자활전문가 활용을 통한 종사자 업무 부담 해소, 자활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음

## □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자활사업단 8개, 시간제자활근로, 인턴형, 청년자립도전, 게이트웨이 등 12개의 자활근로사업에 278명 참여, 5개의 자활기업에 90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사회공헌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적극 참여,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지속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노력(컨설팅 및 자원조사 활동),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기개발비, 식비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시장진입형 3개, 사회서비스형 9개, 청년자립도전, 시간제자활근로, 게이트웨이 등 총 15개의 자활근로사업에 259명 참여, 3개의 자활기업에 30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자활사업 참여 인원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역 밀착형 사업 개발, 지역자활센터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자활기금의 적극 활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및 협력, 집행부와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협력, 자활성과금

의 적절한 활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도입, 유급 병가 휴가 신설 등의 노력, 종사자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자활사업 전문가 채용 등의 노력을 함

#### □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시장진입형 5개, 사회서비스형 5개, 청년자립도전, 자활도우미형, 게이트웨이 등 총 13개의 자활근로사업에 152명 참여, 8개의 자활기업에 28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부천시 지역통합돌봄사업단 운영, 참여자 의뢰 과정에서 시와 적극적 협조, 임가공사업단 참여자 수 제한, 정기적인 참여자 욕구조사 실시, 자활사업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함

#### □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시장진입형 7개, 사회서비스형 8개, 청년자립도전,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등 총 18개의 자활근로사업에 148명 참여, 8개의 자활기업에 86명이 종사하고 있음

#####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 설치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부천민들레주민협동회 운영, 자활기업과의 연계 협력 등의 노력을 함

#### □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양시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센터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정서적 자활 및 사례관리 강화
-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운영 방식 참고
- 자활기금의 적극적 사용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되 이에 대한 인원수 규정 등 제한 필요
-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 4.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실태

### □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 ○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크게 증가
  - 2010년 4,971명(1.58%) → 2015년 19,502명(1.90%) → 2021년 31,485명(2.91%)
- 자활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
  - 2010년 867명 → 2015년 1,534명 → 2021년 2,824명

#### ○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문재인 정부의 자활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고용노동부에 배치되는 참여자의 근로역량평가 상향조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급증
  - 2015년 127명 → 2018년 163명 → 2019년 223명 → 2020년 310명

- 자활사업단 배치 전 단계인 게이트웨이 참여자 급증

○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특징

- 50~60대 중고령자(68.2%), 1인 가구(60.4%)의 비중이 높음
- 조건부수급자(77.9%), 일반수급자(12.9%), 차상위(7.3%), 자활특례(1.8%)
- 근로역량평가점수(자활담당공무원 재량점수 10점을 제외한 90점 만점, 지역자활센터 자체 평가)가 평균 35.36점으로 매우 낮음

○ 고양시 자활사업 규모 및 예산

- 고양시는 자활센터 규모평가에서 2015년 기본형, 2018년 표준형, 2021년 확대형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활사업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에 있음
- 2021년 자활사업 예산은 4,428,564천원으로 자활근로사업 2,081,400천원(47%), 자활센터 운영 458,935천원(10.4%), 자산형성지원사업 1,664,249천원(37.6%), 자활장려금 및 자활교육훈련, 탈수급 유지 등 기타 사업 223,980천원(5.1%)으로 구성됨
-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연동되어 있는 자활 근로 예산이 2021년 현재 약 20억으로 경기도 내 26개 지자체 평균 예산(28억 6천만원) 및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비교하여 낮은 편

○ 고양시청 자활사업 담당 조직 및 인력

- 고양시청의 자립지원팀은 타 시의 자활업무 담당부서와 비교해 볼 때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노숙인 지원 등 자활사업 외 추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많고 담당 공무원의 경력이 다소 짧은 편
- 급증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대응 및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경력 있는 인력 추가 필요



## □ 고양시 자활센터 운영 현황

### ○ 연혁 및 조직

-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음
-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수탁·운영 중
- 자활센터 운영인력은 총 12명으로 센터장 1명, 실장 1명, 자활사업팀원 7명, 자립지원팀원 3명으로 구성
- 고양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자활사례관리사와 게이트웨이 전담자가 없고 사업비로 채용 가능한 전문가 및 자활도우미가 없음
- 인건비 재원
  - 센터장, 실장, 자활사업 담당자 총 8명: 자활센터 운영비(국비70% / 도비9% / 시비21%)
  - 자활사업담당 1명: 고양시 시비100%
  - 탈수급유지지원 담당자 1명: 경기도 사업(도비30%, 시비70%)
  - 자활기금사업 담당자 1명: 고양시 자활기금

### ○ 시설 현황 및 위치

- 사무실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75(덕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동구 장항동 등 3개의 외부 작업장이 있음
- 고양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공동 작업장과 도시락사업단 작업장은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월세 방식 운영
- 조건부수급자수가 비슷한 부천, 수원, 성남시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각각 3개, 3개, 2개소이며 수급자가 고양시의 절반인 시흥시의 경우도 2개소가 있으나 고양시는 1개소만 있음
- 고양지역자활센터 위치가 일산서구 끝에 위치하여 덕양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증가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고양시 자활사업 내용

-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입문과정, 자활연계과정(공익형\_비수익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자립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 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 청년계좌 저축)
  - 희망디자인사업, 교육훈련지원사업
- 고양시 자활기업
  - 2021년 현재 5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고용인원이 2명에서 6명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 형태가 대부분임

〈2021년 고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참여자수	
자활입문과정	자활사려관리 (GateWay)	맞춤형 자활경로를 수립하여 자활을 지원	237
	인큐베이팅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및 근로능력미약자 대상으로 교육, 공동작업을 통한 의욕고취 등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전 단계 과정	1
자활연계과정 (공익형_비수익형 사업)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미약 및 가구 내 여건으로 지속참여가 어려운 수급 참여주민 대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활동 진행(지역 내 공공서비스 진행 등)	9
	디딤돌사업단	지속적근로활동_ 사업단연계실습 및 공동작업 등을 통한 사회적응훈련 및 근로의욕 고취배양	29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돌봄사업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병원, 재가 유·무료간병지원 사업	5
	편의점사업단	기업연계형 사업의 편의점 사업 운영에 따른 점포 능력 배양 및 관련업종 개인취·창업지원 편의점(CU장항낙원점)운영	14
	도시락사업단	지역사회 내 상호연계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주민 및 지역 내 일반주민 대상 도시락 제조 및 지원, 판매	6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다운사업단	제조(볼펜)업체 연계를 통한 자활센터 내 생산 판매 일원화의 자활사업 신규모델수립 및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2
	택배사업단	우체국택배 진행에 따른 사업운영 및 배송능력 배양을 통한 개인취업 등 일자리지원	4
	슈퍼사업단	기업연계형사업으로 슈퍼사업 운영에 따른 점포능력 배양 및 관련업종 개인취·창업지원(GS THE FRESH 고양백석점운영)	16
합계		총 323명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 고양시 자활사업의 특성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2010년, (주)보광훼미리마트와 자활사업단으로 편의점 운영권을 협약 체결하여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보급
- 슈퍼사업을 기반으로 물류(슈퍼, 편의점)·유통(배송, 택배)·도시락(식재료 사용)·카페(자원 재사용) 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내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 구축
- 지역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부업지도사 민간자격증 제도 운영
- 세대 간 통합 일자리 창출

## □ 고양시 자활기금

- 고양시의 자활기금 조성액은 약 36억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조성금액이 높음
- 자활기금 이자수입의 감소와 함께 자활기금 집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
- 자활기금으로 장학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점포나 사업장 임대 용자금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계 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활기금 운용조례에 자활기금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에 있어 모호함이 있으며 장학사업과 분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
- 자활기금 원금보전 보다는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과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성 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후원 등 자활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 고양시의 자활성공률은 2016년 39.9%, 2017년 95.8%로 급상승했다가 2020년 50.8%
- 탈수급률은 2016년 49.99%에서 2017년 61.29%로 상승했다가 2018, 2019년은 35% 내외, 2020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 탈수급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높은 편임

- 취창업률은 2016년 30.3%에서 2018년 20.88%, 2019년 10.31%에서 2020년은 6.25%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참여자 성공률 산식은 계속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자활사업의 성과지표가 생계수급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 등 경제적 성과, 결과적 성과가 중심이 됨
-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는 계량화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기회주의적 전략행동을 취하면서 사업에 잘 참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활의 다른 속성인 정서, 심리, 사회적 측면과 사업 과정을 강조한 지표 수정이 필요함
- 규모별 평가에서 고양시는 2015년 기본형, 2018년 표준형, 2021년 확대형 평가를 받았음. 규모가 하락할 경우 운영비가 상당 부분 삭감되고 인력감축이 생기므로 원활한 자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규모별 평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현재 규모별 평가는 지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대평가이므로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계획수립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5. 고양시 자활사업 운영실태 및 참여자·종사자 FGI

### □ 고양시 자활사업 운영실태

- 조사방법
  - 고양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의견 등

## ○ 설문결과

- 고양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들은 행복도가 0점에서 10점 중 2.62점으로 2020년 고양시민 평균 5.68점보다 많이 낮게 나타남.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2021년 신규참여자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가 많고 참여자 중 결혼형태에 있어 이혼 및 사별한 경우가 약 49.5%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자활사업 참여 경로는 담당공무원의 권유가 39.5%로 가장 많음
- 자활센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자가 28.3%로 높게 나타남
- 자활센터 접근성과 공간협소에 대한 개선으로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
-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참여 후 상담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활근로 사업단의 다양성과 일자리 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탈수급가능성(2.53점/5점만점) 및 경제적 자립가능성(2.60점/5점만점)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
- 필요한 자활정책으로는 경제적 보상과 지속적 일자리 마련,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외 기타 개방형 의견 제시로 사업단의 다양성, 자활센터 추가설치, 개인 적성 및 역량 특성에 맞는 취창업 일자리 및 직업훈련 실시 등을 제시한 참여자가 많았으며, 이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인맞춤형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최저임금 충족,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대책, 자활사업 인식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 자활사업 참여자 FGI 분석

○ 성별, 연령, 참여 사업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중장년 여성, 중장년 남성, 청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6인씩 총 24명에 대해 FGI를 실시함

### ○ 자활기업 참여자 FGI 결과

- 자활기업 창업 과정, 운영 현황,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기업의 장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으로 범주화함
- 자활기업 대표들은 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설립했음
- 현재 자활기업 운영에 있어 판로개척, 시장에서 타업체와의 경쟁, 육체노동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업 운영의 지속 여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활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일부 참여자는 현재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 설립 전인 자활근로사업단에 머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음
-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자활기업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FGI 결과

- 자활근로 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 경험, 어려움, 자활사업의 장점,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등으로 범주화함

- 참여자들은 주로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들은 자활근로 참여 과정에서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수가 부족하고 사업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행정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점,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자활급여의 불평등성, 열악한 근무환경,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의 장점에 대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친구를 사귀는 등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업단의 근로환경이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마음이 편하다고 표현함
- 자활사업이 탈수급이나 취·창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으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 업무 관련 지식 습득, 향후 경력으로 인정되어 일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 자활사업 종사자 FGI 분석

-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5명씩 두 그룹, 실장과 센터장 한 그룹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전직원(11명)에 대해 FGI 실시함
-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FGI 결과
  -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현황(사업단,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범주화함

- 근로능력 미약자 증가 등으로 인해 편의점 사업단 등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단의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활의지가 낮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있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최근 고양시의 자활근로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계에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함. 특히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차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종사자 다수가 현재의 자활사업이 고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이 지역자활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음
- 더불어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일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종사자들은 자활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사회통합이 중요하며, 자활사업이 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시사점

###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참여주민의 행복도 증진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주민들이 본인의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개별 자활역량에 대한 재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자활 가능성 및 방법을 제시·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자활근로 사업단의 다양성과 일자리 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므로 많은 게이트웨이 인원의 사업단 배치와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단 확대가 필요함

#### ○ 자활사업 참여자·종사자 FGI 분석 결과 시사점

- 자활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지원(한시적 인건비 지원, 공공부문 참여 기회 제공)확대가 필요,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검토 및 자활기업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신규 아이템 개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참여자 입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사업단 내 또는 사업단 간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자활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모임 등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센터 추가 설치 등 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센터와 시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안내가 필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 참여 의뢰 전, 근로역량평가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뢰 후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건유예처리 등이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이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6.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 고양시 자활사업의 기본 방향

-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미약한자에게는 근로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이중적(Two-Track) 복지정책 추진
- 자활사업 참여자가 교육, 훈련 등 취업역량강화 과정, 자활계획 수립과정, 사업단의 선택 과정,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성’이 강조되어야 함

### □ 자활사업단 다양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수요처 발굴(신규 아이템 개발) 및 자활사업단 확대
- 고양시 특화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 확대
  - 적극적인 공공자원활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수행

### □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

- 정서적 자활 강화
- 사례관리 강화
- 동아리 활동, 자활공제협동조합 결성 등 사회적 관계 강화

### □ 자활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지역자활센터 인력 효율적 활용
  - 자활사업 전문가 채용
  - 자활도우미 활용
  - 부업지도사 양성
-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 거버넌스 강화

- 고양시청 자립지원과 역할 강화
-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 자활기금 적극적 활용

- 자활기금 운용 조례 개정: 장학금 지원사업과 분리, 용도 구체화
- 자활기금 적극적 활용 및 확보

#### □ 자활기업 육성

- 자활기금 및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적극적 활용
- 자활기업 협의체 구축

#### □ 자활사업 인프라 점검 및 확충

- 유형변환(사회적협동조합) 검토
-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치

### <고양시 자활사업 로드맵>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workfare)정책이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996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을 제도화하였다. 자활사업 초기에는 자활근로 위주였으나 201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과 민간시장의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2014년에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탈빈곤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활사업이 확대·발전되고 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자활 일자리 5만 7천명, 예비자활 기업 1,800개, 자활성공률 40%까지 확대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을 발표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더해지면서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대상자는 2015년 127명에서 2018년 163명, 2020년 31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양시 내부자료, 2021).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준 중위소득산출방식 개편, 정부의 실업자나 빈곤층에 대한 재정 투입의 확대와 함께 자활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자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어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인력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중심 사업으로 시행되던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복지사업으로 재편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능력 미약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규모

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특성상 자활역량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근로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지만 정부 정책 방향성은 취·창업과 같은 경제적 성과목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과 정책목표가 부조화된 면이 있다. 현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자활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하였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 취·창업 알선 등 통합적 지원으로 효과적인 자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대상자 변화, 자활근로사업 내용,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금 활용, 인력과 공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양시의 자활사업 여건 및 성과 분석,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타 지역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자활사업 개요,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 경기도 자활사업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평택시 등의 자활사업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및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현황, 고양시 자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자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현황(사업단,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 등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자활사업 기본 방향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 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자활사업 관련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 1) 문헌연구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자활사업 정책 동향과 경기도 자활사업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 2) 통계분석

보건복지부 및 고양시 자활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의 변화,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변화,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타지자체 자활사업 사례 연구

경기광역자활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자활센터, 인천서구자활센터, 부천소사자활센터, 부천나눔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진 인터뷰 및 자료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 4) 고양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설문조사

고양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232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5) 고양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고양시 자활기업 종사자 6명과 성별, 연령, 참여사업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18명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 6)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현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7) 전문가 자문회의

자활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 자활사업 공무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 진행 방향, 설문조사 및 FGI 문항 구성, 자활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8) 자활사업 관련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회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청 자립지원과 공무원과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과 대면, 서면 회의를 통하여 고양시의 자활사업 진행의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p>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p>	<p>자활사업 개요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 경기도 자활사업 정책동향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통계분석</li> </ul>
<p>지자체 자활사업 사례연구</p>	<p>경기광역자활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진 인터뷰</li> <li>• 관련 자료 분석</li> </ul>
<p>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분석</p>	<p>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분석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분석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현황 분석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통계분석</li> </ul>
<p>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p>	<p>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실태 분석 고양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li> <li>• 초점집단면접 (FGI): 성별, 연령별, 참여사업을 고려한 4개 집단</li> </ul>
<p>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경험 및 인식조사</p>	<p>고양시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점집단면접 (FGI)</li> </ul>
<p>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p>	<p>고양시 자활사업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자문 회의</li> </ul>

## 제 2 장

# 자활사업 정책 동향

제1절 자활사업 개요

제2절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

제3절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실태



## 제절 자활사업 개요

### 1. 자활사업의 목적과 도입의 의미

자활(自活)이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지원, 창업지원 중심의 자활기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이 운영 중이다.

자활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제외한 직접일자리 제공 중심의 사업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21)과 사업 목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자활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구조 조정으로 급증한 실업 빈곤가구에 최저 수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전통적 공공부조의 수준을 넘어 안정된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과 함께 제도화 되었으며(김준현, 2012),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0년 후인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만족 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의 도입은 국가가 저소득층을 단순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갖는 책임

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sup>1)</sup>; 보건복지부d, 2020, 2020년 자활사업 안내, p. 2).

## 2. 추진체계 및 역할

자활사업의 추진체계로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자활인프라로 볼 수 있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도 일부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자활정책·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가 자활사업을 총괄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읍·면·동의 주요 역할은 조건부수급자를 관리하는 것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관리의 주체이며,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각 추진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은 아래 [그림2-1]과 같다.

자활인프라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7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업·창업에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광역자활센터는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

<sup>1)</sup>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http://www.jahwal.or.kr/?Page=p03c01>, 접속일: 202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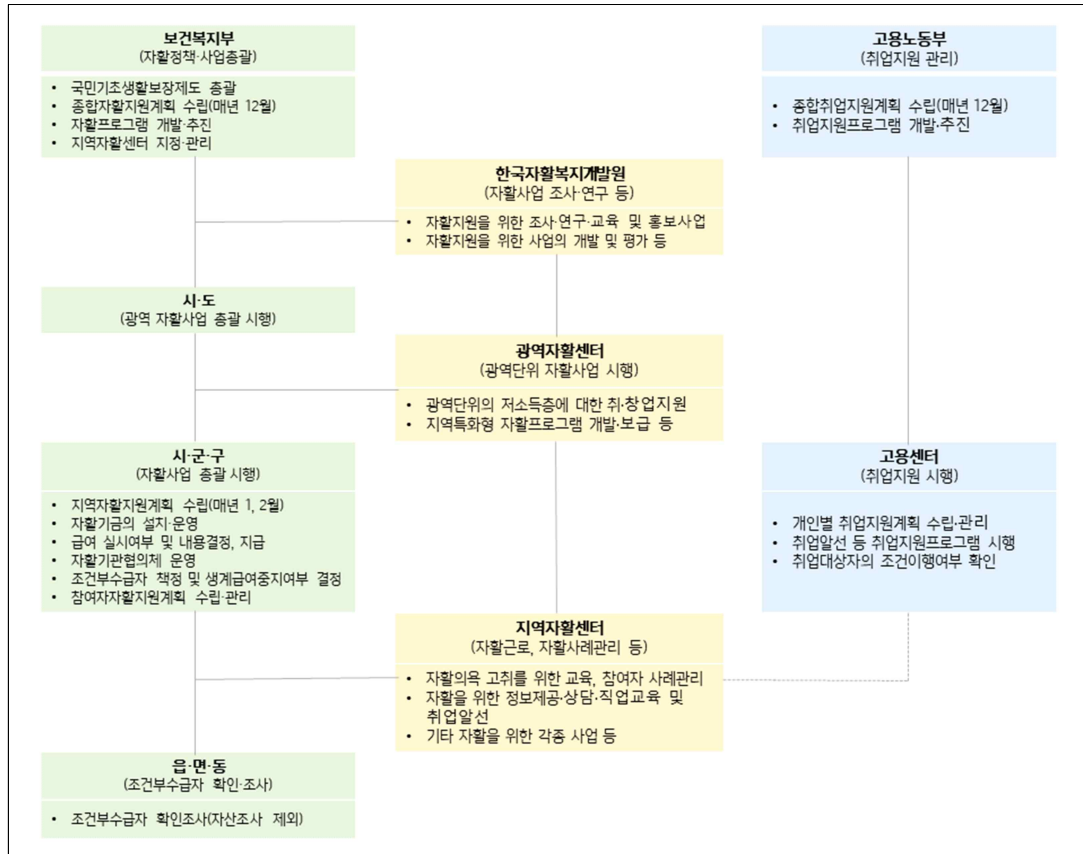


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화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2004년 광역자활센터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04년 인천, 대구, 경기 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2008년 부산, 강원, 전북 광역자활센터, 2010년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광역자활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 광주, 충북, 경남, 2014년 대전, 충남, 전남, 경북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 울산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여 2021년 3월 현재 전국에 총 15개의 광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시·도 단위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하며,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 개발 지원,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시·도 단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 운영,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집행,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기초자치단체(226개)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21년 3월 현재 250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까지 70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며, 2001년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설치 확대로 현재는 전국에 250개소가 운영 중이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12개 시·군·구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사례관리,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담당한다.

[그림 2-1] 추진체계 및 추진 주체별 역할



<자료> 보건복지부, 「2020 자활사업안내」, 2020, p. 2~3.

###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이때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근

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한다(보건복지부, 2021).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을 부과받은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된다. 조건부수급자 이외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가진다. 2021년 지침 개정 시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존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중 희망자 참여 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유형별 세부 지원대상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지원내용

자활사업의 지원내용은 ‘단계별 발전 전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자활사업의 내용은 크게 자활기업·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대상 중심의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구분된다.

2018년 2월부터는 취업우선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고(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80점 미만인 경우 자활사업에 배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다시 대상자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분되며,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근무 여건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2021년 기준 월소득 최대 금액은 1,376,7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 p. 64).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등 참여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한다. 자활사업 주요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 자활사업 주요 자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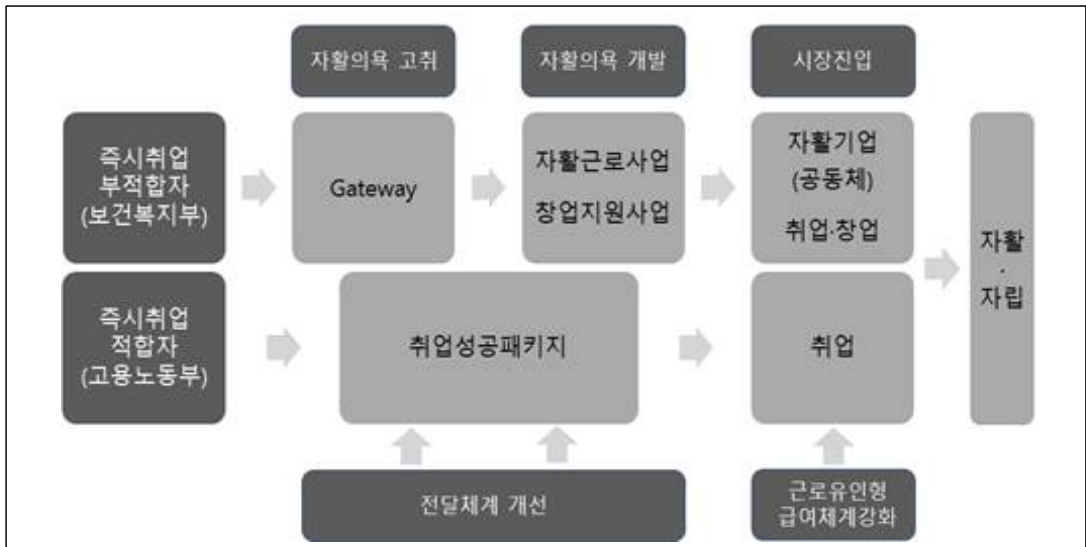
자활사업종류		사업내용 및 표준소득액(월)	실시기관 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보건 복지 부 자활 사업	자활 근로	시장 진입형	지역자활 센터, 민간위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프로그램 참 여욕구가 높은자</li> <li>•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자</li> </ul>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자 활역량평 가 80점 미만)	
		인턴· 도우미형				<p>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시설 및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p> <p>1,376,700원/1,192,360원</p>
		사회 서비스형				<p>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 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 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 준 비</p> <p>1,192,360원</p>
		근로 유지형	<p>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지 자체, 직접운영, 1일 5시간, 주5일 근무)</p> <p>656,240원</p>	시·군·구, 지역자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에 참여 가능한 자</li> <li>• 간병·양육 등 가규어건 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li> </ul>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45 점 미만)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 아 노동시장에서의 취 업이 가능한 자</li> </ul>	집중취업 지원 대상자(80 점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1.12.) 붙임자료와 보건복지부a(2020, p. 44), 보건복지부(2021) 재구성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해당절에서 살펴볼 예정임

자활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① Gateway / 자활사례관리 → ② 자활근로 / 취업지원 → ③ 자활기업 / 직업알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sup>a</sup>, 2020).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 자활사업 단계별 지원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백서」, 2020, p.45.

## 4. 자활사업 프로그램<sup>2)</sup>

### 1) 자활사례관리

#### (1) 자활사례관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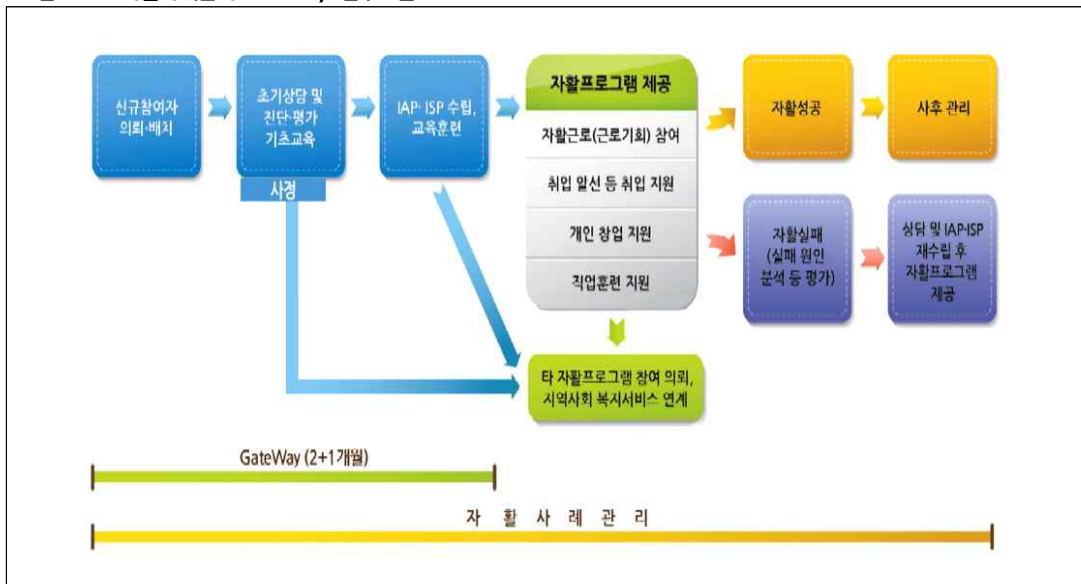
자활사례관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 Individual Service Plan)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 및 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의 일종이다. 2009년에 도입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이 2013년부터 'Gateway'로 명칭을 변경하

<sup>2)</sup> 2021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여 자활사례관리와 통합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 전 진입과정에서 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개인별 자립 경로(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한다. Gateway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참여자당 Gateway 과정 참여 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 동안 총 3회 이내로 제한된다.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참여자의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Gateway 전담관리자, 시·군·구 자활담당 공무원, 통합조사관리 업무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센터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지역사회 내·외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과 상시 업무연계를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2-3]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49.

사례관리사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1회 이상 내부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자의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이 이루어진다. 자활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에는 내부회의를 거쳐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할 수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 등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외부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지역 내 관련 사례관리 담당 기관에서 참석하기도 한다.

## (2) 자활사례관리 추진체계

2021년 기준, 울산, 충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90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사례관리를 운영 중에 있다. 사례관리팀은 원칙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이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며,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담당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활사례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업무 수행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사례관리사는 2021년 1월 기준 전국 총 90개 센터에 각 1명씩 90명이 배치되어 있고, Gateway 전담관리자의 경우, 전국 총 148개 센터에 148명(2020년 11월 기준), 통장사례관리사는 전국 총 142개 센터에 145명이 배치되어 있다(2020년 11월 기준).

[표 2-2]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관련 업무 수행 인력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자활사례관리사 (개소수/인원)	12/12	11/11	5/5	6/6	8/8	4/4	0/0	16/16
Gateway 전담관리사 (개소수/인원)	27/27	16/16	9/9	11/11	9/9	4/4	2/2	24/24
통장사례관리사 (개소수/인원)	18/18	15/15	8/8	8/10	7/7	5/5	3/3	25/2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활사례관리사 (개소수/인원)	3/3	0/0	1/1	7/7	3/3	6/6	7/7	1/1
Gateway 전담관리사 (개소수/인원)	9/9	1/1	3/3	5/5	2/2	10/10	14/14	2/2
통장사례관리사 (개소수/인원)	6/7	4/4	6/6	11/11	6/6	9/9	8/8	3/3

〈자료〉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51, 재구성

## 2)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사업규모 및 시행방법을 살펴보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30% 미만으로 운영하며,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자의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자활근로의 시행 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에는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를 적용한다.

2021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시장진입형의 경우 표준소득액이 월 1,376,700원, 사회서비스형은 1,192,360원(1일 8시간, 주 5일 기준)이며,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기준 월 656,240원이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주휴시간 35시간 포함) 1,822,480원으로 시장진입형 월 표준소득액은 최저임금 월급 수준의 75.5%이다.

[표 2-3] 2021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56,950/60,950	49,860/53,860	29,240
급여단가	52,950/56,950	45,860/49,860	25,24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376,700	1,192,360	656,24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64.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을 기본으로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인 예비자활기업,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만 18세~만 39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각각의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참여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4]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참여대상자

유형	사업내용	참여대상자
예비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유형	사업내용	참여대상자
	<p>사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기관의 매출정산방식(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참여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li> <li>※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출, 무료집수리, 무료빨래방 등 사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li> </ul>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sup>3)</sup>
시간제 자활근로	<p>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p> <p>※ 일 4시간 근무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소득액(월): 시장진입형 688,480원, 사회서비스형 596,180원, 별도사업단: 688,480원</li> </ul>	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중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사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개인·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자로 배정한 자(조건부수급자는 전일제(기준)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 단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시간제 근무 배정)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p>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p> <p>※ 1일 8시간, 주 5일 참여</p>	만 18세~만 39세의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
광역 자활근로사업단	<p>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p> <p>※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거주 사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를 광역단위로 추진</p>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0 자활사업안내», 2021, p.80~103.

3) 대상자 선정시 1)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2)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참여가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사업실시 결과 발생한 물품판매대금, 용역수입금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는 중앙자산키움펀드로서 중앙으로 조성하여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 지원에 활용하며, 일부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서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한다.

###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자활기업의 설립요건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동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자활기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8월 2일,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2018년 7월 24일에는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sup>4)</sup>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자활기업 인정을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인정지원 및 인정 후 관리를 위해, 자활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시기관을

필요한 자, 3)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지정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중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창업자금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 등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서비스 우선구매,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등이 있다. 보장기관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자활기업으로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기간 중 수익금 발생이 원활하여 지원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인건비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수익성, 재정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활기업은 사업실시 지역이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나 자활사업의 확대를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 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영역 단위의 홍보·영업·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해지고, 자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있다. 광역자활기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와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전국자활기업도 존재한다. 전국자활기업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자활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5] 자활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자원
자활기금 창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li> <li>※ 2/3이상(100% 이내), 1/2이상(70% 이내), 1/2미만(50% 이내)</li> <li>•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li> </ul>	기 적립 창업자금/중앙 자산기움펀드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사업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li> <li>•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li> </ul>	자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 용자보증 지원</li> </ul>	중앙자산 키움펀드
전세점포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li> <li>•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li> </ul>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어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어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li> <li>• 이차보전을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어이자율</li> </ul>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li> </ul>	지역자활사업지 원비(활성화지 원금)/자활기금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까지</li> <li>•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li> </ul>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지원</li> <li>※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li> </ul>	자활근로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li> <li>※ 초기 6개월 : 100%, 이후 6개월 : 50%</li> </ul>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중 활성화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 부담 4대 보험료 포함)</li> <li>※ 제한조건 :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li> </ul>	자활기금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li> </ul>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li> <li>•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li> </ul>	중앙자산키움 펀드, 자활기금
우수자활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물 입점 지원 등</li> </ul>	중앙자산키움 펀드, 자활기금
코로나19 피해 자활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 운영지원 등</li> </ul>	자활기금
국·공유지 우선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li> </ul>	지자체 간접지원
사업우선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li> </ul>	
생산품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li> </ul>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127-128.

#### 4) 자활장려금 사업

자활장려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가 2019년 1월에 재도입되었다(박은선·박은희,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자활장려금은 소득인정액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공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금액으로 지급된다. 자활장려금의 대상은 전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며, 자활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 자활근로 소득인정액 반영 시점에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범 자활근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및 자활기업(근로유지형, Gateway 제외) 참여자이다. 차상위 계층과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자로 구분된다.

#### 5)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의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이 2015년 고용노동부 이관되면서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2009년 부산, 경기지역 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2013년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12천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을 지원하였다. 기초상담, 맞춤형 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c, 2014, p. i). 그러나 자활사업 도입 이후 비용 대비 낮은 효과성과 사업의 유사성 등을 들어 2015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통합되었다(메디컬투데이, 2015.1.29.일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9192>, 접속일: 2021.2.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대상에 따라 I, II로 구분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의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9세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만 15세~24세),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다.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가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II의 지원대상자 중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18세~34세 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서,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 영세 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이다.

취업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진단·경로 설정 단계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다. 2단계는 의욕·능력 증진 단계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해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15~50% 자부담이 발생한다(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는 집중 취업알선단계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단계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1단계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2단계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 284,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하며,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접속일: 2021.2.2.).



[표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수당) 지급 요약표

구분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참여 수당	1단계(1주~ 2개월)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센터 3회 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 (최소 21일 이상)</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추가(10만원)</li> <li>※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참여시 추가 10만원</li> <li>※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시 추가 10만원</li> <li>※ 단기·취업특강 2회 참여시 추가(5만원)</li> <li>※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 참여시 추가 5만원</li> </ul>	15만원(기본) + 10만원 or 5만원 ⇒ 최대 25만원
		II 유형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3회 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최소 21일 이상)</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 추가(5만원)</li> <li>• (예외) 취업역량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인 청년층, 고교재학생의 경우</li> <li>⇒ 최소 1주 이상, 상담 2회로 단축 가능</li> </ul>	15만원(기본) 20만원(지원한도)
		II 유형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3회 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최소 21일 이상)</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추가(5만원)</li> <li>※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시 추가 5만원</li> <li>※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참여시 추가 5만원</li> <li>※ 중소기업탐방(2일 이상) 참여시 추가 3만원</li> </ul>	15만원(기본) + 5만원 or 3만원 ⇒ 최대 20만원
훈련 지원 수당	2단계 (최대 8개월)	I 유형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훈련 출석일수가 단위기간 총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li> <li>• 지원기간 : 최초 훈련개시일로부터 6개월</li> <li>• 지급단위기간 : 1개월 단위</li> <li>• 지급금액 : 18,000원(1일)</li> </ul>	최대 월284천원(지원한도)
참여 실비 수당	3단계 (3개월)	I 유형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취업상담·알선을 위해 센터·위탁기관 방문 시 월 1회 20,000원 지급(총 3회)</li> <li>- 기간만료 마지막 상담일 이후 지급</li> <li>※ 3단계 초기상담일 제외, 취업시 취업전 상담 일에 대해 지급</li> </ul>	최대 6만원(지원한도)
취업 (창업) 성공 수당	1단계 AIP수립이 후-사후관 리 3개월전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요건) ①주30시간이상 ②고용보험 취득된 취업자, ③근속기간(3·6·12개월)</li> <li>• (창업요건) ①사업자등록, ②사업장 임대차계약, ③매출액 발생</li> <li>※ (유형업종, 인터넷창업, 무점포창업) 제외</li> <li>- 지급시기 : 4·7·13개월</li> </ul>	총150만원 3개월(30만원) 6개월(40만원) 12개월(8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20, p. 155

## (2)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의뢰자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는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의뢰자 운영지

침'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지 및 취업가능성이 높은 빈곤계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실시하고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등을 안내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자활역량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게 된다.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1단계 IAP 수립 전 진단회의를 실시하여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원활한 수급자 관리 및 이행통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의 업무협조, 진단회의 운영 등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전담반을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로 의뢰되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1회차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취업장애요인 등 개인특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2회차에는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자활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활경로 설정 시에는 취업역량평가 점수 및 초기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즉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고,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취업역량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진단회의 개최 후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재의뢰 또는 중단처리되어 이관된 참여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배치한다. 초기상담 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수립일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 6)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경험·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취업경험이 있는 만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취업경험 미충족자, 중위소득 50~120% 이하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집중된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구직활동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다. 기존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써 운영할 계획이다(워크넷,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접속일: 2021.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제공 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I 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의 구직자로 소득·재산 요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에 부합하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한 자이다.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요건심사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들 중 선발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층(18~34세)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까지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그 외 연령대는 취업경험 이외 요건심사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II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의미하며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5~69세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sup>5)</sup>,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저소득층 그룹에 해당하며, 18~34세 해당하는 청년그룹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으며, 35~69세의 중장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해당된다.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되며,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사후관리(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등이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하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서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대한민국

<sup>5)</sup>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381>, 위크넷,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접속일: 2021.2.3).

## 7)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등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저소득층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장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있으며 통장별로 가입대상 및 저축액,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이며, 3년 이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평균 33.4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3년간 저축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본인 저축액과 1:1 매칭 지원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 저축액은 월 5/10/20만원이고, 3년 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또는 탈수급을 조건으로 본인 저축액과 1:1 매칭 지원하고 있다(20만원 저축시 0.5 매칭).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3년 이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 평균 30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이다. 의무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본인 저축액과 1:3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복지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1>, 접속일: 2021.2.10).

[표 2-7]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사업내용

구분	가입대상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 내용	추가 지원액	지원혜택 (3년 기준)	지원조건
희망 키움 통장 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월 5/10만원 (2가지 중 택1)	가구 소득에 비례 월평균 35.1만원, 최대 64.6만원 매칭	민간매칭금(본 인 저축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월 2만원	최대 2,757만원 *본인 저축액, 민간매칭 금 포함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 급여)
희망 키움 통장 II	일하는 주거·교육수 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	최대 720만원 *민간 저축액 포함	3년간 저축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자립역량강 화교육 4회, 사례관리 6회 이수)
내일 키움 통장	자활근로사 업 참여자	월 5/10/20만원 (3가지 중 택1)	본인 저축액 1:1 매칭 *20만원 저축시 0.5매칭	①내일키움장려 금 *시장진입형: 본인 저축액의 1:1 *내일키움수익금 사 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 15만원)	최대 2,34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3년 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또는 탈수급 (대학교 입학학, 국가 자격증 취득, 자립 역량강화교육 4회, 사례관리 6회 이수)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만 15~39세)	없음 (근로소득공 제금 10만원 자동매칭)	월 평균 30만원 매칭	민간매칭금(본 인 저축 시 1:1 추가지원) *월 최대2만원	최대 2,314만원 *근로소득공 제금 360만 원 포함 *민간매칭금 포함	3년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청년 저축 계좌	일하는 주거·교육수 급 및 차상위 청년 (만 15~39세)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1:3 매칭	-	최대 1,44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의무교육 이수(자립역량강화 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활사업 제도화 20주년, 자산형성지원사업 10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2020.11.12.;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https://wonmijahwal.modoo.at/?link=59qpgjkk>), 접속일: 2021.3.15.

이상에서 기술한 자활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실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2-8] 자활사업 주요 프로그램

구분	직접 제공 일자리	자신형성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자활근로	희망키움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취업성공패키지 I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차상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 희망자)	·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 자활사업단 2,790개('19년) * 매출액 924억원('19년)	·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매달 일정 금액 저축 시 탈수급 등을 요건으로 정부지원금 매칭적립	· 진단의욕제고 → 직업능력 개발 → 취업알선 단계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9년 실적	4만 9천명	9.2만명	10만 3천명
'20년 목표	5만 8천명(예산상 인원)	8만 6천명	20만명
인센티브	· 자립성과금 최대70만원/월 · 내일키움통장 지원 · 자활기업 초기창업 지원	·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3인 가구 기준)	· 참여수당 월 25~40만원,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
인프라	· 지역자활센터 250개(시·군·구 단위 / 지정)	·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고용센터 102개소 · 민간위탁기관 417개소
시작년도	2000년	2010년	2009년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연구진이 내용 추가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 참여자 46,640명 중 25,183명(53.9%)이 가입

## 5. 예산 및 사업추진 실적

2021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예산은 727,88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표 2-9] 2021년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예산 (A)	'21예산 (B)	증감	비율	반영내역
			(B-A)	%	
자립지원과(계)	710,356	727,889	17,547	2.5	
1. 자활사업(소계)	604,774	620,031	15,257	2.5	
자활근로	507,810	518,449	10,639	2.1	· 대상자 58,000명 · 인건비 1.5% 인상
자활장려금	7,093	7,944	851	12.0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65,586	68,976	3,390	5.2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596	10,032	2,436	32.0	
- 광역자활센터 운영	5,468	5,506	38	0.7	· 인건비 0.9% 인상
- 지역자활센터 운영	52,522	53,438	916	1.7	· 인건비 1.9% 인상
자활사업관리	265	265	-	-	
내일키움일자리	24,020	24,397	377	1.6	· 대상자 5,000명(2개월)
2.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2	8	△14	△36.3	
3. 희망키움통장(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0,161	91,276	1,115	1.2	· 희망키움통장 1(5천가구) · 희망키움통장 2(35천가구) · 내일키움통장(10천명) · 청년희망키움통장(5천명) · 청년저축계좌(13천명)
4.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3,659	14,818	1,159	8.5	
5. 자활사례관리(지역복지과-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 내역사업으로 통합('18~))	(1,740)	(1,756)	(16)	(0.9)	· 인건비 0.9%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7.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실인원)는 204,962명이다. 이 중 보건복지



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84,190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조건부수급자가 41,132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266명이다.

[표 2-10]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19. 12. 기준, 단위: 명)

구분	자활사업 (계)	보건복지부 (소계)	자활 근로	자활 기업	희망키 움통장Ⅰ	희망키 움통장Ⅱ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총계(A+B) (실인원)	204,962 (100%)	184,190 (89.9%)	46,640 (22.8%)	2,263 (1.1%)	44,573 (21.7%)	90,714 (44.3%)	20,772 (10.1%)
기초수급자	계(A)	202,696	45,785	2,239	44,573	90,714	19,385
생계	조건부	41,132	23,715	685	-	-	16,732
	일반	11,433	8,475	467	-	-	2,491
	의료·주거·교육	7,286	6,488	671	-	-	127
	자활급여특례자	203	182	4	-	-	17
	시설수급자	44,573	-	-	44,573	-	-
	취창업수급자	98,069	6,925	412	-	90,714	18
차상위자(B)	2,266	879	855	24	-	-	1,387

주 : 누계는 자활사업 연간 실 참여 인원, 지자체 취합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a, 「2019년 보건복지백서」, 2020, p. 45, 원자료에서 계(A) 수정함

## 6. 자활사업의 성과

지난 3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수 및 탈수급율, 자활성공률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참여자는 2017년 4.1만명, 2018년 4.2만명, 2019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탈수급률은 2017년 25.1%, 2018년 27.2%, 2019년 38.8%로, 자활성공률은 2017년 34.4%, 2018년 31.1%, 2019년 42.3%로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급여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 한국자활기업협회를 출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0년에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탈수급 및 근로유인 제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의 탈수급률은 63.9%로 전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률 32.9%의 1.94배에 달하며, 이 중 수급자로 다시 하락하는 비율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 지원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2019년 1월)하였으며, 202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대철 외(2018)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위해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항목을 참여자의 자살 및 우울증 사회비용 감소,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탈수급으로 인한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유발효과로 선정하여 이들의 총합을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폐지 시 평균 40%(추정치)가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 전 후 자살시도율은 평균 15%에서 평균 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연간 최소치 약 30억원에서 최대 112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우울장애 발병률은 참여 전후 15%에서 2%로 추정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연간 8,540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폐지 시 평균 40%가 근로를 자제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 활동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절감액은 연간 3.3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경제활동을 통한 참여자의 탈수급 전환율은 평균 20%로 추정하였으며, 탈수급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예산 감소분은 연간 최소 84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참여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자활근로사업에서 28억, 자활기업에서 134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252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합산한 결과,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추정치는 최소 약 282억원, 최대 48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자살 감소 및 우울증 위험군 감소 등 사회적 편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표 2-11] 2017년 서울 자활사업 운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

(단위 : 억 원)

편익항목	최소	최대
자살 감소의 사회경제적 편익	43.5	109.1
우울증 위험군 감소의 사회경제적 편익	40.8	66.7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편익	5.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편익	18.0	57.5
자활기업 참여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편익	85.1	159.6
합계	192.5	398.1

〈출처〉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 자활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2021, p. 117.

## 제2절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

현재 자활사업은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일하는 방식을 비롯한 경제, 산업,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급격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보건위기에서 노동 위기로 그리고 경제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제도 구축의 가속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상병수당, 돌봄서비스 재편) 등 자활지원 체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내부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거나 정체되면서 성장보다는 재편에 대한 화두가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서광국, 2021).

본 절에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과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21~2023) 등을 바탕으로 최근 중앙정부 자활사업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sup>6)</sup>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자활사업을 제도화하였다. 동법 제15조에서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를 규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직·폐업으로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였고, 탈빈곤 지원정책으로서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강조하였다.

6)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8.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이후 자활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 자활근로 위주에서 자립 및 취업·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사업이 다양화·확대되었다. 2009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2010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도입되었고, 민간시장 취업지원 강화 등 자활사업 확대 및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01년 2만명(국비 기준 예산: 809억원)에 불과하였던 자활근로 참여자는 2016년 자활근로 및 희망키움통장 등에 15.5만명(4,597억원)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활근로에 4.7만명, 희망키움통장 등에 13.5만명 등 20.5만명(6,038억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는 국정과제로서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의 일환으로 자활일자리를 확대하고 급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후 예방적·적극적 빈곤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간 정합성을 높여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을 동반 수립하였다.

최근 경기 침체 가속화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저소득수급자층 등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전망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 대상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전례없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따라 적극적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대책이 확대 추진 중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비 22.6조가 투입되어 사회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이 추진 중이며, 특히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양 제도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반복에 따라 온라인·비대면·방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활사업 영역(돌봄 등 대면서비스, 집합적 제조업)의 충격 완화 및 미래적응형 자활인프라 변화가 필요하다. 종사자 및 참여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 생산품의 온라인 쇼핑 판로 강화, 온오프 융합 교육지원체계 등이 요구된다. 방역 기반 생활의 일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소방역시장을 자활사업에서 선점, 도약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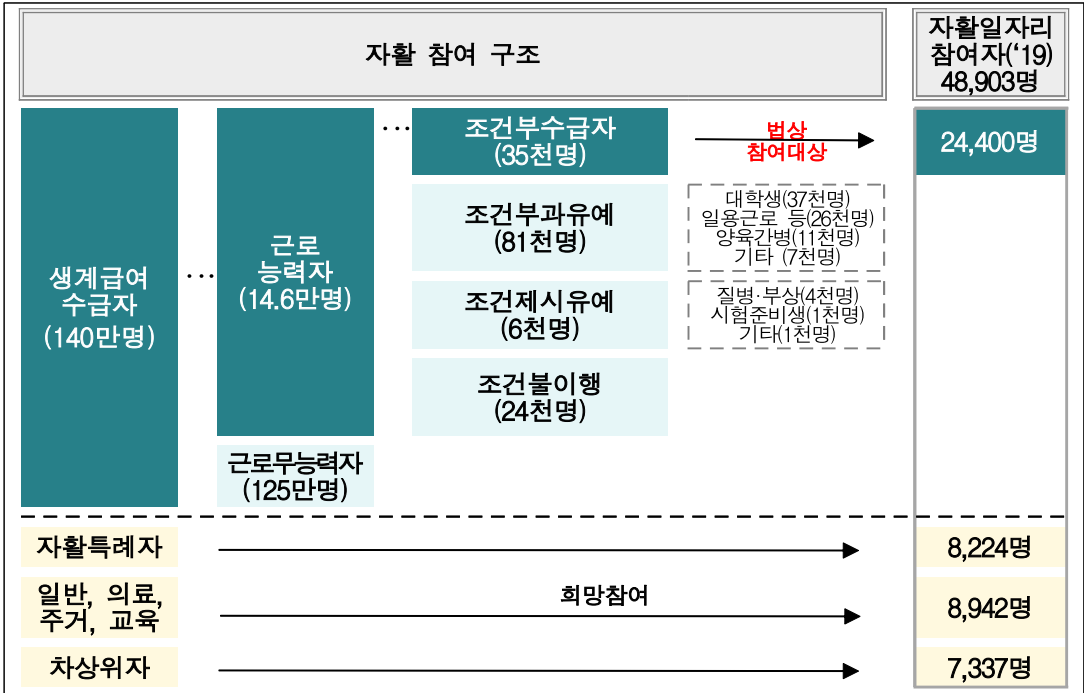
자활사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자활 및 근로역량이 낮은 참여자들이 주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탈수급이라는 단일, 성과 중심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자활참여자가 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차상위 참여자의 비중이 정체 상태이다. 또한 한 부모가구, 장애인 등 취·창업 탈수급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1) 자활사업 추진현황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자립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및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는 48,903명이며, 전체 자활사업(자활근로+자산형성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16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는 3.5만명으로 근로능력수급자(14.6만명)의 약 24%에 해당한다.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038억원(국비), 2020년은 6,831억원이다(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제외). 주요 프로그램은 자활근로지원(직접일자리), 자활기업 운영(창업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취업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만 포함)을 살펴보면 전국 생계급여 수급자 140만명 중 근로능력자는 14.6만명(10.4%)이며, 이들 중 조건부과유예(81천명), 조건제시 유예자(6천명), 조건불이행(24천명)을 제외한 조건부수급자는 35천명이다. 조건부수급자 35천명 중 자활근로 참여자는 24,400명(69.7%)이며,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닌 자활특례자 8,224명, 일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8,942명, 차상위자 7,337명이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48,90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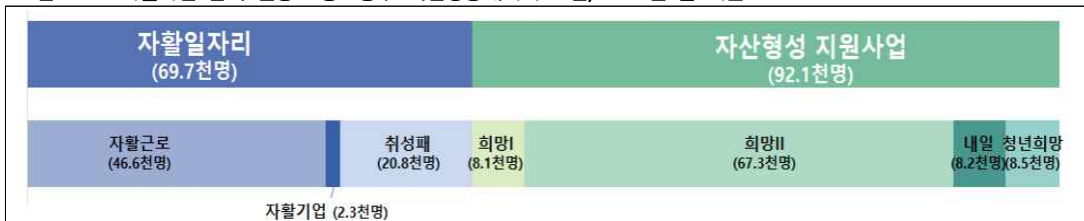
[그림 2-4] 자활사업 참여 구조(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만 포함, 2019년 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b,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1.8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에 69.7천명, 자산형성지원사업에 92.1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근로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에 46.6천명, 자활기업에 2.3천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20.8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희망키움통장 I에 8.1천명, 희망키움통장 II에 67.3천명, 내일키움통장 8.2천명, 청년희망통장에 8.5천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자활사업 참여 현황(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포함, 2019년 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b,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자활사업 인프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하였고 자활연수원과 통합하였다. 이외에 시도별로 광역자활센터 15개가 있고,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50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대상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 자산형성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자활기금으로 2019년 말 3,984억원을 보유·운영 중이다. 중앙자산키움펀드는 자산형성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활기업 창업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조성·운용 중이다. 2019년 말 기준 1,164억원을 보유 중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수급자 1/5 이상)일 때, 창업자금·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자활기업은 광역·전국지역 자활기업이 1,176개 운영 중이며 15,961명이 근무하고 있다<sup>7)</sup>.

## 2)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증가 및 빈곤층 자립여건 악화로 빈곤 노출 위험도 증가를 예상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추진 과제로 자활근로 일자리 규모 확대 및 질 향상, 자활기업 경쟁력 제고,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자활근로 참여자는 2017년 4.1만명, 2018년 4.2만명, 2019년 4.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근로역량·가구환경을 반영하여 자활근로 다변화를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2018년 1월), 청년자립지원사업단(2018년 6월) 등이 도입되었다. 탈수급률은 38.8%로 2017년 25.1%, 2018년 27.2%에서 상승하였으며, 자활성공률 역시 42.3%로 2017년 34.4%, 2018년 31.1%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의지 촉진을 위해 매년 자활급여를 인상한 결과 시장진입형의 경우 최저임금대비 급여율이 크게 제고되었으며(2017년 75.4% → 2020년 81.7%),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

<sup>7)</sup> 전국자활기업 3개(8,165명), 광역자활기업 37개(1,160명), 지역자활기업 1,136개(6,636명)



금을 지급하였다. 자활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년), 코레일(2019년 3월), LH 수선유지급여(2020년) 등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한국자활기업협회 출범(2018년), 법 개정을 통한 자활기금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9년 지역 자활기업 매출액은 3,074억으로 2017년(1,602억) 대비 1.92배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15,961명으로 2017년 대비(1.4만명) 1.13배 증가하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수급자차상위층의 탈수급 및 근로유인 제고 효과가 입증되었다.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의 탈수급률은 63.9%로 전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률인 32.9%의 1.94배에 달하며, 이 중 수급자로 다시 하락하는 비율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후 2020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통합, 광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등 자활인프라 위탁법인을 일원화하여 정책 비효율을 해소하였다.

추진상 한계점을 살펴보면 참여대상의 역량 저하로 자활사업의 목표인 탈수급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자의 참여가 많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역량이 낮은 수급자 위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결과 탈수급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장기 수급자가 상존하며, 탈수급 후 재참여가 증가하는 등 수급 만성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탈수급 후 자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는 2017년 583명에서 2019년 99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와 생계급여를 포기하는 조건불이행자가 증가하였고, 자활근로 사업단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자활기업 창업 인센티브가 감소하였다.

또 다른 한계점은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5개 통장사업 간 성격은 유사하나 대상, 매칭재원, 매칭비율, 지원조건 등이 각기 달라 설계구조가 복잡하여 서비스 제공자(지자체)와 이용자(통장가입 당사자)의 이해도가 낮아 자립지원의 한 경로로서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자활기업을 광역·전국 자활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업 모델 부재로 영세한 자활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자활기업의 성장이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자활기업은 개인사업자가 58.7%(690개)로 이 중 5인 미만 기업이 90.3%(623개)를 차지하며, 광역자활기업은 2017년 대비 5개소 증가에 그쳤으며, 전국자활기업은 신규 창업 없이 2018년 이후 3개소가 유지 중이다. 마

지막으로 자활인프라(개발원-광역-지역)와 관련하여 각 주체 간 역할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종사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변화 유도·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자활사업 종료 이후 참여자의 수급이나 취·창업 이력 파악이 어려워 자활 재진입시 경력·특성을 고려한 자립경로 설계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6] 조건불이행자 증가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 3)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방향성 검토

자활사업에 있어 2021년~2023년은 1차 계획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및 충격 극복을 위한 최후의 사회·고용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위한 적극적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 포용 기능 강화 요구와 함께 20년간 구축한 자활인프라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확장하고,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개인)중심 자활모델 정립 및 자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① 참여자의 개인적·사회적 자산(asset) 및 강점(strength)에 기반한 자립 지원을 도모하여 ‘탈수급’ 일변도의 목표로부터 다변화하고, ② 변화된 정책환경 및 경제 사회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활 지원체계 변환 및 선순환으로 발전경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인 ① 참여자 개인 삶의 변화보다는 탈수급 성과 중심,

② 자활사업단·자활기업별 분절적 발전 및 양적 성장 목표 중심)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수급자·근로빈곤층의 적극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제공, 자활기업 성장지원 등 사회적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활 지원체계 대변환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자활 역량 및 대상별 맞춤형 자활 지원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 자활근로의 경우는 자활역량 미약자의 강점·기초역량 배양, 자립유인체계 강화,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고 자립 여건을 마련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사업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기업은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업단의 창업을 유도하고, 광역·전국자활기업 등 영세성을 극복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자산형성지원 영역에서는 자활근로 지원체계 및 독립적 자활 경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을 재구조화할 것이다. 기존 5개 통장을 목표-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하되, 청년층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민간매칭금 지원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의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7]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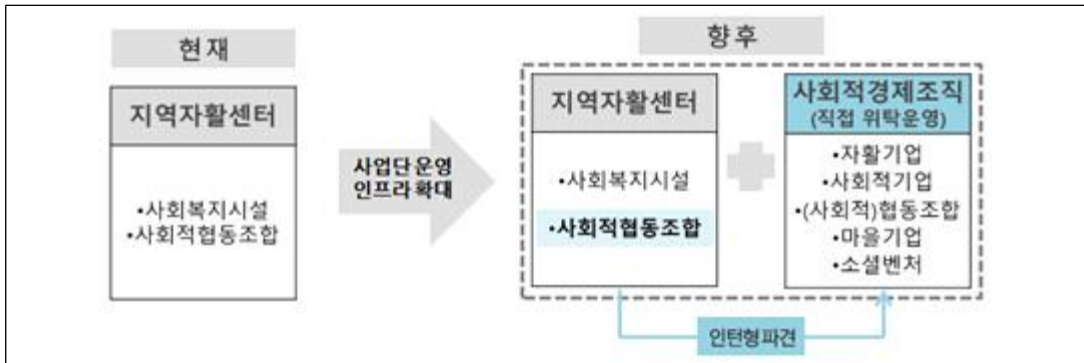


#### 4) 세부 추진 과제

##### (1)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 협력 강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간 적극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취업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종 간 연계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규모화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사업단)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활사업단 운영능력이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하여 참여자의 ·취창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8]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및 활성화 기대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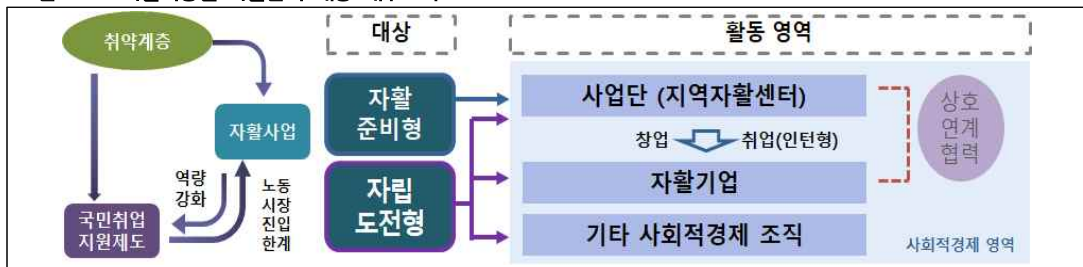
지역자활센터의 자립 강화와 자활기업 창출성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5년부터 실시되었던 지역자활센터의 유형기능다변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강화와 성과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부여와 자활사업으로서의 목적성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21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으며, 8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2)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 재설계

자활 역량이 낮은 참여자에 대한 강점·역량을 제고하고 자활모델 정립 및 자립지원 전문서비스 강화, 대상별 특화된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까지 성과목표를 기초역량 증진(사회통합) 지표 개발, 자립지원전문서비스 전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자활근로 참여자를 7.5만명 달성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탈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자활목표를 개인별 강점·자활 역량에 맞춰 다변화하고, 이에 맞춰 자활사업을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① 자활준비형과 ② 자립도전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2-9] 자활역량별 자활참여 대상 재구조화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자활역량이 낮은 조건부수급자 등은 자활준비형으로 구분하여 기초역량 배양을 집중지원하며, 기존 ‘자활사례관리’의 자활 전문성을 고도화하여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기본업무화하고 전담 관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자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립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참여 대상을 특화·확대하여 빈곤 진입을 예방하고 탈수급을 지원할 것이다. 인턴, 취업, 창업 촉진 등 자활기업으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활장려금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자활급여 인상 등 보상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참여대상의 다변화(긴급복지 연계, 휴폐업 소상공인, 보호종료아동, 니트청년 등)를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위기계층 빈곤예방 및 자립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3)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자활기업에 마일스톤 방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규제 완화, 판로지원 등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성장 지원, 성공적 자활모델로서 광역·전국자활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2023년까지 광역·전국자활기업을 2020년 41개에서 60개로, 전체 자활기업 일자리를 4천여개 창출(2020년 1.4천명 → 2023년 1.8천명), 예비자활기업 신규 창업 400개를 목표로 한다(2020년 1,179개 → 2023년 1,579개).

성장단계별(창업-성장-성숙)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지원, 인건비 다변화 및 자활기업 전문가 사용 인원 등에 있어 규제 완화, 취약계층 주거편의시설 개선, 소독방역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공공사업 분야 등 발굴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자활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업종별 ‘기업추진 민-관 TF를 구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자활기업을 발굴하여 광역·전국자활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역·전국 단위 단일 브랜드를 통해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기반 강화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인정취소요건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구성원 수급유형, 한시적 인건비 등 지원현황, 매출액 등 기업 주요 정보를 통계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개발원 간 협약을 통해 기금 자율위탁모델, 표준조례안 마련 등 기금 집행 여건을 개선하고, 법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매칭 등을 통해 자활기업 창업자금, 우수자활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강화

일반시장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독립적 자활 경로이자, 사업단의 근로·창업 인센티브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까지 자산형성 지원 누적 4만명 신규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자활근로사업단을 넘어 일반시장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자립경로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복잡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대상자와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참여자 모집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자의 근로·창업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5)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지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기능 명확화 및 이를 위한 인력 등 지원구조 체계화, 참여자 이력관리로 맞춤형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까지의 성과목표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개편 및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에 집중되었던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며, 지원 조직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역량, 자활기업 경영역량 및 종사자 직무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이며,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습자의 교육이력, 성과관리, 인프라 간 교육연계 및 사후 학습 관리를 위해 교육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행복e음과 자활정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경로, 취창업 이력 및 재수급 등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 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sup>8)</sup>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수립·발표하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17년 기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등 급여별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제고해왔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1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최저생계비 계측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명)하며, 수급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sup>8)</sup>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2020, 관계부처합동. 토대로 작성함



비수급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근로능력 없는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보장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가 대다수이나, 1-2인 가구는 생활 실태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요인 발생에 대비하여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층에 대한 가구내 지출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상황 악화시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등에 근로의지와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위기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타제도와의 효과적인 소득 보장 연계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 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3.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검토(중장기) 4.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
보장 수준 강화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1. (생계) 최저보장수준의 향상 2. (의료)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3. (주거) 최저보장 수준의 달성 4. (교육)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탈빈곤 지원	빈곤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1. 청년층 탈빈곤 지원 강화 2. 사람중심 자활 지원체계 수립 3. 수급자 지역 사회통합 촉진 등
제도 기반 내실화	수급 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1. 적정 수급 관리 강화 2.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 3.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2020.

본 연구와 관련된 자활사업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탈빈곤 지원 - 빈곤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분야의 2번째 과제인 ‘청년층 탈빈곤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청년층 맞춤형 자활 지원 확대와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방안 검토가 제시되어 있다. 비교적 자립 역량이 높은 청년층(10~30대)의 탈수급을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청년 자립 지원제도<sup>9)</sup>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 및 니트청년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을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하며,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사회 진출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한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례 범위 확대 검토 등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sup>10)</sup>.

자활사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영역에 제시되어 있다.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이 예산 투입의 결과·성과 중심이며,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별 분절적 발전 및 양적 성장 목표 중심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 삶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고 탈수급·자활성공률로 제도의 성과를 가늠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자활기업 간 발전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태계 조성에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자활프로그램 제공, 자활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등의 주요 과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보완적 관계로서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21.1 시행) 간 참여자 배치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강화를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 자활역량에 따라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sup>9)</sup>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 중(‘20.1분기 기준 65개 사업단에서 588명 누적 참여), 자산형성 지원 위한 청년저축계좌 개설(‘20.4~)

<sup>10)</sup> 현재는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적용 중임

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자활준비형과 자립도전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 절에서 제시하여 본 절에서는 생략한다.

한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에 집중되어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활급여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자활역량 및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상태에 머무르는 대상층에 대해 자활근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인별 강점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사회적 역량을 제고하고, 자활근로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지원 전문서비스를 연계하여 관계망 형성을 유도하고 자립욕구를 고취하며, 사회통합(삶의 질, 관계 역량 등) 관련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분절·중복된 인프라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하여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통합, 광역자활센터 수탁 운영하였으나, 전문성, 사업 관리 체계 등 통합적 자활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전산 시스템 등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근로 참여자, 자활 기업,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상별 교육 지원체계 수립과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사업, 교육, 참여자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2019.9)<sup>11)</sup>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 자활일자리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빈곤탈수급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자 확대 방안으로 자활사업 미참여 중인 참여대상(차상위자 등)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우선순위를 삭제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게이트웨이(Gateway) 단계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이후 자활사업단의 활발한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및 전문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였다.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기준을 (‘자활참여자 70명 → 0명’, ‘Gateway 15명 → 10명’) 완화하고, 전문가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기존 자활사업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등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를 인력파견 형태로 용역사업 수행 가능한 기관을 자활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인턴 파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였다. 뿐만아니라 지역자활센터가 사업 공간 제약 등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다. 매출액 적립방식을 매출액의 70%를 자활사업 지원비, 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직접사업비(재료비, 초과·휴일근무수당)가 높은 사업단의 경우 직접사업비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 나머지를 지역 자활사업비로 조성하도록 했다. 변경 전후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sup>11)</sup>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2019.9. 토대로 작성함

[표 2-13]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적립방식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용도	구분	용도
매출적립금 (정부지원사업비)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통장	중앙자산 키움펀드 (30%)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자금	창업지원		·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참여자 교육 등		· 자활사업기업 활성화지원 · 지역 균형 발전자금
수익금 (매출적립금 초과)	내일키움수익금	통장가입자 추가 매칭	지역자활 사업 지원비 (70%)	· 직접사업비
	자립성과금	참여자 인센티브		· 센터활성화 - 센터 활성화 지원금 등 · 참여자 인센티브 - 내일키움수익금 - 자립성과금
수익잉여금 (수익금 초과)	수익잉여금	창업자금 전환		
직접사업비	직접사업비	사업단 재투자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2019.9.

지역자활사업 지원비의 사용범위는 직접사업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내일키움수익금)로 정하였으며, 자립성과금(소득인정액 산출시 자활소득에 반영되지 않음)은 최대 월 70만원 범위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은 월 15만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며, 참여일수 및 센터에서 자체 실시한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도말 잔액은 차기년도에 한해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사용계획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성 등을 판정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맞는 사용처에 대해서 승인 조치를 한다.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는 이를 사업단별 또는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14]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사용방식

구분	직접사업비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참여자인센티브
주요용도	· 재료비 · 초과수당 · 휴일수당	· 운영비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 내일키움수익금 · 자립성과금
사용시점	분기내 사용	분기말	분기말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2019.9.

2019년 9월까지 정산한 적립금은 각각의 사용원칙에 따라 보유 또는 중앙자산키움펀드·자활기금에 적립한다. 내일키움장려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창업자금은 최종정산 후 창업 시까지 보유하여, 창업 시 기존처럼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미창업 시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키움펀드·기금으로 적립한다. 활성화지원금의 경우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내일키움수익금은 기존 정산방식으로 지원, 자립성과금은 최종 정산 후 10월에 지급, 수익잉여금은 최종 정산 후 창업시까지 보유, 창업시 지자체 승인을 받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미창업시 중앙키움펀드·기금으로 조성한다.

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매출관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매출의 80%를 지역 자화사업 지원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매출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다. 연간 매출 사용계획에 대하여 당초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21년 사전승인 규정이 삭제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넷째,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과 조성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였다.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현금 및 물품의 경우 사업단 해체시 매각절차 이후 기여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중 정부사업비로 구매한 물품 매각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년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해지를 통해 환수 통장에 적립된 금액, 매출적립금(기존의 수익금 포함)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해체된 경우 자활기업의 매출적립금품, 자활기업 창업 1년 6개월 경과 후 매출적립금(수익금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 중 잔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내일키움통장과 관련하여서는 본인 저축금을 월 20만원(기존 5~10만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지급해지 요건도 완화하였다.

#### 4.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sup>2)</sup>

자활기업은 사업단(지자체) 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수급·비수급(차상위) 등 빈곤층 대상 일자리 확대와 근로소득 증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자활근로나 자활기업과 같은 취·창업지원제도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낮은 참여 등으로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자활기업 1천개, 저소득층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의 통로일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저<sup>13)</sup>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에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 방향은 종전의 창업 전(前)단계 집중지원에서 탈피, 자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으로 설정하였다. 즉 수급자에 대한 복지부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으로 자활기업 1,000개, 일자리 2만개 창출('22)을 추진할 예정이며,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사업실패·실직 저소득층이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선순환 사회보장구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연간 자활기업 창업수 200개(2017년 113개), 총 자활기업 수 2,100개(2017년 1,100개), 총 고용수 31,500명(2017년 11,000명), 평균 고용 수 15명(2017년 10명), 청년 고용 비율 10%(2017년 3%),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1.8억원(2007년 1.3억원), 평균 임금 최저임금의 120%(2017년 최저임금)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로 저소득 니트(NEET)족 및 보육원 보호종결아동(3천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급여수급자

<sup>12)</sup> 보건복지부,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8.8.

<sup>13)</sup> 자활기업 약 37%(407)가 사회적기업(178/1717), 사회적협동조합(31/949) 등으로 성장

편입을 방지하고,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도입을 통해 사업단을 기업으로 창업시키는데 성공한 자활센터는 복지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청년채용 자활기업과 고용유지 청년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일손 부족 자활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층의 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이다. 참여대상자의 자활역량과 가구여건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자활경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에 ‘취업경로’ 유도 우선에서 당사자 의지와 여건에 따라 ‘창업경로’ 선택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공단(근로능력), 지자체(자활역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취업준비도), 지역자활센터(자립역량평가) 등 4개 기관에서 수행 중인 평가절차를 점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자활사업 미참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유도를 위해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및 시간제 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청년층·차상위층 등을 대상으로 자활기업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자활기업 문호개방’을 위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종사자 요건(1/3 이상 수급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자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집수리·간병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모화 지원’을 위해 각 권역별 동종·유사업종 간 네트워크화, 규모화를 추진하며 매입입대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과 자활기업 집수리·청소·관리사업 등을 연계하고,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찰 가점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30%) 자활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5천만원 이하)를 신설하여 자활기업의 공공사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으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자활연수원 등으로 분산 운영 중인 자활지원조직을 재정중립 원칙하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재구조화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활정보시스템 내에 참여자 DB를 구축하여 자활경로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반복진입 잔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자체 요청시 기금 지출·용자 심사를 지원하는 등 기금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 현장수요가 많은 기술·직능교육, 창업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과정 등 교육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를 해나갈 예정이다. 인프라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 허브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자



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 협력·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2,400여 개 중 매년 자격요건을 갖춘 100개 사업단에게 예비자활기업 자격을 부여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이다. 전국 233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총 3,941억원의 자활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자활근로수익금 등),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에 자활기금 집행액은 총 4,376억원 중 435억원으로 소모율이 10%에 그친다. 일부 지자체는 근로수익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을 폐지하여 타기금에 통합한 사례도 있다. 손실발생 위험기피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운용, 목적외 사용 등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 용자심사 등의 업무를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위원회에는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는 위원회의 기금 집행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집행간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자활기금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위탁 범위를 설정하고, 임의적 자활기금 폐지를 제한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자활기금 일부를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용자보증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지원계정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자활기업의 보증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 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부터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형 다변화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능 다변화는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1).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총 24개 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0년 8월 현재 21개소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완료한 상태이다(보건복지부d, 2020).

[표 2-1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구분	연도	해당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2015년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2016년	안산, 충주지역자활센터
	2017년	인천부평남부,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2018년	경기평택, 포항지역자활센터
	2020년	남양주, 부천나눔, 수원, 양주, 파주, 창녕, 합천, 울진, 사상, 사하, 금정구, 보성지역자활센터
기능다변화	2015년	인천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186-187.

지역자활센터가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합된 이후 근로능력이 매우 낮은 참여 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에 의뢰되었고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취·창업, 매출액 향상 중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정책적으로 시군구 복수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의 규모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었다('13.12.24.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 즉 지역자활센터가 유형·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는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정책변화와 지역자활센터 재편 논의'라는 외부적 요인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출구 모색'이라는 지역자활센터 내부 요인의 양 측면이 있다(백학영 외, 2018).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운영 자율화(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참여자 중심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지역 네트워크 강화(지역사회 기반 고용-복지 생태계 조성,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의 효율화(자체 수익모델 개발, 자체 고용능력 확대)로 제시되었다. 또한 궁극적인 비전으로 저소득층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일자리 및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가 제시되었다(백학영 외, 2018 재인용).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전후의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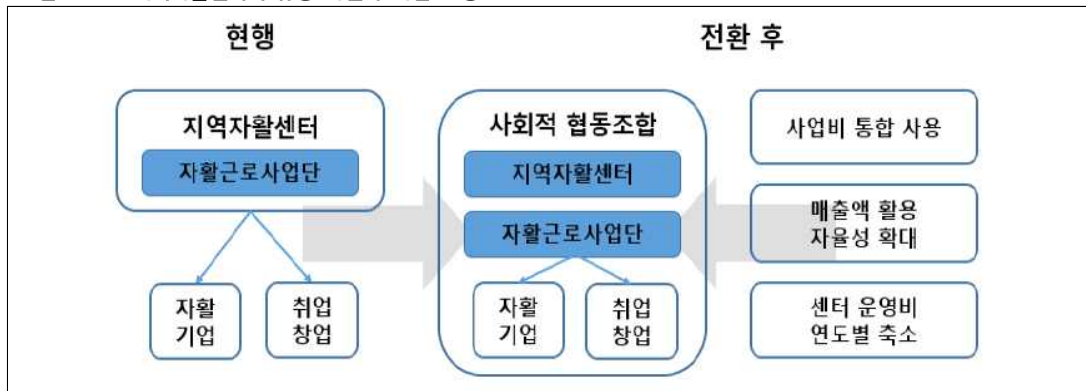
[표 2-1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전후 변화

구분	기존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
위탁법인의 위상	모법인	자활사업 실시 기관
센터 운영비	100% 지원	매년 10%씩 70%까지 감액
자활센터 법인격	·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 법인격 없음	법인이 직접 자활사업 실시
사회복지시설 여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 있음
지역자활사업지원비의 사용 시 승인여부	1회계연도 매출 세입과 세출은 예산편성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아 집행	[사회적협동조합] 매출액의 80%로 사용하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사용계획 지자체 승인없이 사용 가능
자활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비율	· 시장형 - 70:30 · 사회서비스형 - 80:20	유형구분 없이 50:50
자활근로 매출액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 70%까지 사용가능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 80%까지 사용 가능
직영사업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출처〉 김정원 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표준모델 방안 연구, 사회투자지원재단, 2020.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 지원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사업비 통장 및 매출액 활용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고, 센터 운영비 보조금 비율을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매년 10%씩 줄여나가게 된다. 이는 지역 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보조금의 의존 비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화 및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부과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비 외, 2020).

[그림 2-10]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다변화 사업 모형



〈출처〉 유비 외, 인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0, p. 29

백학영 외(2018)는 2015년과 2016년에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7개 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전후의 현황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자율성이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산과 인력 부분에 있어 자율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실무자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의 운영방식에서는 사업비와 인건비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전환 후 예산을 새로운 교육 및 사업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이전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원으로서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확대 및 매출 향상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인정 불가로 인한 기존 직원들 중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불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환 이후 매출 향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매출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및 참여자의 근로능력 저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지역자활센터가 처한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운영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자활사업<sup>15)</sup>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는 3,965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이 30.0%(1,947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793명(12.2%), 이외 저소득층은 1,733명(26.7%)으로 총 6,491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7] 자활사업(자활기업 포함) 참여자 현황

(단위: 명)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소계	일반수급	조건부	자활특례		
6,491 (100%)	3,965 (61.1%)	1,180 (18.2%)	1,947 (30.0%)	838 (12.9%)	793 (12.2%)	1,733 (26.7%)

〈자료〉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7.

게이트웨이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 자활사업 수는 364개이며, 센터당 평균 11개의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터당 평균 참여자 수는 130명이며, 센터당 평균 5.5개의 자활기업이 운영 중이고 자활기업에는 평균 66.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4개의 자활근로사업 중 185개(50.8%)가 사회서비스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에 2,118명이 참여하고 있어 자활근로사업단 전체 참여 인원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3개의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991명(23.0%), 26개의 게이트웨이/인큐베이팅에 784명(18.2%)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15)</sup> 게이트웨이 및 인큐베이팅 포함

[표 2-18]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현황

구분		사업수(개)	참여자수(명)	매출액(천원)
합계		544	6,491	104,978,175
자활근로 사업	소계	364	4,299	20,131,762
	시장진입형	93	991	12,293,126
	사회서비스형	185	2,118	7,478,277
	시범사업	5	63	72,545
	인턴형	4	32	8,000
	자활/복지도우미형	19	53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8	43	16,542
	근로유지형	5	93	3,343
	시간제자활근로	11	63	19,119
	청년자립도전사업	8	59	237,867
	게이트웨이/인큐베이팅	26	784	2,943
	자활기업	180	2,192	84,846,413

〈출처〉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7.

경기도 시군별 지역자활센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 3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두천, 파천, 연천, 가평, 의왕 5개 지역에는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두 개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3개), 성남시(2개), 부천시(3개), 안산시(2개), 시흥시(2개)이다.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수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29,967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가 29,378명, 안산시가 26,885명, 부천시 24,492명, 수원시 24,31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남시가 3,099명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 3,000명, 수원시 2,713명, 고양시 2,697명, 남양주시 2,326명 순으로 많다.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중 8개소(수원, 부천나눔, 안산, 평택, 시흥작은자리, 남양주, 파주, 양주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 5월 현재 파주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7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경기도 시군별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2-19] 경기도 사군별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황 및 예산

사군 (26개)	기초생활수 급자(명)	조건부수 급자(명)	센터명 (33개)	지정일	유형별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기업		합계		예산 (천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수원시	24,318	2,713	수원지역 자활센터	00.08.01	유형 다변화	12	165	6	132	18	297	7,599,200
			우만지역 자활센터	01.07.01	표준형	10	83	4	81	14	164	
			희망지역 자활센터	01.07.01	표준형	9	88	1	4	10	92	
			합계			31	336	11	217	42	553	
성남시	29,378	3,099	성남만남 지역자활터	01.07.01	확대형	15	128	5	35	20	163	5,129,400
			성남지역 자활센터	11.11.11	표준형	13	266	4	13	17	279	
			합계			28	394	9	48	37	442	
부천시	24,492	3,000	부천원미지역 자활센터	00.08.24	확대형	13	149	9	33	22	182	9,797,000
			부천소사지역 자활센터	01.07.01	확대형	13	152	10	33	23	185	
			부천나눔지역 자활센터	00.08.24	유형 다변화	17	117	9	84	26	201	
			합계			43	418	28	150	71	568	
용인시	15,621	1,176	용인지역 자활센터	01.07.01	확대형	13	130	5	15	18	145	2,083,300
안산시	26,885	1,985	안산지역 자활센터	00.08.24	유형 다변화	8	61	5	63	13	124	3,083,000



사군 (26개)	기초생활수 급자(명)	조건부수 급자(명)	센터명 (33개)	지정일	유형별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기업		합계		예산 (천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양지지역 자활센터	01.07.01	표준형	10	72	3	76	13	148	
			합계			18	133	8	139	26	272	
안양시	12,553	1,075	안양지역 자활센터	01.07.01	확대형	13	130	8	28	21	158	2,956,100
평택시	15,521	1,753	평택지역 자활센터	01.07.01	유형 다변화	20	268	5	82	25	350	5,571,500
시흥시	13,797	1,710	시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00.08.24	유형 다변화	11	86	6	291	17	377	4,738,800
			시흥일꾼지역 자활센터	00.08.24	표준형	8	129	10	37	18	166	
			합계			19	215	16	328	35	543	
화성시	13,461	1,270	화성지역 자활센터	03.08.01	표준형	10	114	8	31	18	145	2,081,200
광명시	8,834	800	광명지역 자활센터	06.01.01	표준형	9	111	9	24	18	135	2,181,800
군포시	8,687	860	군포지역 자활센터	02.07.01	표준형	9	133	2	20	11	153	1,984,700
광주시	7,826	828	광주지역 자활센터	15.02.02	표준형	14	88	6	39	20	127	1,579,500
김포시	11,240	1,432	김포지역 자활센터	02.12.31	표준형	5	130	2	6	7	136	1,506,700
이천시	6,106	944	이천지역 자활센터	17.01.09	기본형	10	105	2	14	12	119	2,251,200
안성시	6,180	966	안성맞춤지역	10.07.16	표준형	9	113	2	10	11	123	2,186,700

사군 (26개)	기초생활수 급자(명)	조건부수 급자(명)	센터명 (33개)	지정일	유형별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기업		합계		예산 (천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자활센터									
오산시	5,916	662	오산지역 자활센터	14.04.08	표준형	12	99	6	30	18	129	1,436,400
하남시	6,157	375	하남지역 자활센터	15.5.04	표준형	9	108	4	26	13	134	2,277,100
여주시	5,652	456	여주지역 자활센터	01.12.31	표준형	11	97	3	17	14	114	2,128,000
양평군	4,536	324	양평지역 자활센터	16.07.04	기본형	9	26	3	8	12	34	851,400
고양시	29,967	2,697	고양지역 자활센터	01.07.01	표준형	10	250	5	19	15	269	2,020,500
남양주시	20,779	2,326	남양주시 자활센터	01.07.01	유형 다변화	11	219	8	167	19	386	2,630,400
의정부시	21,323	1,749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00.08.24	확대형	13	230	5	15	18	245	3,246,600
파주시	17,256	1,008	파주지역 자활센터	02.12.31	유형 다변화	8	135	4	365	12	500	2,395,100
구리시	7,328	410	구리지역 자활센터	00.08.24	표준형	7	55	8	275	15	330	1,372,300
양주시	10,638	1,136	양주지역 자활센터	01.12.31	유형 다변화	10	84	4	10	14	94	2,067,600
포천시	7,236	294	포천지역 자활센터	02.07.01	표준형	13	178	4	18	17	196	1,353,000

<자료> 사회보장통계(2020.12). 기초생활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수; 경기도청(2020.1.) 지역자활센터 현황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예산: 경기도청 내부자료(2021년 자활근로 국도비 변경내시 국비,도비,시군비 합계금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 39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209명(53.5%), 비정규직이 182명(46.5%)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년 초과 3년 이하가 14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하가 83명, 3년 초과 5년 이하가 36명 순으로 나타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근속연수가 1년 초과 3년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0]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연차별 종사자 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
1년 이하	83	1년 초과 3년 이하	144
3년 초과 5년 이하	36	5년 초과 7년 이하	33
7년 초과 9년 이하	25	9년 초과 11년 이하	25
11년 초과 13년 이하	14	13년 초과 15년 이하	11
15년 초과 17년 이하	10	17년 초과	10

<출처>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p. 13.

경기도 내 자활기업은 2020년 말 기준 180개소가 있으며, 업종은 집수리, 청소, 재활용, 돌봄, 카페, 외식, 세차, 배송 등이다. 청소사업을 하는 자활기업이 44개소(24.4%)로 가장 많고, 기타 43개소(23.9%), 배송업 27개소(15.0%), 집수리 25개소(14.0%)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의 업종 및 유형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1] 경기도 내 자활기업 유형 및 업종

(단위: 개소, %)

유형	집수리	청소	재활용	돌봄	카페	외식	세차	배송	기타	계
개인	8	13	1	-	4	11	2	15	29	83
주식회사	11	26	2	9	1	-	1	4	6	60
일반협동조합	5	3	-	4	1	-	1	8	7	29
사회적협동조합	1	2	-	4	-	-	-	-	1	8
합계(비율)	25 (14.0)	44 (24.4)	3 (1.7)	17 (9.4)	6 (3.3)	11 (6.1)	4 (2.2)	27 (15.0)	43 (23.9)	180 (100)

<출처>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p. 11.

## 2. 경기도 도자체 자활사업 현황

### 1) 희망디자인 사업

희망디자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재무 및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알선, 상담, 동행면접 등 재무(신용회복, 채무관리 등) 및 취업 관련 밀착지원 등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로 센터 이용자에 통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20개소<sup>16)</sup>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예산은 총 640,000천원(도비 192,000천원 / 시비 448,000천원)이다.

### 2) 교육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시군별 교육편차 해소 목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직능교육(기술자격증취득, 창업 준비교육 등) 및 소양교육(전담인력 양성교육, 대인관계, 안전, 인문학 등)을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재무설계사, 직업상담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1개 시군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 총 329,250천원(도비 98,775천원, 시군비 230,475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교육사업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2-22] 경기도 교육사업 실적

연도	합계		참여자 직능교육		참여자 소양교육		종사자 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년	1,436	20,052	394	6,286	268	12,290	774	1,476
2020년	1,0599	10,569	374	3,413	153	5,503	532	1,653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p. 60.

<sup>16)</sup> 경기남부 : 15개소(수원, 성남, 남양주, 부천, 고양,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파주, 고양, 화성, 군포, 광주, 김포, 안성, 오산, 여주)  
경기북부 : 5개소(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 제 3 장

## 자활사업 사례 분석

제1절 자활사례 분석 개요

제2절 평택시

제3절 인천광역시

제4절 부천시

제5절 시사점



## 제절 자활사례 분석 개요<sup>17)</sup>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1년 4월 16일, 4월 19일, 6월 4일에 걸쳐 각각 경기도 평택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 소재 3개, 부천시 소재 2개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기관 연혁과 비전, 공간 현황 등과 센터의 주요사업, 참여자 현황, 운영 과정의 어려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하여 센터장 및 실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형 다변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곳으로 그 경험을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과정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안정적인 매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부문 자활사업분야 우수지자체로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부천시는 지역 내 3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결과 거두고 있어 자활사업의 우수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자활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열의를 가지고 ‘꿈이든The카페’ 등 지역특색을 살린 자활사업장을 확충하고, 자활일자리 확대, 자활성공률 제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인천뉴스, 2020.12.20., ‘인천시, 2020년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45>, 검색일: 2021.4.29.). 이에 인천광역시의 자활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

<sup>17)</sup> 센터홈페이지 및 센터 내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 외 자료는 별도 출처 표기함

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자활센터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기관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1] 사례조사 대상 지역자활센터 기본사항

기관명	소재지	지역유형	규모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여부
평택지역자활센터	경기도 평택시 자유로 8번길 31 3층	도시형	확대형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 3층	도시형	확대형	-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 2층	도시형	확대형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76	도시형	확대형	-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부천시 경인로 477, 지층, 3-5층	도시형	확대형	-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시 경인로 224번길 36, 3층	도시형	표준형	사회적협동조합

\*규모유형은 2018년~2020년 규모평가 결과 확정된 것으로 2021~2023년까지 3년간 적용 예정



## 제2절 평택시

### 1. 평택지역자활센터

#### 1) 연혁 및 비전

평택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평택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그 해 10월부터 간병, 봉제, 액세서리사업단 등의 자활근로를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극복평택센터(경기도비영리단체)가 운영법인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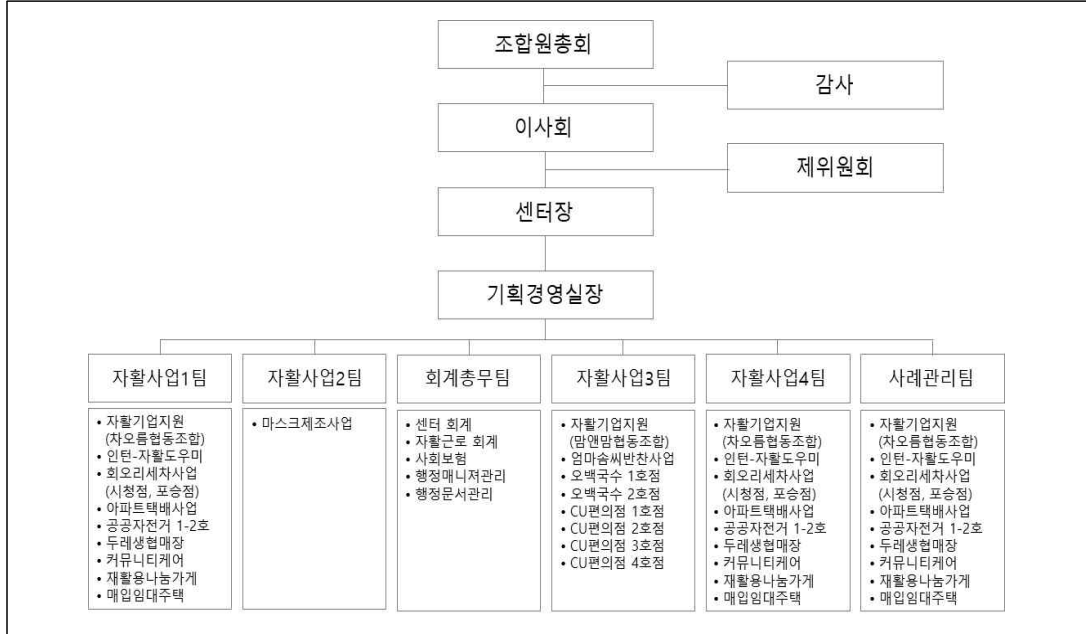
평택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으로 자활의 역량을 키운다’, ‘소통이 원활한 자활사업을 만든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활사업을 한다’,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만들고 연대한다’, ‘협동사회경제를 선도한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 ‘자율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일하자’라는 일곱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조직 및 운영

평택지역자활센터의 조합원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자 조합원 7명, 직원 조합원 10명, 자원봉사자 조합원 1명, 후원자 조합원 3명으로 총 2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의 상근직원은 센터장 1명, 기획경영실장 1명, 회계총무팀 2명, 자활사업 1팀 5명, 자활사업 2팀 1명, 자활사업 3팀 5명, 자활사업 4팀 4명, 사례관리팀 4명으로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총 4개의 자활사업팀에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사례관리팀에서는 초기상담, 교육 기획, 소식지 등 홍보, 게이트웨이, 탈수급 유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총무팀은 센터 회계 업무 및 행정문서 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림 3-1] 평택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예산 및 시설(공간)

평택지역자활센터의 2021년 자활근로 예산은 5,571,500천원이며(변경내시 기준), 이 중 국비가 4,457,200천원, 도비 334,290천원, 시군비가 780,010천원이다(경기도청 내부자료, 2021).

평택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 평택시 자유로8번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2,3층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센터 및 사업단의 사업공간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로 3층(면적 300㎡)과 2층(면적 130㎡)을 보증금에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엄마숨씨반찬 등 총 19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2] 평택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자산종류	면적(m)	계약방법	사용처
사무실(3층)	건물임대	300	보증/월세	센터
사무실(2층)	건물임대	130	보증/월세	센터
사업장	건물임대	102	보증/월세	엄마숨싸반찬
사업장	건물임대	38.16	보증/월세	오백국수평택점
사업장	건물임대	82.6	보증/월세	오백국수용이점
사업장	건물임대	63.83	무상	배다리도서관카페
사업장	건물임대	37	운영위탁	건강한먹거리(평택두레생협)
사업장	건물임대	23	무상	환경위생사업단(시청)
사업장	건물임대	198	보증/월세	환경위생사업단(서부발전)
사업장	건물임대	33	월세	아파트택배
사업장	건물임대	171.63	보증/월세	재사용가게
사업장	건물임대	44.95	보증/월세	재사용가게
사업장	건물임대	89.34	사용료	수영장카페
사업장	건물임대	244	보증/월세	나무사랑
사업장	건물임대	-	운영위탁	편의점(덕동행운점)
사업장	건물임대	-	운영위탁	편의점(송탄창전점)
사업장	건물임대	181.15	보증/월세	수제어묵카페
사업장	건물임대	38.76	무상	위드커피
사업장	임대	46	무상	공공자전거대여1호
사업장	임대	72	무상	공공자전거대여2호
사업장	건물임대	41	무상	비전도서관카페

<출처>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128.

#### 4) 사업 내용

평택지역자활센터의 주목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운영, 직업교육, 평생교육, 상담 등 교육상담, 공공기관 매점 등 공유시설 위탁사업, 사회복지 시설 등 위탁사업,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이며, 기타사업은 직원 및 조합원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연대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다.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진입형 6개, 사회서비스형 13개, 인턴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게이트웨이, 시간제자활근로 등 총 24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총 320명이다.

[표 3-3]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단명	참여인원(명)	업종	임대구분
시장진입형	오백국수평택점	8	음식업(한식, 분식)	유상임대
	오백국수용이점	8	음식업(한식, 분식)	
	건강한먹거리	5	평택두레생협 매장위탁, 유기농 제품 소매업	
	평택희망나르미	18	정부양곡배송사업	
	배다리도서관카페	7	음식업(휴게음식점)	무상임대
	송탄출장소위드커피	4	카페	
사회서비스형	나무사랑	4	원목제품 제작판매(신라호텔 등 납품)	유상임대
	커뮤니티케어	5	소규모집수리, 병원-재가간병, 매입임대입주지원	
	아파트택배	16	롯데택배, 우체국(아파트 거점 경량택배)	
	재사용나눔가게	5	재사용 가게 운영	무상임대
	공공자전거대여	12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환경위생	8	공공기관 자동차세차	
	편의점	60	CU 새싹가게(소매업) 4개 지점	
	어묵카페	13	카페, 수제어묵 도소매, 원두로스팅	유상임대
	엄마숨씨반찬사업	5	음식업	
	마스크제조	7	제조업	
	비전도서관카페	7	카페	무상임대
	수영장카페	5	카페	
	평택향홍보관카페	4	카페	
인턴형		4	기업취업지원(6개월 인건비 지원)	유상임대
자활도우미		1	지역자활센터 행정보조	
사회복지시설도우미		6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게이트웨이		101	상담사업	
시간제일자리		7	시간제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320	

〈출처〉 평택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2) 자활기업

평택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5개의 자활기업에 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4]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명	참여인원 (명)	사업내용	임대구분
(주)청인씨엔씨	13	청소장비 도·소매, 우생관리용역사업	유상임대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주)	6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가시간병방문서비스, 개인간병(병원·재가)	
참행복한집협동조합	2	실내인테리어, LH 주거현물 급여공사, 주거복지사업	
차오름협동조합	2	자동차세차	
맘안맘협동조합	2	휴게음식업(샌드위치, 카페)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83		

<출처> 평택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5) 주요사항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단을 확대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로서 직원의 경력인정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인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센터 운영에 있어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해지고,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자 수 증가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매출액 재투자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하였으며, 자활기금 210,000천원을 활용하여 마스크사업단 기계장비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평택지역자활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임대 공가주택을 받아 청년사회주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사업 아이템 개발에 있어 참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과 참여자의 근로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복잡한 재료가 필요 없는 국수 사업단과 근로 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의점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 이외에 정서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를 위한 교육, 자원연계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 교육 및 여행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금전문가 1인, 자활근로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약직 자활전문가 등을 채용하였고, 자활도우미를 활용하여 센터 직원의 행정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 4~5명의 자활도우미가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경력 있는 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처우개선비만 지급되고 있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 증가를 고려하여 사업단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자활사업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도 포함하여 노동 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 (1)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국정목표에 맞춘 지역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청, 평택복지재단, (주)한국서부발전,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회, 평택동방복지타운 등과 MOU를 통해 사회적배려계층의 일자리창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국서부발전의 후원금을 통해 2018년에 회오리세차 포승점을 설립하고 차량 등 기자재 구입, 사택 내 주차장 부지 및 관리동 일부 사무실을 무상 임대 받았으며(후원금 50,000천원), 2019년에는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내에 세차장 및 카페를 설립(후원금 336,000천원) 및 수제어묵카페 1호점을 설립하였다(후원금 64,000천원). 2020년에는 후원금 100,000천원을 이용해 수제어묵카페 2호점을 설립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공

헌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이 마련한 후원기부금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받았다. 이를 계기로 후원기업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자활사업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자활근로사업 규모화 진행을 위한 업종 다양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연대 및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아이템 홍보를 통해 노인,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 조직과 자활사업의 접목을 시도하여 경력단절 신중년여성 2명, 발달장애인 2명을 추가 고용하였다. 또한 평택지역자활센터, 평택시장애인부모회,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평택시와 협력을 통해 공공청사 내 부지,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평택시 관내 지역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로 BGF리테일(CU편의점)과 자활사업 활성화 협약을 통해 유통전문 노하우 및 창업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었으며, 소자본(15,000천원)으로 CU편의점 가맹점을 개설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활근로참여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 (2)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 소비를 위해 평택지역자활센터와 평택두레생협이 MOU를 맺어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연대사업으로서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매장 설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 구입할 수 있으며,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2] 평택두레생협



### (3) 공공입찰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택시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응찰하여 평택시 시립수영장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 일반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에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진출이 가능한 면이 있다. 인테리어는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공소 사업단의 기술력을 활용하였으며, 평택지역자활센터의 최초 매점사업으로 노하우 습득 후 향후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반사업자의 영업수익 등의 사정으로 공실이 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매점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장에도 공공입찰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4) 시민 욕구에 기반한 자활사업 활성화

시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평택시 관내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홍보, 유지관리 원으로 취약계층을 배치하여 민원 응대 및 실태 등의 교육, 전문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평택호에서 통복천 지나 죽백동까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확대’ 공약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단계로 자전거 이용 공공대여소 활성화 및 지역연계사업을 통한 시민의 건강·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 시설 설치시, 지역의 민간기업 후원을 받았다(경동나비엔, 한국알박(주),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이밖에도 평택지역자활센터는 2020년부터 LH 공공임대리모델링 청년사회주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LH 소유 전세임대주택 등을 민간기관에서 위탁받아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향후에도 청년층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 평택 공공자전거대여소



#### (5) 평택시 자활기금 활용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 성공 및 유지수당, 자활근로사업단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 취·창업 인센티브가 없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2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참여자들의 취·창업 및 유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고, 평택

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제21조 5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근거하여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천원~1,500천원의 취·창업 성공 및 유지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전체 6,500천원이 소요되었다. 수당 도입 후 전년대비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취·창업 성과가 2019년 10명 대비 2020년 23명으로 증가).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에 자활근로사업단 성격에 맞는 적절한 점포를 확보하여 환경개선 및 임대를 통해 매출액 신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개선비로 자활기금을 활용하였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제21조 2호(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에 근거하여 오백국수용이점에 보증금 30,000천원, 인테리어 30,000천원을 지원하였다(2018년). 환경개선 사업 이후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그밖에 평택시의 자활기금 활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5]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활용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활기금 활용액 합계	119,800	34,790	160,280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 증진 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800	1,000	1,000	1,000
	경기도 자활한미당 참가지원	7,600	4,060	4,550	-
	자활사업 취·창업자 성공수당 지급	18,000	6,500	6,500	9,000
	자활사업 취·창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8,230	8,230	8,230
자활기업 운영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22,000	15,000	30,000	30,000
신규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60,000	-	30,000	-
	감염병예방 마스크제조사업	-	-	-	210,000
자활기업 사업장 지원	신규자활기업 개소를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	10,400	-	80,000	-
자활기업 사업장 지원	이전 및 리모델링	-	-	-	169,550
자활센터 육성 및 활성화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	-	43,150

출처 > 평택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제3절 인천광역시

### 1.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와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부평구자활센터라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부평구자활센터 건립은 부평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임대비용 절감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부평구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총 5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구성은 구비 12억원(22.6%), 특별교부세 10억원(18.9%),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13.2%), 자활기금 24억원(45.3%)이다. 건물매입 및 공사비, 실시설계비로만 5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1억7천7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다. 현재 부평구자활센터 건물에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자활센터의 8개 사업단, 부평구여성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 1) 연혁 및 비전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 부평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지정받았으며, 현재 (사)인천여성노동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자활근로(집수리, 간병인) 위탁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가정관리 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활동으로 협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난 20년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을 수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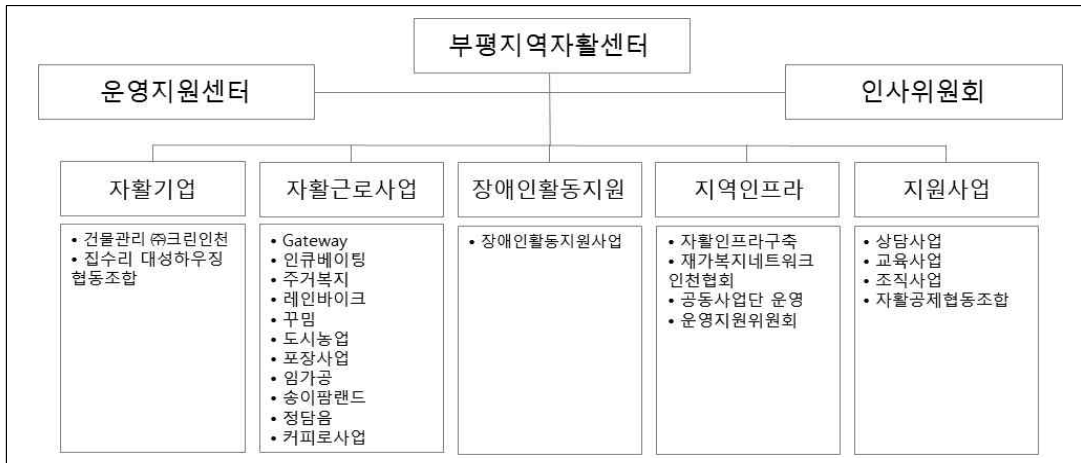
2015년 1월부터는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사례관리 중점기관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근로능력을 높이

며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연계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과 협동하고 나누는 행복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 2) 조직 및 운영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 실장 1명, 사무국장 1명, 13명의 팀장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3-4]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시설(공간)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4층을 커피로사업단, 꾸민사업단, 임가공사업단, 정담음사업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을 포장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이외에 외부 사업장 등 구체적인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6]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주소	사용처
사무실(4층)	부평구 후정동로 6, 4층	센터 사무실, 커피로사업단, 꾸밈사업단, 임가공사업단, 정담음사업단
사무실(3층)	부평구 후정동로 6, 3층	포장사업단, 자산형성지원
사업장	장제로 249번길 9-6	인큐베이팅사업단
사업장	부평구 장제로 382 2층	주거복지서비스사업단
사업장	부평구 부흥로 383, 2층	레인바이크사업단
사업장	계양구 동양동 358-2	도시농업사업단
사업장	남동구 담방로 105	송이팜랜드사업단

<출처>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4) 사업내용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은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자활 기업체 설립 및 운영지원, 사회적 일자리 위탁 운영, 맞춤형 자활 계획 수립과 각종 창업 관련 정보제공, 교육(자활의욕 고취, 기능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의사소통 훈련, 문화 체험), 상담(취업상담, 자활을 위한 기타 상담),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사업, 행사 및 기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등이다.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9개의 사업단에 총 2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7]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단명	참여인원(명)	업종
주거복지	21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꾸밈사업	17	생활소품 등 청바지 리폼제작
레인바이크	21	폐자전거 수거, 재생자전거 생산, 이동수리 다양한 자전거, 우산
도시농업사업	25	채소생산 및 판매, 농장체험, 원예체험
방문학습지원	14	초등학교아동 대상 학습지도와 정서지원, 공부방 운영, 가정방문 지도
포장사업	33	쇼핑백 및 전기 콘센트 임가공
임가공사업	24	집중 사례관리 및 단순 조립작업
인큐베이팅사업	21	사업단 참여 준비
게이트웨이	44	상담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220	

<출처> 인천광역시자활센터 홈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https://injiwon.or.kr/html/self\\_biz03.html](https://injiwon.or.kr/html/self_biz03.html), (검색일: 2021.5.11.)

## (2) 자활기업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2개의 자활기업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8]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명	참여인원(명)*	업종(사업내용)
(주)크린인천	11	건물관리, 소독, 청소
(협)해피타임	5	가사도우미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16	

〈자료〉 인천광역시,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2020.

\*2020년 1월 기준

## 5)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 (1)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함께 2015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기능 다변화는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보건복지부, 2021)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미약자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인천광역자활에 자활사례관리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하여 인천형 정서자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들을 심리상담으로 연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외부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인천형 심리·정서 지원사업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인지행동 프로그램, 전체 사업단 IAP, ISP 자립계획 수립, 사례관리 강화 한글 수업 운영 등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은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립지원계획에 따른 체크리스트’와 게이트웨이 신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자활입문교육의 교육내용이다.

[그림 3-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계획 체크리스트

나의 약속																									
사업단										2021년 월 일 ~ 월 일															
										이름															
실행계획세우기																									
내용	자기관리 (건강, 한글공부, 약속 등)					경제 및 주거안정 (신용회복, 전세달대 등)					역량강화 (수업중, 자격취득, 교육훈련 등)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근태관리 사업단 적용 등				
	구분	이주상황	생활	노력	실행계획	실행도판	이주상황	생활	노력	실행계획	실행도판	이주상황	생활	노력	실행계획	실행도판	이주상황	생활	노력	실행계획	실행도판				
점수	25	20	15	10	0	25	20	15	10	0	25	20	15	10	0	25	20	15	10	0	25	20	15	10	0
1주																									
2주																									
3주																									
4주																									
5주																									
총점																									
나에게 칭찬한다:																									
느낀 점 :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표 3-9]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내용

구분	시간	4/12	4/13	4/14	4/15	4/16
오전/ 오후	9:00~12:00/ 13: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0~9:30</li> <li>- 접수 및 안내</li> <li>:열체크 및 입상기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0~14:00</li> <li>- 접수 및 안내</li> <li>:열체크 및 입상기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0~9:30</li> <li>- 접수 및 안내</li> <li>:열체크 및 입상기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0~14:00</li> <li>- 접수 및 안내</li> <li>:열체크 및 입상기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0~9:30</li> <li>- 접수 및 안내</li> <li>:열체크 및 입상기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0~11:30</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0~16:00</li> <li>- 재무관리 및 신용회복(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0~11:30</li> <li>- 자활선배와의 만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0~15:00</li> <li>- 자활사업의 이해 및 사업단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0~10:00</li> <li>- 자산형성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30~12:00</li> <li>- 소감 및 공지 사항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0~17:00</li> <li>- 맞춤형 재무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30~12:00</li> <li>- 소감 및 공지 사항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16:00</li> <li>-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li> <li>• 16:00~16:30</li> <li>- 소감 및 공지 사항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12:00</li> <li>- 자활지원계획</li> </ul>

<자료>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2) 타 지역자활센터와의 협력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 많은 부분을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 특화 기관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의 참여주민 중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두 센터의 실무자가 함께 참여주민의 근로능력 및 특성을 파악하여 두 개 기관의 사업단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주민에게는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 참여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모임 지원

참여자간 의사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산모임, 라이딩, 족구 등 다양한 소모임을 장려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출자금을 조성하고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으로 대출하여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협동으로 도우려는 자조운동의 일환으로 자활공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경우 신용관계상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자활공제협동조합이 생활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적립된 출자금을 조합원 대출사업 등으로 운영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활사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참여자, 기타 조합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주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자원,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조직 등 단체도 가입 가능하다. 서울에 9개, 경기 10개, 인천 4개 등 전국에 총 46개의 조합이 운영중이다.

## (4) 인력운영 관련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단별로 반장(참여자 대표)을 뽑고, 반장을 대상으로 리더쉽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 실무자와 사업단의 반장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연수 기회도 가지고 있으며, 사업단 반장들의 고충과 경험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있다. 평택지역자활센터와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이용하여 자활전문가를 3~4명 채용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 (5) 자활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센터 주변 청소, 신규 사업단 발굴 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 2.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 1) 연혁 및 비전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기능 다변화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동시에 유형 다변화 사업에도 참여하여 2년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17년 9월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로 전환하였다.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례관리 및 교육사업 등 제반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운영을 실현하며,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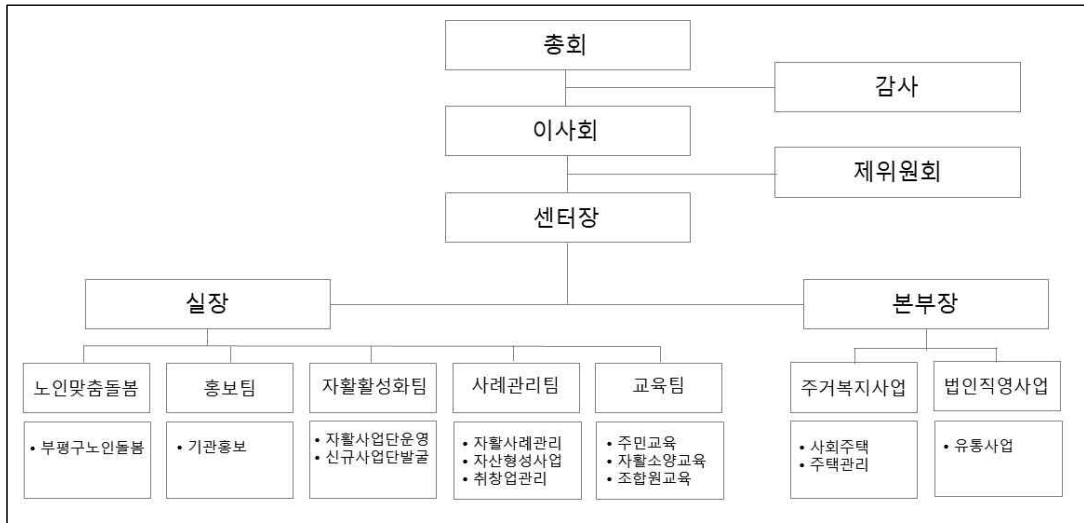
### 2) 조직 및 운영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의 조합원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조합원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자 조합원 4명, 후원자 조합원이 3명으로 총 2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 본부장 1명, 실장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자활근로사업팀 10명, 사례관리팀 2명, 직영사업 담당자 5명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은 실장 산하의 노인맞춤돌봄, 홍보팀, 자활활성화팀, 사례관리팀, 교육팀과 본부장 산하의 주거복지사업, 법인직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3-6]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시설(공간)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285.19㎡). 건물 1층에는 자활홍보관 및 카페가 있으며, 지하1층은 부평지역자활센터와 공용으로 대교육장, 기술교육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 사업장 등 구체적인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0]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자산종류	면적(m)	사용처
사무실(2층)	건물임대	285.19	센터
자활홍보관(1층)	건물임대	212.96	자활홍보관 카페
대교육장, 기술교육장, 창고	건물임대	335.46	부평지역자활센터와 공동 사용
사업장	건물임대	86	청소사업단 사무실
사업장	건물임대	34	부평역사박물관 카페 매장
사업장	건물임대	31	시립박물관 카페 매장
사업장	건물임대	18	인천나비공원 카페, 매점
사업장	건물임대	118	공방사업 교육장, 작업장
사업장	건물임대	62	자활생산물 홍보관
사업장	건물임대	990	부남로지스3자물류유통 작업장
사업장	건물임대	50	프랜차이즈유통 GS25편의점
사업장	건물임대	73	부평구청 7층 매점
사업장	건물임대	100	본래순대 외식사업

〈출처〉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4) 사업 내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의 주목적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 및 지원사업, 조합원 및 참여주민 교육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다.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단 8개, 시간제자활근로, 인턴형, 청년자립 도전, 게이트웨이 등 총 12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총 278명이다.

[표 3-11]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단명	참여인원(명)	업종(내용)
청소	53	부평구 초, 중, 고등학교 청소관리, 대형건물 수주청소 및 에어컨 청소, 입주청소, 주거환경 개선
카페	30	나비공원, 인천시립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인천시 상생유통 내 더담지, 부평구 자활센터 내 커피위드인 등 카페 운영
리테일	23	기업연계형 GS25편의점(갈산역점, 만수향촌점) 운영
프랜차이즈외식	16	기업연계형 프랜차이즈 본래순대 부평점 운영, 조리교육, 홀서비스 교육 및 매장 운영, 지역 어르신 점심식사의 날 시행

사업단명	참여인원(명)	업종(내용)
부남로지스	13	홈쇼핑, 온라인 판매제품을 박스포장 및 송장대행, 거래처 물품 입고 및 발주 관리, CJ대한통운 발송제품 입고
상생유통	15	구청매점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유통, 종합터미널 자활홍보관 운영, 부개여고 매점 운영
임가공	30	주방용품 포장 및 물류,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아이스팩재사용	10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재래시장연합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수요처 개발
시간제	15	자활홍보관 “꿈이든” 약세사리 매장 운영, 약세사리 재포장 유통
인턴도움미형	6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커피위드인” 참여
청년자립도전	15	보육시설퇴소 청년 주거지원사업, 직업능력배양(바리스타, 제빵, 주조), 인문학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게이트웨이	80	사례관리, 맞춤형 취업교육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306	

〈출처〉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2) 자활기업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5개의 자활기업에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2]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명	참여인원 (명)	업종(사업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소통과 나눔	20	장애아동방문 학습지원 바우처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정다운	53	장기요양, 가시간병, 노인돌봄,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위탁기관 신청
사회적기업 (주)뉴크린아트	5	시스템에어컨 청소, 학교청소
협동조합 부남택배	6	정부양곡, 경로당양곡 택배
사회적협동조합 커피위드인	6	카페운영 및 여성시장 취업지원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90	

〈출처〉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3) 직영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직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개편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민관협력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독거유형별 맞춤서비스 강화 및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총 3개 권역으로 분류되는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A권역(삼산동, 부개동, 갈산동, 청천동, 산곡동)을 서비스 지역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자 3명, 생활지원사 45명을 파견하고 있다.

## 5)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 (1) 사회공헌 관련 사업 확대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에 있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이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일자리 지속과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지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뿐만아니라 사회공헌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업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 활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존 지역자활센터는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사업,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3) 집행부(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현재의 자활사업 성과지표와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인

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특히 인천시청에 자활증진과가 생긴 이후에는 더욱 자주 만나서 인천형 자활사업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자 특성 변화에 따른 사업단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집수리, 청소 등 중심에서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한 고민 등).

#### (4) 지속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노력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 중 하나는 청년층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의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LH청년주택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1층에 사업단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이 사업단에서는 카드나 애견미용 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등과 연계하여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종료 후 취업 가능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을 통해 현재 2명이 취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아이템 개발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자와 참여자가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주민이 직접 지역 내 자원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 (5)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테이블을 동일하기 맞추기 위한 여건을 만들었으며, 자기개발비 및 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 (6) 지역사회네트워크 적극 활용

사회적경제조직,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인천시 공동 사업단 아이템 등에 대한 고민, 정책제안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3.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1) 연혁 및 비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서구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 이전 해인 2002년부터 복지간병, 집수리 등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가 위탁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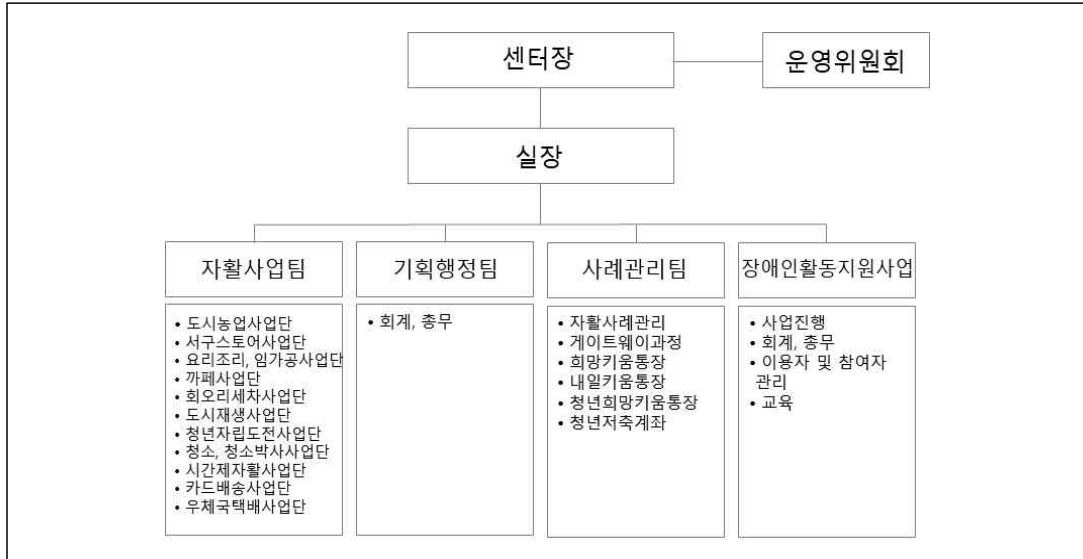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존중, 소통, 행복, 희망’을 핵심가치로 삼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및 자립역량 강화, 중사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및 역량 강화 교육,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통해 서구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근로빈곤층 통합적 지원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조직 및 운영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 실장 1명, 자활사업팀 8명, 기획행정팀 1명, 사례관리팀 4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명으로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자활사업팀에서는 사업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행정팀에서 회계 및 총무 업무를, 사례관리팀에서 자활사례관리 및 게이트웨이과정,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부서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7]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예산 및 시설(공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21년 예산은 5,084,093천원이다(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 내부자료, 2020).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 원창로 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대지면적 1,167㎡/연면적 681.81㎡). 2017년 9월 22일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17년 10월 26일에 이전 개소하였으며, 서구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사용 중이다(임차기간은 2022년 6월 21일까지). 센터 건물 이외에 신현동(염곡로 383번길 22-1)에 자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13]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자산종류	면적(m)	계약방법	사용처
사무실(지상 2층)	건물임대	255.31	무상임대	센터(자활사업단, 교육실)
사무실(지상 1층)	건물임대	372.28		센터(사무실, 상담실, 자활사업단)
사무실(지하 1층)	건물임대	54.22		센터(창고, 물탱크)
사업장(지상 2층)	건물임대	66.27	전세(10,000만원)	자활사업단 공용사무실(요리조리, 정리수납)
사업장(지상 1층)	건물임대	79.11		자활사업단 공용사무실(카드배송, 거점택배, 도시재생)
사업장(지하 1층)	건물임대	80.21		자활사업단(청소 사무실 및 창고, 도시재생 자재 창고)

<출처>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4) 사업 내용

##### (1) 자활근로사업

2020년 기준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진입형 3개, 사회서비스형 9개, 청년자립도전, 시간제자활근로, 게이트웨이 등 총 15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참여자는 259명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인턴·도우미형 사업인 복지시설 도우미로 55명을 배치하였으며, 근로유지형으로 환경정비 사업단에 67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봉제사업단과 한아름(임가공)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8명, 4명을 각각 배치하였다.

[표 3-14]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단명	참여인원(명)	업종
시장진입형	청소	43	건물위생관리
	카페	8	커피, 음료 판매
	요리조리	20	영유아급식보조 취사
	청소박사	0	2021년 신규/건물위생관리
사회서비스형	임가공	25	전자제품, 플라스틱 조립, 반가공제품 조립, 완제품 포장
	도시농업	25	채소, 고추 등 재배
	임가공두드림	25	전기부품조립 및 제품포장/ 정서지원 사례관리, 마인드개선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	5	집수리, 빈집관리
	거점택배	17	아파트 택배 배송 (우체국과 협약)
	카드배송	25	신용카드 배송업무
	서구스토어	9	GS편의점 운영
	회오리세차	5	차량 매장 및 출장 세차
	친환경클린	0	2021년 신규/클린하우스 관리
	생활방역	12	시설 출입자 관리 및 방역
청년자립도전	2	바리스타, 로스팅, 제과제빵 교육, 직무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시간쪼자활	7	드림스타트 가정 정리수납 및 소독 업무진행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게이트웨이	31	자활자립 관련 상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259	

〈자료〉 인천서구청·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2) 자활기업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3개의 자활기업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2020년 1월기준).

[표 3-15]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명	참여인원(명)*	사업내용	임대구분
가나안특송	4	정부양곡택배, 신용카드 배송	유상임대
가까이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2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사업,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주)새롬주거복지센터	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공사,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30	

〈자료〉 인천광역시,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2020.

\*2020년 1월 기준

## 5)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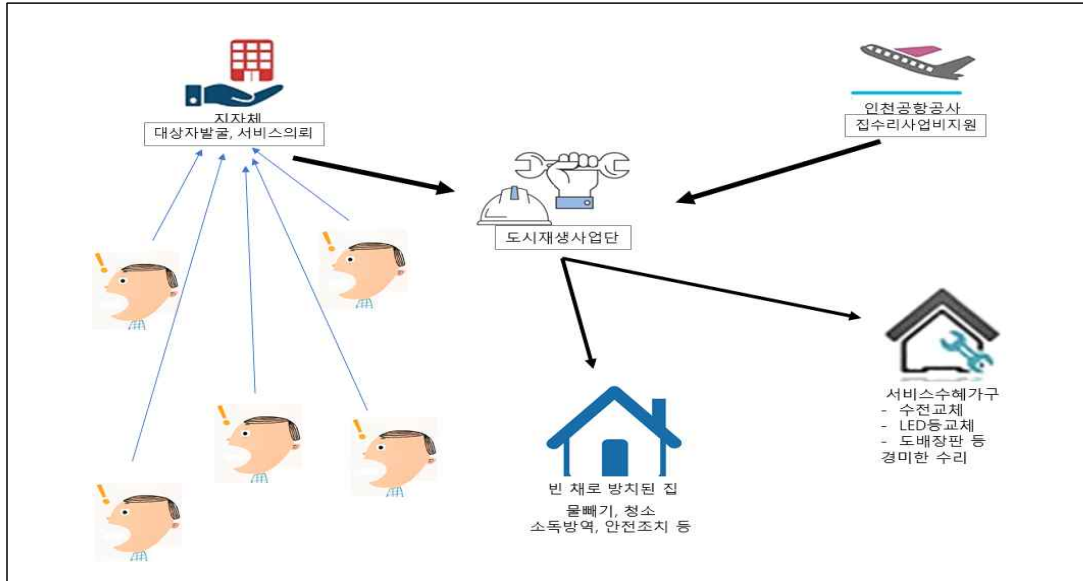
### (1) 자활사업 참여 인원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2019년 정부는 자활일자리 참여 인원 확대를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2019).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 인원 확대를 예상하고 인천광역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내 지역자활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2019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 (2) 지역 밀착형 사업 개발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라, 검단신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택배 및 카드배송 등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를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인천서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센터는 이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카페사업단을 늘려가고 있다. 지역과 밀착하여 사업단을 운영한 결과,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청 주택과, 복지정책과와 함께 환풍기 설치사업,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정리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구청 협지과와 쓰레기 재활용 사업인 클린하우스 운영 등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참여자 확대에 의해 임시직 개념으로 파견 일자리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구청이나 지역 내 복지기관에서 발열체크 등 생활방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해야 하지만 참여자 증가에 부응하는 사업단 마련이 쉽지 않아 이런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림 3-8]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사업단



※ 도시재생사업단을 운영중이며 지자체의 의뢰로 1)경집수리 2)빈집정비 진행하고 있으며 경집수리에 관한 서비스 제공비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 서구청으로부터 사업비 1,000만원 확보함(출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 자활근로 전국 표준화사업 제안서).

### (3) 지역자활센터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에 지역자활센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 운영에 치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지역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활급여 보장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돌봄연계사업 수행에 있어 서비스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때 지역자활센터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거나 자활기업이 계약당사자가되는 형태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4) 자활기금 적극 활용

인천광역시 자활기금 1억원을 활용하여 사업단용 전세 건물을 임대하였고, 구 조례

개정을 통해 구 기금으로 시 자활기금을 상환하였다. 현재 센터 사무실 건물 역시 자활기금을 사용(4억 5천만원)하여 매입하였다.

#### (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및 협력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인천서구청의 자활사업 담당자와 월 1회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게이트웨이 종결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진행되는 통합사례관리에도 참여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차원에서는 공동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6) 집행부와 정기적인 사례회의, 협력

인천서구청 자활사업 담당공무원과 월 1회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 하고 있고, 업무 애로사항(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 대응, 악성민원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7) 자활성과금의 적절한 활용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활성과금을 이용하여 성과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결과, 참여자의 근로의욕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 (8)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인천광역시 차원의 임금보조(정규직만 해당), 복지포인트 20만점(비정규직 포함), 건강검진 20만원 지원, 유급병가 신설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9) 인력충원

자활근로 사업비를 활용하여 직원 3명을 전문가 형태로 추가 고용하여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제4절 부천시

### 1.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1) 연혁 및 비전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과제빵, 리본아트, 미용, 세차 등 4개 자활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가 운영법인으로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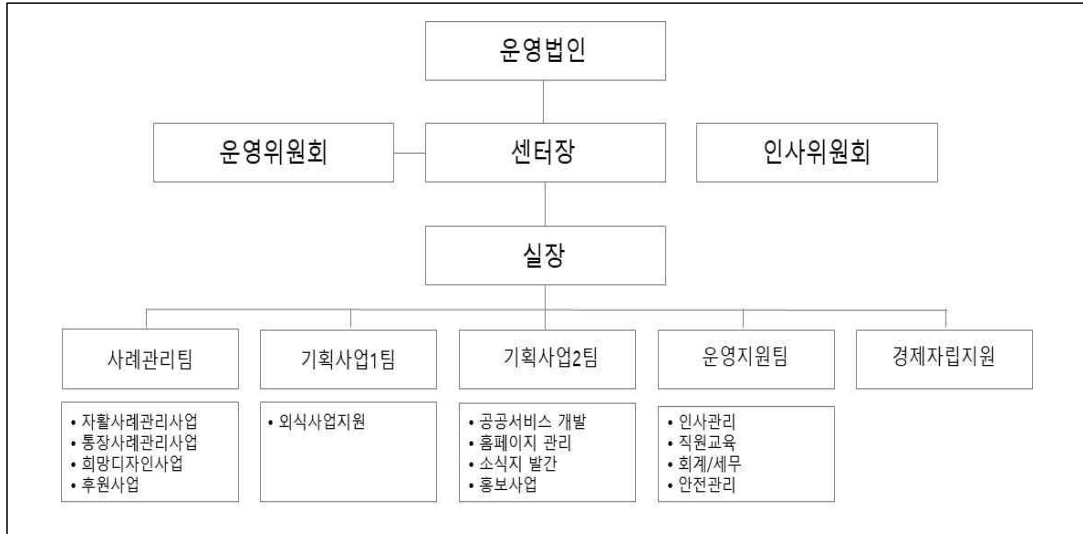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의 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및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저소득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조직 및 운영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은 총 17명으로 센터장 1명, 실장 1명, 과장 3명, 주임 5명, 사회복지사 5명, 자활기업전문가 1명, 이동지원 운전자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은 사례관리팀, 기획사업 1, 2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제자립지원 파트가 구분되어 있다. 사례관리팀에서는 자활사례관리, 통장사례관리, 희망디자인 및 후원사업을 담당하며, 기획사업 1팀에서는 외식사업지원 업무를, 기획사업 2팀에서는 공공서비스 개발,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간, 홍보사업 등을 담당한다. 운영지원팀은 인사관리, 직원교육, 회계·세무, 안전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9]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예산 및 시설(공간)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2020년 예산(경상보조금)은 4,058,117천원이다(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 <https://sosajh.modoo.at/?link=4gk9h2dx&messageNo=7&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1>, 검색일: 2021.6.16.).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77 경용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증금에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건물의 지층 및 3, 4, 5층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4층 일부를 사무실(67㎡)로 사용하고 있으며, 3~5층에 자활근로사업실 및 상담실(전체 698㎡), 지층을 제빵생산장(247㎡)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에 소풍도시락생산장 등 총 4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6] 부천시소사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자산종류	면적(m)	계약방법	사용처
사무실	건물임대	67	보증/월세	자활센터 사무실
사무실/사업장	건물임대	698	보증/월세	자활근로사업실 및 상담실
사업장	건물임대	247	보증/월세	제빵생산장
사업장	건물임대	146	보증/월세	소풍도시락생산장
사업장	건물임대	146	보증/월세	소풍도시락 상담실 및 사업단실
사업장	건물임대	16.4	무상	카페뜨락
사업장	건물임대	79.6	무상	푸드카페뜨락
사업장	건물임대	26.4	무상	마트뜨락

<출처> 부천시소사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기준(2021.6.)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5 참고함

#### 4) 사업 내용

부천시소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고용창출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각 사업 영역별 직능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전문가 양성,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안정화, 안정적 매출구조 마련을 통해 향후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창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외식사업, 공공서비스사업, 생상품판매사업, 기초역량강화사업 4개 영역에 총 13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탈빈곤, 각 사업 영역별 홍보 강화를 통한 매출 증진,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저소득 계층 일자리 안정화를 목표로 외식사업, 공예&교육사업, 인테리어 분야에 총 8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진입형 5개, 사회서비스형 5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자활도우미형, 게이트웨이 등 총 13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2020년 12월 기준 총 152명이다.

[표 3-17]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개시일	참여인원(명)	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제빵사업단	2019.1.1	12	쿠키/제과제빵
	카페뜨락사업단	2019.1.1	5	공공카페(부천시청)
	소풍도시락사업단	2018.1.1	10	간식/도시락 납품
	지역통합돌봄사업단	2019.9.1	11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미라희망수미인사업단	2019.10.1	10	면생리대 생산/판매
사회서비스형	종합청소사업단	2018.1.1	24	소독방역, 청소용역
	주거복지사업단	2019.1.1	14	효자손서비스
	푸드카페뜨락사업단	2019.1.1	12	공공카페(원미도서관)
	수안수사업단	2019.1.1	26	부업사업
	상상공예사업단	2020.4.1	12	수공예, 강사활동 등
청년자립도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2019.3.1	7	청년수급자 취창업 등
자활도우미형	자활도우미사업단	2019.1.1	1	자활사무행정 보조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사업단	2019.1.1	8	자립계획수립, 교육, 실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152	

〈출처〉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6

## (2) 자활기업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8개의 자활기업에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8]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분류	자활기업명	참여인원(명)	사업내용
외식사업	삼미정	3	음식점(한식)
	파티데일리	2	출장음식 서비스업
수공예 및 교육	일등해법보습학원	2	교육업
	에코수협동조합	3	취미여가(체험프로그램)
	수미인협동조합	2	유통판매(홈패션)
인테리어 사업	(주)느티나무종합인테리어	4	인테리어, 주거복지
	(주)조은인테리어	6	인테리어, 주거복지
	(주)우리인테리어	6	인테리어, 주거복지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28	

〈출처〉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2021.6.)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7

## 5)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 (1) 부천시 지역통합돌봄사업단 운영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3개 지역자활센터는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에서는 부천시 10개 광역동 중 3개 권역(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 대상자 연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세탁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에 준하도록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실무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계획서 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함께 준비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락사업단, 미니가든, 상상공예 등 파생사업단이 생겨남으로 인해 센터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참여자 의뢰 과정에서의 시와 협조

최근 참여자의 근로역량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역량이 지나치게 미약한 참여자가 다수 센터로 의뢰될 경우, 자활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 시에 배치되어 있는 자립상담사가 일반수급자로 전환하거나 조건제시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센터로 의뢰된 대상자의 근로역량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센터에서 다시 시에 요청하여 유예처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임가공사업단 참여자 수 제한

근로역량이 매우 낮은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과 이들을 위한 임가공사업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다른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역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수를 20~25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진단을 받거나 단기 요양 등이 필요한 참여자,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참여자의 경우에만 임가공 사업단에 배치하고 있으며, 근

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근로능력이 더 미약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남겨줘야한다고 설득하는 등 자체적으로 임가공사업단 참여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근로역량 미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부품조립과 청소사업단 정도인데 이 사업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상향 사업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4) 정기적인 참여자 욕구조사 실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1년에 한 번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재무, 주거, 가족,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요약하여 센터장, 실장, 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자, 사업단 담당자로 구성된 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공유한다. 회의 결과 도출된 참여자들의 주요 취약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사업 등을 계획하거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한다. 2021년 기획사업은 치과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여성재단, 아름다운가게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모사업 참여는 참여자 지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5) 자활사업단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직원 1인이 1~2개의 사업단, 약 30명의 참여자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는 참여자 수가 타 센터에 비해 적은 편인데 이에 직원들은 담당사업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미래희망수미인사업단에서 면생리대 의약외품 제조업허가를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제빵사업단에서 제과제빵제조업 식약처 HACCP<sup>18)</sup> 인증을 받았다.

18)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그림 3-10]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제빵사업단(HACCP 인증)



## 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1) 연혁 및 비전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자활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1년 6월, 두레간병사공동체를 창립하였으며, 부천시 무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였다. 2007년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위탁받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시작하는 등 돌봄 영역에 집중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위탁 받아 운영해오다가 2019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여 2020년 5월에 인가를 받아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로 운영 중이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는 생생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 가능케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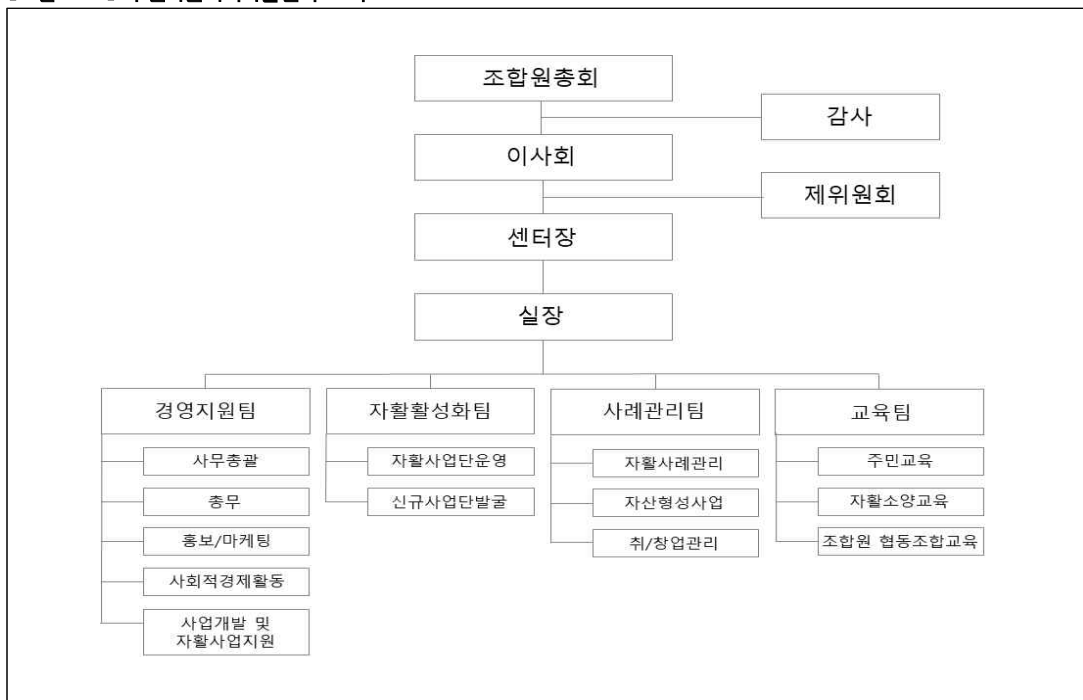
### 2) 조직 및 운영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은 총 16명이며, 센터장 1명,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과

장 1명, 총무팀장 1명, 상담 및 사례관리취업지원 담당 4명, 자활사업운영 담당 7명, 자활기업 지원 담당 1명, 통합돌봄이송지원 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은 경영지원팀, 자활활성화팀, 사례관리팀, 교육팀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사무총괄, 총무, 홍보 및 마케팅, 사회적경제활동, 사업개발 및 자활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활활성화팀은 자활사업단 운영, 신규사업단 발굴 업무, 사례관리팀은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사업, 취/창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팀에서는 주민교육, 자활소양교육, 조합원 협동조합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조직도



### 3) 시설(공간)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224번길 36,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증금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활기업 희망나눔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

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장 등으로 건물의 일부(279.39㎡)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에 CU편의점 등 총 12개의 외부 사업장 및 작업장을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9]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 및 사업단 사업공간 현황

용도	자산종류	면적(m)	계약방법	사용처
사무실	건물임대	99.32	보증/관리비	센터 사무실
사무실	건물임대	180.07	보증/관리비	상담실 및 교육장
사업장	건물임대	39	보증/월세	CU편의점 원미구청
사업장	건물임대	91.02	보증/월세	GS25 중동중앙
사업장	건물임대	52.47	보증/월세	GS25 도당타운
세탁공장	건물임대	281.14	보증/월세	백조크리닝(세탁공장)
작업장	건물임대	99.22	보증/관리비	신규아이템
사업장	건물임대	66.34	보증/월세	토닥토닥 원미점
사업장	건물임대	84.4	무상임대	토닥토닥 오정공원
사업장	건물임대	30	보증/월세	카페토다토다 로스터리 삼곡점
사업장	건물임대	169.97	보증/월세	늘숨
사업장	건물임대	71.08	보증/월세	오백국수
사업장	건물임대	72.25	보증/월세	키친달팽이
사업장	건물임대	29.64	보증/월세	곰꼬미

<출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기준(2021.6.)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2 참고함

#### 4) 사업 내용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과 생산나눔협동의 정신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 18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9개소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진입형 7개, 사회서비스형 8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등 총 18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2020년 12월 기준 총 148명이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자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자활근로 참여자 113명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23.0%(26명)으로 높으며, 조건부수급자가 39명(34.5%), 일반수급자가 48명(42.5%)이라는 점이다. 차상위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조건부수급자였던 참여자가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탈수급을 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높은 자활사업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0】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개시일	참여인원(명)	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지역통합돌봄사업단	2019.8.1	10	가사/영양/청소/세탁이송/케어팜 프로그램
	CU 편의점사업단	2018.1.1	7	편의점(CU원미구청점)
	GS편의점사업단(중동중앙점)	2019.1.1	9	편의점(GS25중동중앙점)
	GS편의점사업단(도당타운점)	2020.11.1	7	편의점(GS25도당타운점)
	자활도우미사업단	2012.1.1	2	사무보조, 행정지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카페 토닥토닥사업단	2018.1.1	4	카페 운영
사회서비스형	오백국수사업단	2018.11.1	7	오백국수 부천심곡점
	복지간병사업단	2001.1.1	6	병원 무료간병
	나눔택배사업단	2019.1.1	10	우체국 택배사업
	키친달팽이(도시락)사업단	2019.10.1	10	도시락판매 및 배송/영양바우처
	오정공원매점&카페사업단	2020.1.1	6	매점형 카페 운영
	늘숨(임가공)사업단	2020.1.1	15	임가공(센서 등 부품조립, 볼펜조립)
	꿈꼬미(청소)사업단	-	6	건물위생관리, 청소·소독방역
	징검다리(세탁 및 아이스팩 등)사업단	2014.1.1	15	신규사업 개발(백조크리닝 세탁공장, 아이스팩 재생사업)
	인턴형사업단	-	7	취업유도형 기업 협약을 통한 자활 인턴사원 근로
	청년자립도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2019.1.1	10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사업단	2016.11.1	2	개별 역량에 맞춘 단계별 근로활동 지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사업단	2013.1.1	15	상담, 교육(맞춤 자활계획 수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합계			148	

〈출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2021.6.)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3 참고함



## (2) 자활기업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9개의 자활기업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8개의 자활기업에 86명이 근로하고 있다.

[표 3-2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명	인증일(최초)	종사자수(명)	사업내용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2010.1.6	40	산모신생아사업, 바우처, 가사보육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사회적협동조합행복나눔	2012.12.28	8	정부양곡, 유통물류
어울림협동조합	2013.11.18	7	공동간병, 개인간병
아이누리협동조합	2015.7.8	3	보육파견
늘봄협동조합	2017.1.12	9	공동간병, 개인간병
행복드림(사협행복나눔지점)	2017.9.29	3	우체국택배사업
드림팀 CU편의점	2018.11.1	4	편의점
희망모아협동조합	2020.2.17	8	건강카페, 노인복지센터, 병원간병
행복물류협동조합	2020.9.29	4	택배 배송
자활기업 참여인원 합계		86	

<출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2021.6.);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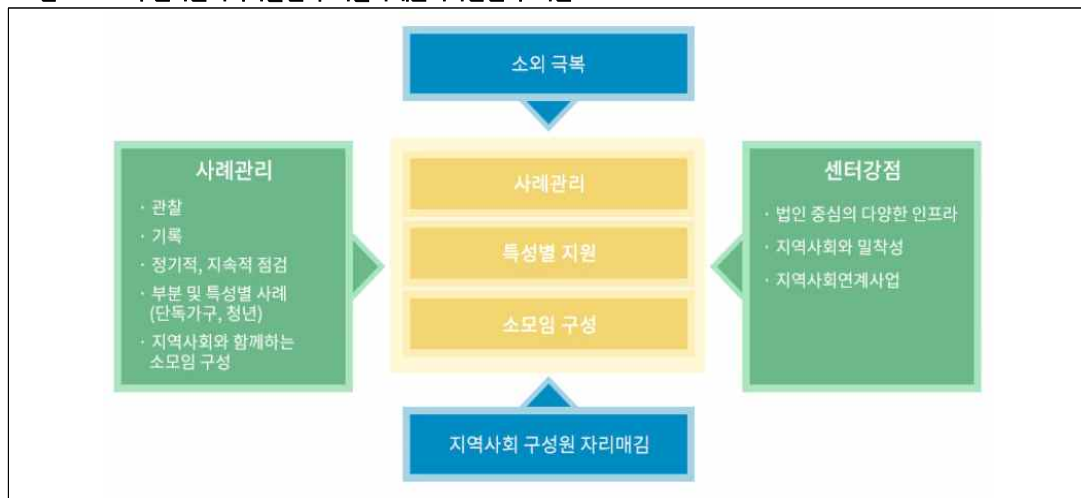
## 5)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 (1)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자들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필요와 욕구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현실장벽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주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를 설치하여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 지속적 자활로 세분화하여 정서적 자활을 위해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역량 강화로 근로동기 부여 및 근로희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자활을 위해 안전한 지지망을 형성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경제적 자활을 위해서는 고용희망을 통한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지원을, 지속적 자활을 위해서는 문제상황 점검 및 자산형성 지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인프라와 지역사회와의 밀착성,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의 강점을 활용해 참여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 비전



〈출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https://bcnnum.or.kr/>)

## (2) 부천민들레주민협동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 자조모임으로 부천민들레주민협동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협동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상보상조 정신으로 조합원이 주인이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활공제협동조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저축성을 함양시키고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활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스스로의 대안운동이다(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s://bcnnum.or.kr/case-management/self-help-group/>, 검색일: 2021.6.16.).

[표 3-2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내 부천민들레주민협동회

구분	내용
조합원 가입자격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자활기업) 참여주민 및 실무자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설 사업체 종사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및 단체
가입비	2,000원
출자금	· 1구좌 5,000원 · 월 1회 이상 출자
사업내용	· 소액대출 : 6개월 이상 성실 활동하신 분, 50만원 한도 내 · 상호부조 : 경조사 지원, 장학사업 등 · 지역연대 교육사업 진행

<출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2021). <https://bcnnum.or.kr/case-management/self-help-group/>. (접속일 2021.6.16.)

### (3) 자활기업과의 연계 협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초기부터 돌봄사업에 특화되었으며, 다수의 돌봄 자활기업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성장한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건물 역시 자활기업 소유이며, 지역자활센터는 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5년 전부터 자활기업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활기업의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수급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2021년 6월 현재 5개 자활기업, 11인 지원). 코로나19 이전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간 업무 공유 등을 위해 통합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 제5절 시사점

평택, 인천, 부천 소재 지역자활센터 사례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감소 및 근로능력 저하,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적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백학영 외, 2018; 유비 외, 2020).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평택지역자활센터와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전환 이후 실제로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이 증가하였고, 지자체 우선 지원사업 대상,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했다. 두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역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비 국고 지원 비율 감소로 인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단의 매출액 발생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근로능력 미약자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에 대한 훼손 우려를 표하는 센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인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이 문제로 인해 실제로 퇴사하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평택지역자활센터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센터에서조차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 기관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뒤늦게 인가를 받은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에 있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2021년에는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게 변경

됨) 전환 초기 인력 채용 및 사업단 확대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초기에 전환한 센터들의 경우, 예산 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나 2020년에 사전 승인에 대한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2020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인가를 받은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며 전환 초기 예산 사용의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고양시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센터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도 자활증진과가 만들어지면서(현재는 생활보장과로 통합) 시 차원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관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에 카페, 매점 설치 시 사업장 무상임대 및 운영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형 자활사업을 ‘꿈이든’이라는 브랜드로 브랜드화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했다.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시 전체 부서에 자활사업에 대해 홍보하고(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우선구매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정보(생산품목 등)도 리스트화하여 공유 등), 지역자활센터가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임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한편 지역자활센터와 집행부의 협력과 관련하여 인천서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집행부(담당 지자체)와 월 1회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자에게 자원을 연계하고, 센터와 집행부가 자활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고충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월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지역자활센터 의뢰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에서 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활센터가 업무 과중 등 센터 내부 정비가 필요한 기간 동안 대상자를 의뢰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최소한으로만 의뢰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서적 자활 및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소재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일년에 한 번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들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를 설치하여 참여자의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수급이나 취창업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정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사례조사 대상 지역자활센터들의 인력 운영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과 자활도우미사업단을 통해 종사자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택과 부천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의 업무 과중 해소를 통하여 종사자들이 신규 사업 발굴 및 HACCP 인증 등 사업단의 질 향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례조사 대상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사업단 공간 마련에 관한 것이었다. 평택지역자활센터 처럼 무상임대의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의 경우, 자활기금의 활용 가능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에 센터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천의 경우, 지역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아이스팩 수거 등 친환경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되 이에 대한 인원수 규정 등 제한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증가할 경우,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서적 자활 등이 필요한 참여자를 위해 임가공사업단 등의 운영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강도가 약한 임가공사업단에 머물기를 원하는 참여자의 사례가 있어 전체 참여자의 역량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부친의 경우에는 임가공사업단 참여 인원을 15~25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자에게는 적합한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되는 2주가 지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가 임가공사업단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사업단에서 바로 실습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덟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조사 결과, 각 지역자활센터와 집행부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없애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용, 자기개발비, 식대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를 통해 인천 내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천시 공동 사업 등 마련, 자활사업 관련 정책 제안 등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모임, 지역사회 내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열번째,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활사업 성과지표는 탈수급율과 취창업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장 및 실장들은 현재의 지표상 자활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근로능력 미약자의 자활사업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침과 성과지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근로능력 미약자들을 위한 정서적 자활과 일 경험 제공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제 4 장

##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

제1절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제2절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제3절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분석

제4절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제5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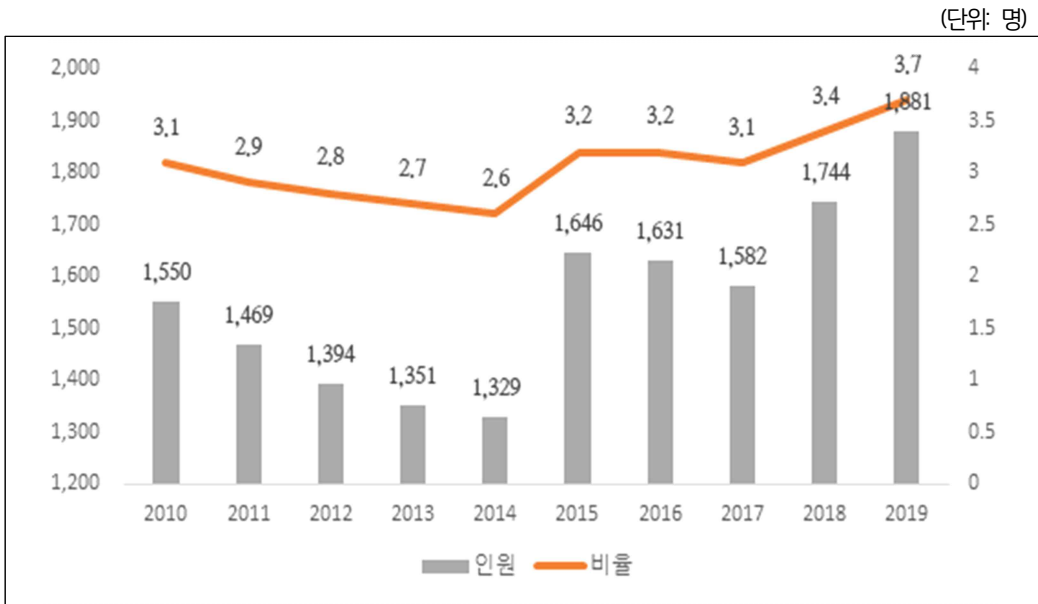


## 제절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

### 1.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림 4-1]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된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1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 3.7%에 이른다.

[그림 4-1] 2010~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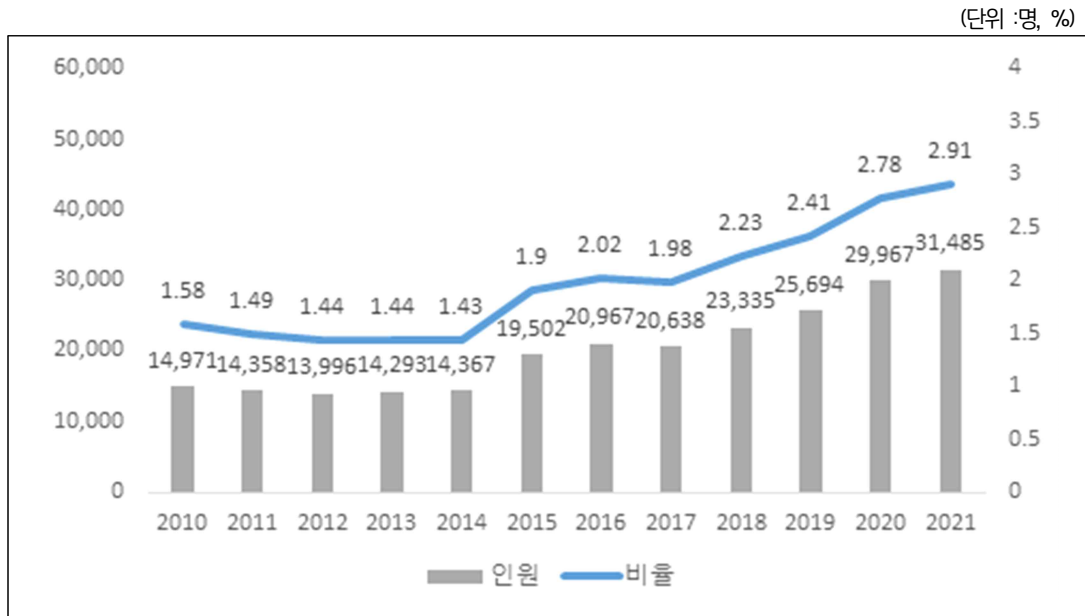


<자료> (수급자 수) KOSIS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 사설)-시도별 (연앙인구) KOSIS 인구동향조사

고양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 비율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14,971명이었던 수급자가 2015년에는 19,502명, 2021년에는 31,485명으로 증가하였고 수급자 비율도 2010년

1.58%에서 2015년 1.9%, 2021년에는 2.9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4-2] 2010~2019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수급자 수) 고양시 통계자료, (연양인구) KOSIS 인구동향조사

자활사업 참여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도 2010년 867명에서 2015년 1,534명, 2021년에는 2,824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에는 2010년 대비 3.25배 증가하였다.

고양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고양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19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자 수 확대정책 및 자활역량평가 점수 조정으로 고용노동부로 배치될 참여대상이 자활사업으로 배치된 부분도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고양시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명)

해당 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수	일반 수급자수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기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고양시 인구	수급자 비율
2010년	14,971	12,895	867	211	4	994	950,115	1.58
2011년	14,358	12,303	832	196	7	1,020	961,239	1.49
2012년	13,996	11,794	886	296	7	1,013	969,916	1.44
2013년	14,293	11,772	961	507	2	1,051	990,571	1.44
2014년	14,367	11,360	1,103	819	2	1,083	1,006,154	1.43
2015년	19,502	16,036	1,534	808	2	1,122	1,027,546	1.9
2016년	20,967	17,610	1,562	610	2	1,183	1,039,684	2.02
2017년	20,638	17,330	1,651	429	2	1,226	1,041,983	1.98
2018년	23,335	19,906	1,722	411	1	1,295	1,044,189	2.23
2019년	25,694	21,659	2,285	356	0	1,394	1,066,351	2.41
2020년	29,967	25,489	2,697	305	0	1,476	1,079,216	2.78
2021년	31,485	26,843	2,824	307	0	1,511	1,080,736	2.91

〈자료〉 (수급자 수) 고양시 통계자료.

## 2.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 1)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활일자리 확대 추진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는 '19년 1월 2.9만 명에서 '20년 1월 3.7만 명, '21년 1월 4.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 경기둔화,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위험도 증가와 일자리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1억원을 투입해 자활사업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존 5만 8,000명에서 6만 3,000명으로 5,000명 증원할 계획(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108 : '21.3)으로 자활사업 대상자는 2021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 경우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에 배치되는 참여자의 근로역량평가 기준이 80점으로 상향조정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참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에는 90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는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단계인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고양시 2015~2020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보건복지부 사업							고용노동부	합계
	자활근로사업단			근로유지	자활기업	게이트웨이 과정 (구디딤돌 포함)	소계		
	시장진입	인턴도움미	사회서비스형						
2015년	15	19	31	7	8	47	127	388	515
	65								
2016년	12	17	27	10	14	51	131	482	613
	56								
2017년	13	9	27	9	12	43	113	404	517
	49								
2018년	13	8	50	8	8	76	163	297	460
	71								
2019년	10	6	84	5	8	110	223	252	475
	100								
2020년	6	8	106	4	10	176	310	163	473
	12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행복e음에서 추출

## 2)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지난 2020년 1년 동안 고양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381명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참여자 381명 중 남성은 53.8%로 여성 46.2%보다 많았고 연령은 20~30대인 청년층이 전체의 18.8%를 차지하였으며 40대는 12.9%, 50대는 37.8%, 60대는 30.4%

를 차지하여 50~60대 참여자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은 50.6세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체		381	100.0
성별	남성	205	53.8
	여성	176	46.2
연령	20대	58	15.2
	30대	14	3.6
	40대	49	12.9
	50대	144	37.8
	60대	116	30.4
	평균 50.6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6	14.7
	중학교 졸업	54	14.2
	고등학교 졸업	195	51.2
	대학교 졸업	74	19.4
	대학원 졸업	2	0.5
가구구성	1인가구	230	60.4
	2인가구	77	20.2
	3인가구	45	16
	4인가구	16	4.2
	5인가구이상	13	3.4
가구주 여부	가구주	307	80.6
	가구주아님	74	19.4
돌봄자녀 여부	있음	22	5.7
	없음	359	94.2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19.9%,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4.7%, 중학교 졸업이 14.2%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은 1인 가구가 전체의 60.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가구가 20.2%, 3인가구 16%, 4인가구 4.2%, 5인가구 이상 3.4% 순으로 다인가

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의 80.6%가 가구주이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19.4%으로 나타났다. 돌봄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체		381	100.0
경제수준	일반수급	49	12.9
	자활특례	7	1.8
	조건부수급	297	77.9
	차상위	28	7.3
근로역량 평가점수	~29	110	28.9
	30~39	188	49.3
	40~49	58	15.2
	50~59	14	3.7
	60~69	3	0.8
	70~79	7	1.8
	80점	1	0.3
	역량평가 평균 35.36점 / 40점 미만 351명 (78.2%)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이므로 시 자활담당공무원 자활역량 평가 점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재량점수 10점이 포함되지 않아 총 90점 만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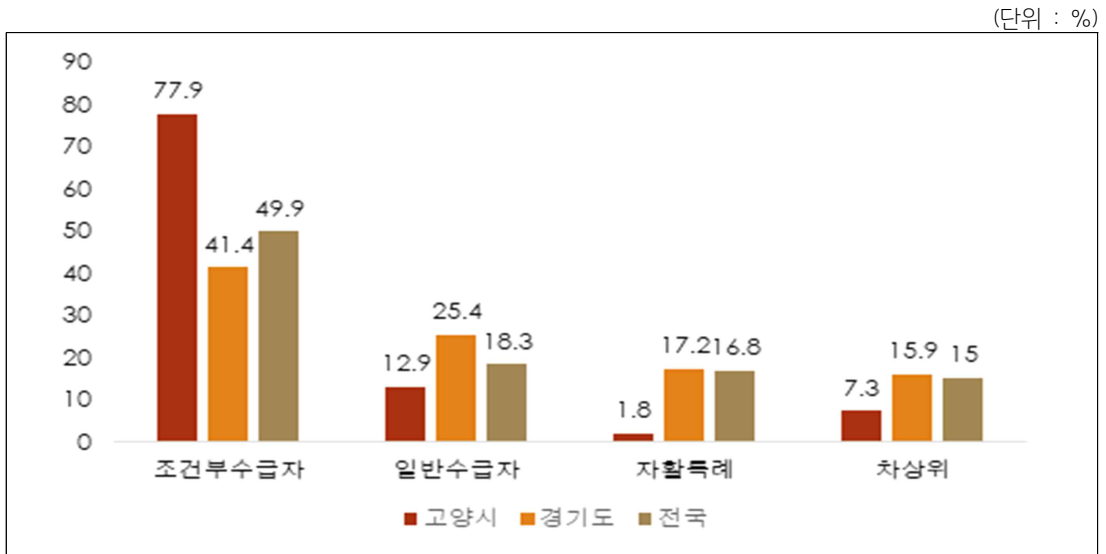
전체 참여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77.9%, 일반수급자 12.9%, 자활특례 1.8%, 차상위가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41.4%, 일반수급자는 25.4%, 자활특례 17.2%, 차상위 15.9%이며, 전국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가 49.9%, 일반수급자가 18.3%, 자활특례 16.8%, 차상위 15.0%의 비율로 나타나 고양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자율적 의지로 참여하는 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자활특례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근로역량 평가점수는 시 자활담당공무원의 자



활역량 평가 10점을 뺀 90점 만점 기준이며 평균은 35.3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점대가 28.9%, 30점대가 4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70점 이상은 2.1%로 자활담당 공무원의 자활역량 평가 10점 만점 최대점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점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 자활역량이 떨어지는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 사업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4-3] 자활사업 참여자 구조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2020.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고양시 내부자료 2021

### 3. 고양시 자활 관련 조례

고양시 자활관련 조례는 2014년 제정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고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이 있다.

자활사업 지원조례에서는 자활사업의 대상범위를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양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체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설립·운영비용,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는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시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다.

**[표 4-5] 고양시 자활 관련 조례**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조례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3	찾아가는 복지과
조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20-11-10	찾아가는 복지과
규칙	고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020-09-11	찾아가는 복지과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고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2003년 6월 제정되었으며 최근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활기금 관련 조례는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 4. 고양시 자활사업 예산

### 1) 2021년 고양시 자활사업 예산

고양시 2021년 자활사업 예산은 본예산 기준 총 4,428,564천원이며 국비는 3,771,689천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177,563천원으로 전체의 4%, 시비 479,31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을 크게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이 2,081,400천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를 차지하고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458,935천원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한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 규모에 따라 국비 70%, 도비9%, 시비

21% 비율로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데 고양시의 경우 2021년 확대형으로 분류되어 364,79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시비로 1인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시비로 통장사례관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7,200천원이 지원되고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정규직에 한해 도·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고양시의 경우 2021년부터 시비로 비정규직의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산형성 예산은 총 1,664,249천원으로 전체 자활사업 예산의 37.6%를 차지한다. 이외 자활장려금,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자활교육훈련 지원,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은 총예산 223,980천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표 4-6] 고양시 2021년 자활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산출근거명	예산액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도우미형 자활급여)	150,000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1,931,400
	소계	2,081,400(47%)
지역자활 센터운영 (국, 시비지원 인건비 포함)	지역자활센터 운영	364,794
	지역자활센터 운영(자체)	35,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11,4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비정규직 추가)	4,8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200
	통장사례관리 운영	35,741
	소계	458,935(10.4%)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Ⅰ	239,400
	희망키움통장Ⅱ	730,000
	내일키움통장	19,600
	청년희망키움통장	118,711
	청년저축계좌(통장)	556,538
	소계	1,664,249(37.6%)
기타사업	자활장려금	24,700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140,000

(단위: 천원)

구분	산출근거명	예산액
	자활교육훈련 지원	20,280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39,000
	소계	223,980(5.1%)
총예산		4,428,564

〈자료〉 고양시 2021 합본예산서, 본예산

고양시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1,409,876천원이었으며 2015년 자활센터가 기본형으로 분류되면서 1,195,530천원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 5,189,213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규모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확대(20%), 표준(54%), 기본(24%), 최소형(2%)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평가주기인 3년 동안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고양시는 표준형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형으로 하향되어 예산이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기본형, 2021년에는 확대형으로 분류되어 자활센터 운영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20년 규모평가는 최근 3년간('17~'19년) 평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이트웨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파일럿, 인턴형, 시간제, 3년이내 자활기업 유형의 참여자 수 산출) 전체 센터 규모를 구분하였다. 고양시는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상향평가되어 인력 등 지원예산이 늘어났지만 250개 센터 중 하향 평가된 센터도 40개소가 있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규모평가 관리가 필요하다.

자활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 예산은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관련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5억에서 7억 정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7억에서 9억 사이였다가 2020년에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약 27억, 2021년에는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고양시의 경우 2020년부터 자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기도 26개 지자체의 평균 예산 28억 6천만원과 비교하면 적은 편으로 이는 참여자 수도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참여자 수의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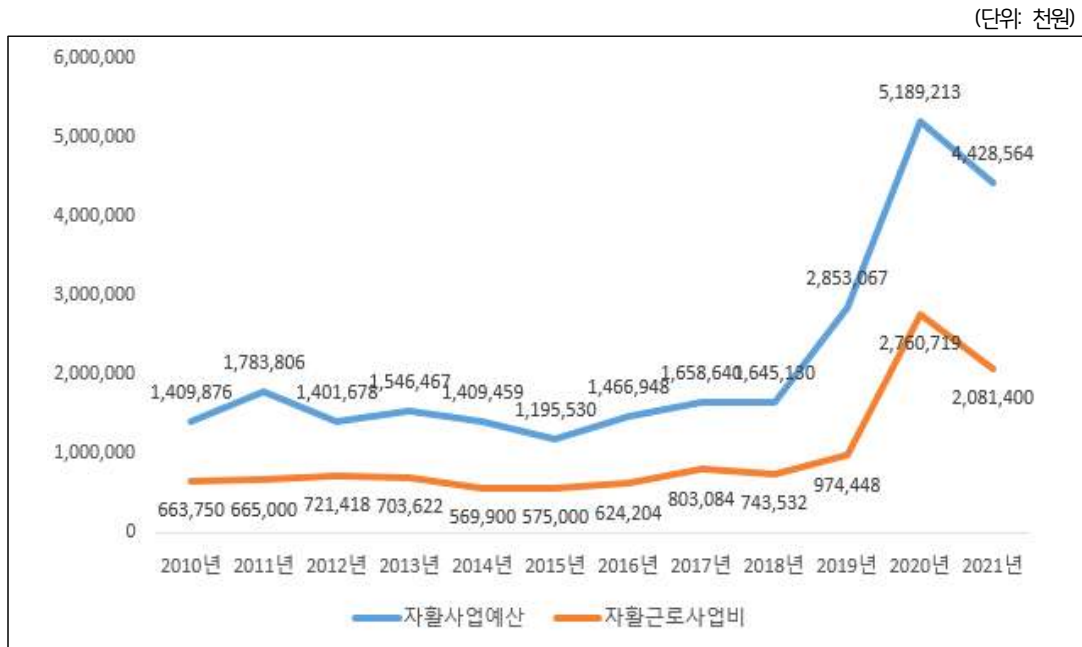
[표 4-7] 고양시 2010~2021년 자활사업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주요예산	
					자활근로 사업예산	자활센터 운영비
2010년	1,409,876	1,020,036	160,908	228,932	663,750	169,150 (표준형)
2011년	1,783,806	960,735	156,216	666,855	665,000	233,980 (표준형)
2012년	1,401,678	1,019,754	161,494	220,430	721,418	244,060 (표준형)
2013년	1,546,467	1,125,346	196,560	224,561	703,622	226,778 (표준형)
2014년	1,409,459	1,062,414	57,734	289,311	569,900	239,660 (표준형)
2015년	1,195,530	879,200	44,324	272,006	575,000	215,900 (기본형)
2016년	1,466,948	1,103,187	56,969	306,792	624,204	190,860 (기본형)
2017년	1,658,640	1,257,515	62,522	338,603	803,084	200,332 (기본형)
2018년	1,645,130	1,223,052	69,903	352,175	743,532	241,812 (표준형)
2019년	2,853,067	2,310,552	154,269	388,246	974,448	264,507 (표준형)
2020년	5,189,213	4,485,287	192,194	511,732	2,760,719	288,695 (표준형)
2021년	4,428,564	3,771,689	177,563	479,312	2,081,400	364,794 (확대형)

<자료> 고양시 2010~2021 합본예산서, 본예산

[그림 4-4] 2001~2021년 고양시 자활사업 예산



〈자료〉 고양시 예산서(2010-2021)

## 5. 고양시청 자활사업 담당 조직(지자체)

고양시청 자활사업 담당부서는 찾아가는 복지과 자립지원팀이다. 2021년 고양시에 찾아가는 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복지정책과에 있던 자립지원팀이 찾아가는 복지과 산하로 배정되었다. 자립지원팀은 자립지원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립지원팀장과 주무관 3명(1인은 9급 행정 서기보시보)이 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받아 조건부수급자 초기상담, 자활역량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배치 등 기존 자립지원 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 신중장년 단기 일자리로 채용이 된 전화 및 안내를 담당하는 보조인력이 있다.

[표 4-8] 고양시 자립지원팀 업무

직위	업무
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 업무총괄, 자활사업 영역,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총괄
주무관	자활장려금,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희망디자인사업, 자활교육훈련지원, 자활기금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
주무관	고용복지센터근무: 자활상담, 위탁 및 참여결과 관리, 차상위자활, 자활불이행,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통장
주무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노숙자 및 부랑인 업무, 서민금융상담센터 업무, 가시간방방문지우너사업, 근로능력평가 관리, 조건부과유예, 조건제시유예,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 자활장려금, 도우미형 자활급여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 (한시적 -1년 기간제)	게이트웨이 전담 관리

〈자료〉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EmplInfo.do?q\\_domainName=394041700](http://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EmplInfo.do?q_domainName=394041700)  
(접속일 2021.4.29.)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조건부수급자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 자활담당 조직을 비교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수원시와 부천시 는 팀장을 제외한 팀원이 4명이며 부평구청은 팀원이 5명이다.

고양시 자립지원팀은 타시 자립지원팀과 달리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사업, 노숙인 지원사업 등 추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자활사업에 집중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과 예산이 복잡다양하므로 경력직 직원들의 배치가 필요하며 자활사업 내용 또한 포괄적이고 복잡적이므로 직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4-9] 지자체별 자활사업 담당조직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부평구청
기초생활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수 (2020.12.31)	· 29,967명 · 2,697명	· 24,318명 · 2,713명	· 29,378명 · 3,099명	· 24,492명 · 3,000명	· 29,070명 · 2,789명
지역자활센터 수	1개	3개	2개소	3개소	2개소
부서명	자립지원팀	자활지원팀	자활지원팀	자활고용팀	자활지원팀
인력 구성 (정규직 공무원)	팀장/팀원 3인	팀장/팀원4인	팀장/팀원3인	팀장/팀원4인	팀장/팀원5인
비고	· 노숙자 및 부랑인 관련 업무 · 서민금융상담센터 업무	· 노숙인 관련 업무	· 노숙인 관련 업무	· 자활업무만	· 자활업무만

〈자료〉 사회보장통계(2020.12). 기초생활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수.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IframePopup.do?pageIndex=1&dataClCrit=WS&dataClNo=1011&pClNo=&dataNo=1&searchCondition=1&searchKeyword=&pageUnit=10>. (접속일 2021.5.22.);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제2절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1. 연혁 및 비전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았다. 지정 당시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수탁·운영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립·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 구축’을 비전으로 ‘참여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협동, 생산, 나눔 실현’, ‘참여주민과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 도모’,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의 생산공동체 지향’을 운영방침으로 하고 있다. 2001년 8월, [자전거 리사이클, 간병인, 취업알선] 사업단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실시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인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사업단, 디딤돌사업단 등 총 5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고양시 내 5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디자인사업, 자활기금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 등 시·군·구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80점 이하인 근로의욕증진 및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 여건 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의 직업경험이 있는 자,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 및 이수 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지역자활센터의 20년 동안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0] 고양지역자활센터 2001~2021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

구분	비고
2001~2005	2001.07.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2001.08. 자활근로[자전거리사이클, 간병인, 취업알선]
	2002.01. 자활근로[자전거리사이클, 간병인, 행복한식탁]
	2002.02. 기관이전[장항동 -> 풍동]
	2003~2007 자활근로[자전거리사이클, 간병인, 행복한식탁, 집수리, 청소, 폐자원 등]
	2003.09. 자활기업 인증[남포자전거]
	2004.02. 기관이전[풍동 -> 주교동]
	2004.07. 자활기업 인증[창조인테리어]
	2004.12. 자활기업 인증[크린서비스청]
2005.12. 자활기업 인증[편한세상, 나눔유통]	
2006~2010	2007.07. 기관명칭 변경[고양자활후견기관 -> 고양지역자활센터]
	2008~2011 자활근로[폐자원, 집수리, 청소, 간병, 영농 등]
	2008.02. 자활기업 인증[그린피플]
	2009.02. 자활기업 인증[파인컴]
2011~2015	2009.08. 자활기업 인증[두손케어간병회]
	2012.01. 자활근로[근로유지, 크린환경, 두손케어, 인큐베이팅, 리폼, 편의점]
	2012.03. 기관이전[주교동 -> 덕이동]
	2012.09. 경기도 자활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2.12. 자활기업 인증[함께여는가게]
	2013.01. 자활근로[근로유지, 두손케어, 리폼, 희망스토어, 게이트웨이]
	2014.01. 자활근로[외식, 리폼, 희망배송, 함께여는식당, 두손케어, 희망스토어, 게이트웨이]
2015.01. 자활근로[외식, 봉제, 희망배송, 함께여는식당, 두손케어, 희망스토어, 게이트웨이]	
2015.06. 지역자활센터 14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2020	2016.01. 자활근로[외식, 봉제, 부업, 희망배송, 함께여는식당, 두손케어, 희망스토어, 게이트웨이]
	2016.06. 지역자활센터 15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07. 자활기업 인증[함께여는식당, 함께나누리]
	2017.01. 자활근로[희망스토어, 두손케어, 희망배송, 부업,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2017.06. 지역자활센터 16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8.01. 자활근로[부업, 다온, 안젤로, 희망배송, 두손케어,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2018.09. 지역자활센터 17~18년 성과평가 중간점검 우수기관 선정
	2019.01. 자활근로[돌봄, 다온, 희망배송, 안젤로, 디딤돌,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2019.12. 자활기업 인증[행복나누리]
	2020.01. 자활근로[돌봄, 다온, 택배, 편의점, 안젤로, 디딤돌,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2020.09. 지역자활센터 19~20년 성과평가 중간점검 우수기관 선정	
2021	2021.01. 자활근로[돌봄, 다온, 택배, 편의점, 슈퍼, 도시락, 디딤돌,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자료>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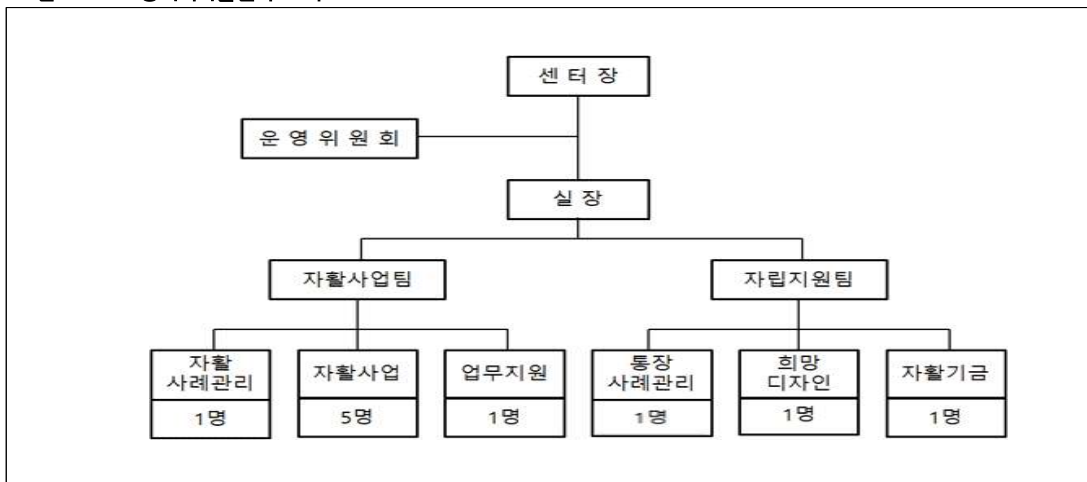
## 2. 조직 및 운영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인력은 총 12명이며, 센터장 1명, 실장 1명, 자활사업팀원 7명, 자립지원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팀 팀원 3명은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자활사례관리, 또 한 명은 자활사업팀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자립지원팀은 팀원 1명이 각각 통장사례관리, 희망디자인사업, 자활기금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건비 재원을 살펴보면, 센터장, 실장, 자활사업 담당자 총 8명에 대해 자활센터 운영비(국비70% / 도비9% / 시비21%)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담당자 1명은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한다. 탈수급유지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탈수급유지지원담당자에게 도비30%, 시비70%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활기금 사업 담당 인력은 고양시 자활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2019년 하반기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던 한시적 추가 종사자 지원비를 받아 2인을 추가 고용했으며 2021년 확대형으로 규모평가를 받으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자활사례관리자와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없는 상태이다.

[그림 4-5] 고양지역자활센터 조직도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3. 시설(공간) 현황 및 위치

고양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무실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75(덕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동구 장항동 등 3개의 외부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 시설현황은 아래 [표4-1]과 같다

고양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공동작업장과 도시락 사업단 작업장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월세 방식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4-11] 고양지역자활센터 시설 현황

구분	항 목	소재지	규모	용도
사무실	사무실	3층	100.0㎡	사무공간(상담실포함)
	문서보관실		24.8㎡	문서보관공간
	교육장		105.1㎡	참여자 교육실
	인큐베이팅사업단		사업단 작업장	43.2㎡
	다운사업단			38.2㎡
	택배사업단·휴게실			
	디딤돌사업단			
자활근로 작업장	8층	174.2㎡	자활근로사업 공동작업장 (일산테크노타운)	
	1층	42.0㎡	편의점사업단 작업장 (고양시 장항동 낙원프라자)	
	지하층	538.2㎡	슈퍼사업단 작업장 (고양시 백석동 벨라시타)	
	1층	34.6㎡	도시락사업단 작업장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4단지 상가 103호)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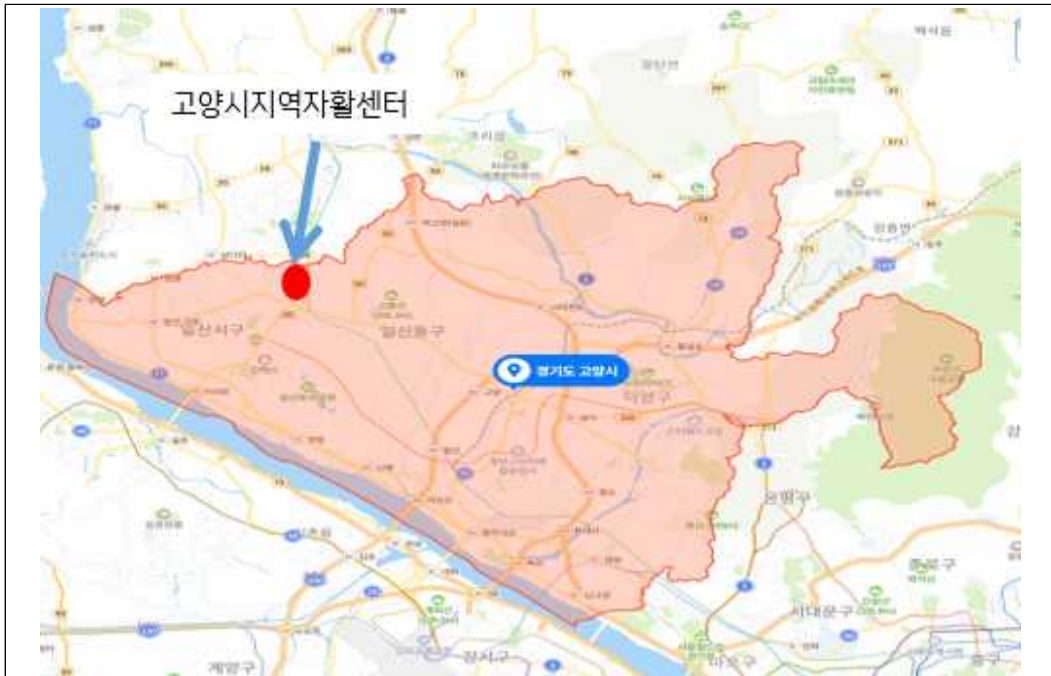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고양시 서구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양시 내에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12월 현재 고양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967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최대이며 조건부수급자수가 비슷한 부천, 수원, 성남시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각각 3개, 3개, 2개소이며 수급자가 고양시의 절반인 시흥시의 경우도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4-12] 경기도 지자체별 지역자활센터 설립 현황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기초생활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수 (2020.12.31)	· 29,967 명 · 2,697 명	· 24,318 명 · 2,713 명	· 29,378 명 · 3,099 명	· 24,492 명 · 3,000 명
지역자활센터 수	1 개	3 개	2 개소	3 개소

최근 자활근로 참여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단 및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위치는 일산서구 끝에 위치하여 덕양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림 4-6] 고양지역자활센터 위치



## 4. 예산

고양지역자활센터의 20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22,690천원이다. 세입에 있어 사업수입이 506,465천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센터 운영이 399,794천원, 자활근로사업 1,931,400천원이고 희망키움통장사업 35,741천원, 희망디자인사업 39,000천원, 교육지원사업 20,280천원이고 자활기금사업이 85,000천원이다.

세출예산 중 사무비 예산은 477,544천원으로 인건비가 433,000천원, 운영비 43,944천원, 업무추진비는 600천원이다. 사업비는 운영사업비가 6,500천원, 자활근로사업이 1,931,400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3,741천원, 희망디자인사업 9,600천원, 교육지원사업 20,280천원, 자활기금사업 55,000천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디자인사업, 자활기금사업은 보조금 수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히 사업비로 편성되었다. 자활매출사업비는 500,020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2,526,541천원이다.

[표 4-13] 2021년도 고양지역자활센터 예산

(단위: 천원)

		세입	
관	항	예산액	
		총계	3,022,690
사업수입	소계	506,465	
	사회서비스사업	6,345	
	자활매출사업수입	500,020	
보조금수입	소계	2,511,215	
	센터운영	399,794	
	자활근로사업	1,931,400	
	희망키움통장사업	35,741	
	희망디자인사업	39,000	
	교육지원사업	20,280	
	자활기금사업	85,000	
이월금	소계	3,737	
	이월금	3,737	
잡수입	소계	1,373	
	101. 잡수입	1,373	
		세출	
관	항	예산액	
		총계	3,022,690
사무비	소계	477,544	

재산조성비	인건비	433,000
	업무추진비	600
	운영비	43,944
	<b>소계</b>	<b>13,500</b>
	이월금	13,500
사업비	<b>소계</b>	<b>2,526,541</b>
	운영사업비	6,500
	자활근로사업	1,931,400
	희망키움통장사업	3,741
	희망디자인사업	9,600
	교육지원사업	20,280
	자활기금사업	55,000
	자활매출사업비	500,020
예비비및기타	<b>소계</b>	<b>5,105</b>
	반환금	5,105

〈자료〉 고양시 2021년도 고양지역자활센터 본 예산

## 5.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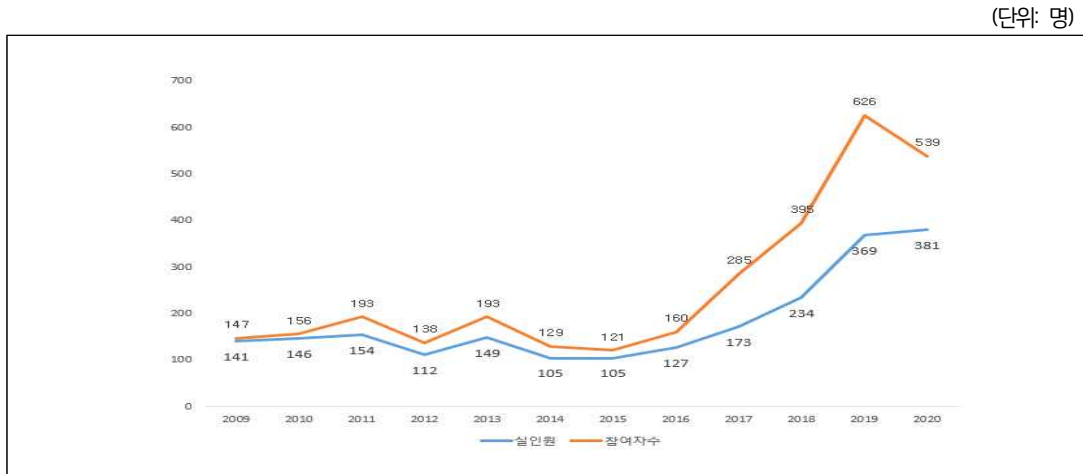
[표 4-14] 고양지역자활센터 2009~2020년 이용자 현황

연도	(단위: 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근로유지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	참여자수	실인원
2009년	70	0	0	53	24	147	141
2010년	83	0	11	48	14	156	146
2011년	65	0	9	95	24	193	154
2012년	0	0	8	114	16	138	112
2013년	130	0	6	35	22	193	149
2014년	74	0	0	32	23	129	105
2015년	75	0	0	32	14	121	105
2016년	102	6	0	35	17	160	127
2017년	153	76	0	41	15	285	173
2018년	216	87	0	79	13	395	234
2019년	349	90	0	177	10	626	369
2020년	331	25	0	173	10	539	381

〈자료〉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고양지역자활센터 이용자 수는 2009년 실인원 141명에서 2013년까지 비슷한 인원을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127명)부터 2020년(381명)까지 참여 실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실인원 증가와 함께 게이트웨이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7] 고양지역자활센터 이용자 현황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6. 사업내용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 사례관리,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5] 고양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단위: 명)

구분	사업내용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단위: 명)

구분	사업내용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취업교육 및 취업 알선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 사려관리)	희망키움통장 1,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 시행 근로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사려관리 및 자립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 사업</li> <li>•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운영</li> <li>•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li> </ul>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사업단은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활사업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6] 고양지역자활센터 2009~2020년 자활사업단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응 리폼 영농 1192명	인큐베이팅 리폼 1192명	인큐베이팅 리폼 두손케어	인큐베이팅 두손케어 크린환경	두손케어 희망스토어 희망배송 외식	봉제 두손케어 함께여는식당 희망스토어
시장 진입형	1192명 청소	1192명 청소	편의점 청소	리폼 편의점	리폼	리폼 희망배송 외식
기타	사회적응	디딤돌 근로유형	디딤돌 근로유지	근로유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총 사업단(명)	7	7	7	6	7	8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 서비스형	봉제 부업 함께여는식당 희망스토어 두손케어	봉제 부업 함께여는식당 두손케어간병	부업 희망배송 다운	디딤돌 다운 안젤로 부업	디딤돌 다운 돌봄 편의점 택배	디딤돌 다운 돌봄 편의점 슈퍼 도시락
시장진입형	외식 희망배송	외식 희망배송 희망스토어	두손케어 희망스토어	두손케어 희망배송	안젤로 희망배송	안젤로 택배
기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
총 사업단(명)	8	9	7	8	9	10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제조업으로 리폼·봉제사업, 농업으로 영농, 서비스업으로 119간병·두손케어·크린환경, 운수업으로 희망배송, 택배·도소매업으로 희망스토어·편의점·슈퍼, 음식점업으로 함께여는 식당·안젤로·도시락 사업단 등 매년 사업단 운영 규모는 6~10개 정도로 평균 7~8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17】 2021년 고양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구분		내용	(단위: 명) 참여자수
자활입문과정	자활사려관리 (게이트웨이)	맞춤형 자활경로를 수립하여 자활을 지원	237
	인큐베이팅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및 근로능력미약자 대상으로 교육, 공동작업을 통한 의욕고취 등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전 단계 과정	1
자활연계과정 (공익형_비수익형 사업)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미약 및 가구 내 여건으로 지속참여가 어려운 수급 참여주민 대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활동 진행(지역 내 공공서비스 진행 등)	9
	디딤돌사업단	지속적 근로활동 사업단 연계실습 및 공동작업 등을 통한 사회 적음 훈련 및 근로 의욕 고취 배양	29
사회서비스형자활 근로사업	돌봄사업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병원,재가 유·무료 간병 지원 사업	5
	편의점사업단	기업연계형 사업의 편의점 사업 운영에 따른 점포 능력 배양 및 관련업종 개인취·창업지원 편의점(CU장항낙원점)운영	14
	도시락사업단	지역사회 내 상호 연계 자활사업으로 자활 근로 참여 주민 및 지역 내 일반 주민대상 도시락 제조 및 자원·판매	6
시장진입형자활근 로사업	다운사업단	제조(볼펜)업체 연계를 통한 자활센터 내 생산·판매 일원화의 자활사업 신규 모델 수립 및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2
	택배사업단	우체국 택배 진행에 따른 사업운영 및 배송능력 배양을 통한 개인취업 등 일자리지원	4
	슈퍼사업단	기업 연계형 사업으로 슈퍼 사업 운영에 따른 점포능력 배양 및 관련 업종 개인취·창업지원(GS THE FRESH 고양백석점운영)	16
합계			총 323명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① 자활입문과정

자활입문과정으로 자활사례관리(게이트웨이)와 인큐베이팅이 있다. 게이트웨이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 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로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IAP(개인별 자립경로)와 ISP(개인별 자활지원계획)를 수립한다. 자활사업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8] 게이트웨이 추진과정**

추진단계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1단계	7일	· 신규위탁의뢰 참여자 사전상담
2단계	1개월	· 사례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 자활역량평가 및 자활사정 조사
		· 자활역량평가 및 자활사정
3단계	2~3개월	· 개별 자립경로(IAP) 및 자립계획(ISP) 수립
		· 자립 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심 증가 훈련
		· 희망디자인사업을 통한 구직 활동 연계
4단계	2~3개월	· 자활근로(디딤돌, 인큐베이팅)사업단 전환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없이 자활사업 직원 중 1명이 게이트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2021년 5월 현재 231명으로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미약 참여주민에게 근로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개개인의 욕구, 능력, 적성에 맞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여자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미술·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근로역량강화 및 의욕고취를 위해 공동작업 운영을 통한 기본 근로시간(일 4시간 이상)을 유지, 운영하고 있다.

### ② 자활연계과정(공익형\_비수익형 사업)

자활연계과정은 공익형 비수익형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업단, 디딤돌 사업단이 있

다.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 미약 및 가구 내 여건으로 지속 참여가 어려운 수급 참여주민 대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딤돌사업단은 고양시 특성화 자활근로사업(비수익\_공익형)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다. 자활인큐베이팅 트랙 과정 종료 후 상위 자활근로사업 연계과정의 지원과 자활사업 이탈 방지의 역할 및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를 통한 자활의욕 회복 지향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 소택배 및 소규모 부업작업, 외부 봉사활동 등의 상시적 공동작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상위실천과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의 단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 ③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돌봄사업단, 편의점사업단, 도시락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사업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여성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단으로서 간병전문교육을 통해 전문 간병인을 양성하고 고양시 관내병원 및 재가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병원 간병 틈새시장인 시간제 낮 간병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사업 안심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출입이 제한됨으로써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사업단은 기업연계형 자활사업 추진 모델로서,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 및 편의점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지속적이며 안정적 일자리지원과 사업능력 배양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자활센터 내 자립·자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단 참여자들은 청결 및 위생관리,接客서비스 관리, 발주 관리, 매출관리 그리고 발주 및 다양한 상품을 통한 편의점 운영전략을 수립한다. 2021년 5월 현재 CU 장항 낙원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락 사업단은 요식업 희망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자활계획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상호연계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조, 배달, 판매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 정식사업단으로 전환, 2021년 5월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다.

####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다운사업단, 택배사업단, 슈퍼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운사업단은 지역사회 내 볼펜 전문제조기업인 (주)자바와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협약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자활센터 자체 브랜드 제품인 ‘공명정대’ 볼펜을 상품화하여 제작과 유통을 주요 업무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총 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 인원이 적지만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미약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부업 아이템 선정에 기반한 공동작업의 특화사업으로의 확장 및 '20년 '부업관리사 민간자격' 개설 및 센터 내 자격 취득 교육사업 진행과 하반기 시장진입형 전환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택배사업단은 고양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의 업무협약 후 2020년 4월부터 디딤돌사업단 내 우체국 소택배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훈련 및 활동과 참여주민 욕구에 부합한 지역 내 추가 배송 단지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평균 180여개의 배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킨텍스 원시티지구,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에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는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슈퍼사업단은 기업연계형사업으로 2020년 슈퍼사업 업무협약 및 최초 운영을 시작했다. 슈퍼사업단은 슈퍼사업운영에 따른 점포능력 배양 및 관련 업종 개인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GS THE FRESH 고양백석점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슈퍼사업을 기반으로 물류(슈퍼, 편의점), 유통(배송, 택배), 도시락(식재료 사용), 카페(자원재사용) 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 내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업단이다.

## 2) 자립지원사업

### (1)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지역 내 일하는 저소득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9] 자산형지원사업

(단위: 명)

사업명	지원자격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통장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 통장	신청 당시 최근 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시장 진입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월에는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세)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청년저축 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다. 매월 소득미달, 미납자를 중심으로 납입독려를 통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이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인원이 가장 많다. 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9년 많이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은 탈수급을 위한 취업지원, 희망키움통장 II 는 자립목표에 부합한 교육지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및 통장유지, 자격증 취득, 청년저축계좌는 신규가입자 가입에 대한 안내, 자립목표에 부합한 교육지원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표 4-20] 자신행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희망키움통장 I	26	39	29	14	30
희망키움통장 II	137	337	297	101	238
내일키움통장	7	3	21	7	20
청년희망키움통장	-	-	51	5	53

〈출처〉 고양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 (2) 희망디자인사업<sup>19)</sup>

희망디자인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를 하는 사업이다. 센터 내 취업정보실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에게 문자발송, 지역 내 일자리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구인·구직 등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재무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접적인 취·창업 지원 외에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습관 형성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목표는 구직상담 120건, 구인상담 150건, 취업코칭 250건이다.

<sup>19)</sup> 재무 및 취업 상담사 배치 사업

### (3) 교육훈련지원사업

교육훈련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직능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주체성을 고취시키고, 실무자에게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3)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뜻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자활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한다.

2020년 현재 고양시는 5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갓피플은 사업자 등록형태가 주식회사이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이다. ‘창조인테리어’는 2004년 고양시 자활기업으로 처음 설립된 집수리 업체이고 2020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은 223,357천원이며 평균고용인원은 2명, 1인당 월평균 급여는 1,350천원이다. 2008년 설립된 청소, 방역업체 ‘그린피플’은 연평균 매출액이 861,663천원이고 2021년 현재는 상호명을 ‘갓피플’로 변경하였다. 청소 및 방역, 해충퇴치 등 환경개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8년 고양시 자활기업 인증 이래 매년 높은 매출 신장을 통해 매출의 1%를 지역사회자원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90%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직원 채용, 사회적 기업 인증, 장애인 재활학교 현장실습 훈련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가적 질병 관리 필요시유·무상으로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역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주)보광훼미리마트와 자활사업단으로 편의점 운영권을 협약 체결하여 운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2년만에 자활기업으로 CU ‘함께여는가게’가 설립되었다. 연평균 매출액은 2,712,186천원으로 평균고용인원 6명,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123천원이다. 2016년 배송, 택배사업을 하는 ‘함께 나누리’가 설립되었고 연평균 매출액은 164,741천원, 평균 고용인원은 2명, 1인당 월평균 급여는 1,988천원이다. 자활기업 ‘행복나누리’는 2013년 시범 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자활기업으로

전환 성공하였으며 고양시 정부양곡 및 경로당 배송업무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PC 보급 사업, 학교급식 배송 수행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고양시 배송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평균 고용인원은 4명, 1인당 월평균은 1,869천원이다.

이외 2020년 자활기업 2개가 폐업하게 되었는데 2009년 설립된 ‘두손케어간병회’는 병원의 통합간병시스템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인력 출입제한으로, 그리고 2016년 설립되어 식당을 운영했던 ‘함께 여는 식당’은 운영 장소였던 마두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업을 하였다.

고양시의 경우 자활기업 수나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은 편으로 앞으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21] 고양시 자활기업 운영 현황

(단위: 천원, 명)

기업명	설립일	서비스 유형 (업종)	연평균 매출액	연 수익액	평균 고용 인원	1인당 월평균 급여	사업자 등록형태
창조인테리어	04.07.01.	집수리	223,357	13,670	2	1,350	개인 사업자
갯피플	08.01.30.	청소,방역	861,633	75,403	2	2,475	주식 회사
함께여는가게	12.12.17.	편의점	2,712,186	-11,951	6	2,123	개인 사업자
함께나누리	16.07.28.	배송,운전 (양곡택배)	164,741	46,020	2	1,988	개인 사업자
행복나누리	19.12.20.	배송,운전 (양곡택배)	189,772	59,956	4	1,869	개인 사업자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 7. 고양시 자활사업 특성

### 1) 기업연계형 자활사업 전국 최초 추진 및 보급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전국 최초로 2010년 (주)보광훼미리마트와 자활사업단으로 편의점 운영권을 협약 체결하여 운영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국 자활센터 내 신규 자활사업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고양시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의 자활사업 참여주민 외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으로 CU새싹가게, GS내일스토어, 7eleven엔젤스토어 등의 편의점사



업이 보급되었다. 2021년 현재 전국 편의점사업(자활근로 및 기업) 183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2013년에는 CU ‘함께여는가게’ 백석점 및 화정점 2개소가 사업 개시 후 현재 까지 자활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 전환 시 통상 4~6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이 사업은 2년 소요로 자활기업 전환 기간을 축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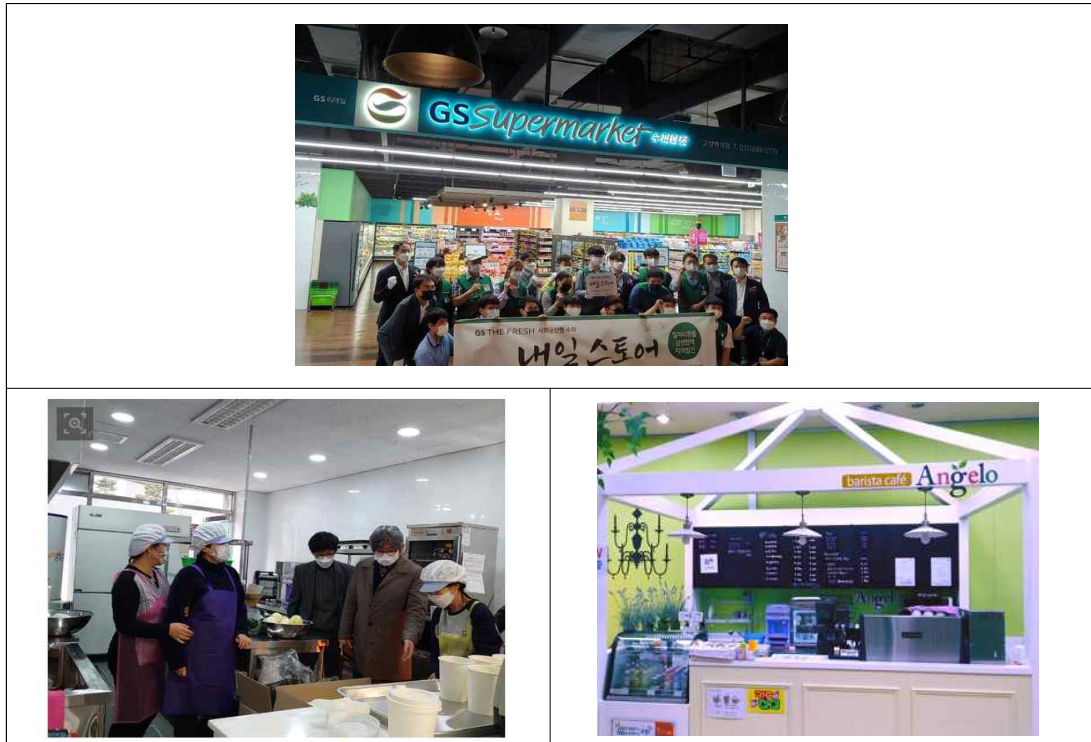
[그림 4-8] 고양시 기업연계형 자활사업 - 우수 자활기업(CU ‘함께여는가게’ 백석점, 화정점)



## 2)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 구축

고양시는 각 자활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는 2020년 9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자활근로 기업연계형 슈퍼사업 ‘GS THE FRESH 고양 백석점’을 출범시켰다. 2021년 현재 슈퍼사업 기반을 통한 물류(슈퍼, 편의점)·유통(배송, 택배)·도시락(식재료 사용)·카페(자원재사용) 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 내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4-9] 고양시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 구축



### 3) 지역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및 부업관리사 민간 자격증 개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2018년 고양시 관내 자활근로작업장 설치 및 부업작업장 설치(예정)를 통한 경제적 지역 상생의 도시재생 모델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연계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창출) 협약 등 공동작업 형식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업관리사 민간자격증을 개설·보급할 예정이다.

### 4) 세대간 통합 일자리 창출

고양지역자활센터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통합형 일자리를 통해 상호 간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대와 지역사회 간 분리, 분열 현상을 극복하며 지역사회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제3절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분석

### 1.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탈출, 자활 지원을 위해 형성되었으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보장기금’이 설치되었고 2006년 ‘자활기금’으로 개정되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200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운용하여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2003년 제정되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의 자활기금 조례는 타 지자체 자활기금 조례와 다르게 자활기금 뿐 아니라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관리·운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도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자활기금의 활용범위와 용도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조례 2장에 저소득주민복지사업 관련 조항이 있고 급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 3장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자활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규모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 4장에는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상과 지급정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따라서 그 사업취지에 맞게 자활사업에 초점화하

여 조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중 사업 자금 대여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지원에 대한 명시는 없어 자활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모호함이 있다.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기금활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집행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10]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2.8.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2>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8.7>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자활사업실시에 따른 수익금
6.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1.2>

1.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3.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④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2.8.7, 2013.12.24., 2020.11.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제2장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7>

1. 65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2.8.7., 2017.9.29., 2019.10.18.>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8.7., 2019.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2.8.7>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조리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8.7>

② 급여는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 제3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3조(사업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자보전 <개정 2016.11.8.>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6.11.8.>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8.7>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1.8.>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의 비용 <개정 2012.8.7>

제14조(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07.11.2., 2012.8.7., 2016.11.8.>

2. 자활기업 <개정 2012.8.7., 2016.11.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8.7>

4.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6.11.8., 2019.12.31.>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8.7., 2016.1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 제4장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제1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지급대상
2.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3.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4. 장학생 선발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8]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1] 보건복지부 제시 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li> <li>②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li> <li>③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등)</li> <li>④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li> <li>⑤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li> <li>⑥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li> <li>⑦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li> <li>⑧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li> <li>-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li> <li>-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li> <li>-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li> <li>※ 기타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 가능</li> </ul> </li> <li>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li> <li>⑩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비 위탁 및 해당 사도 자활기금의 일부 지원</li> </ul>
---

〈출처〉 2021년 자활사업 안내

고양시도 자활사업활성화 목적에 맞게 용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 자금관리 운용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해야하고 고양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 2. 고양시 자활기금 운용

고양시 자활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고양시 자활기금 조성액은 3,603,444천원이다. 2019년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178억원, 제주도는 67억원, 성남시가 54억원 등으로 많이 확보한 곳도 있지만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곳도 7개곳이 있다. 20억 미만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이 76.3%이며 40억 이상은 2.2%에 불과하다. 고양시는 36억으로

자활기금 조성금액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4-22]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소)

자활기금 조성금액	지자체수	자활기금조성금액	지자체수
0	7(3.1%)	10-20억원 미만	72(31.6%)
0-5 억원 미만	29(12.7%)	20-40억원 미만	49(21.5%)
5-10억원 미만	66(28.9%)	40억원 이상	5(2.2%)

<출처> 최병근, 자활기금 관리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고양시 자활기금의 연도별 집행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4-23] 고양시 자활기금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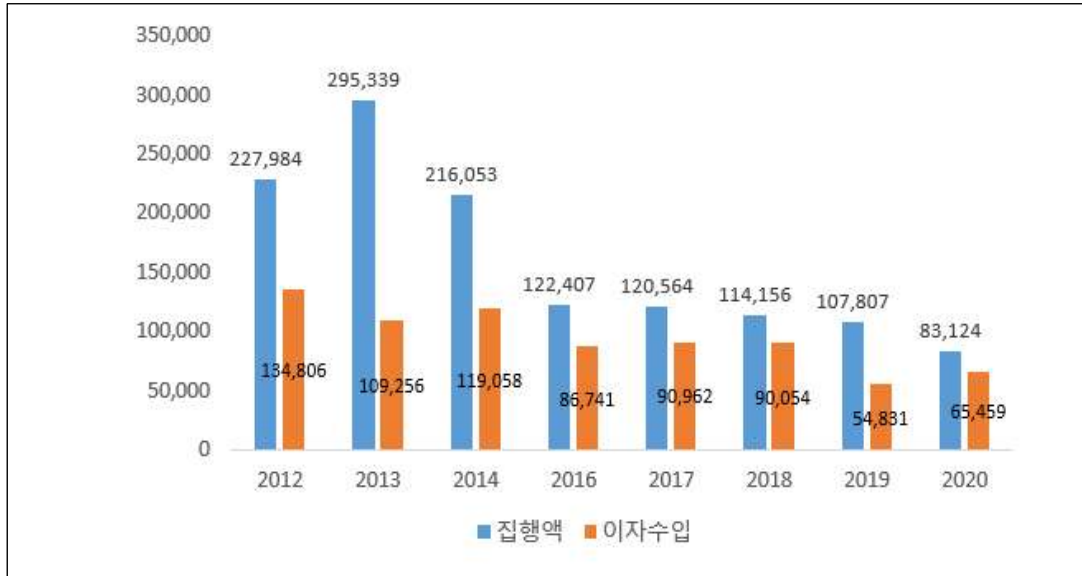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①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②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2016	145,981		86,885	59,096	122,407	122,407	0	23,574
2017	95,744		90,692	5,052	120,564	120,564	0	△24,820
2018	117,899		90,054	27,845	114,157	114,157	0	3,842
2019	277,686	200,000	54,831	22,855	107,807	107,807	0	169,879
2020	65,361		54,361	0	71,213	71,213	0	△5,852
2021	42,213		42,213	0	110,000	110,000	0	△67,787

<출처> 고양시, 「2021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계획, 2021.

[그림 4-12] 고양시 자활기금 집행 현황(2012-2020)

(단위: 천원)



〈출처〉 고양시, 「2021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계획」, 2021.

고양시 자활기금의 이자수입은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는 이자 수입이 65,469천원이다. 자활기금 집행액도 2012년 227,984천원에서 2013년 295,339천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83,124천원이다.

2016년부터 집행액을 비용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로 나누어 살펴보면 100% 비용자성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원금보전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융자성 사업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활기금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표4-24]와 같다. 고양시는 4년 평균 집행액이 85,000천원인 반면, 부천시 4년 평균 454,884천원, 성남시 313,034천원, 평택시 189,224천원으로 고양시보다 자활기금 집행액이 높다. 또한 고양시 자활기금 집행액은 자활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 24개 지자체 집행액 평균인 122,974천원보다 적어 보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4-24] 경기도 주요 지자체 자활기금 활용 현황

(단위: 천원)

기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년 평균
고양시	90,000	80,000	80,000	90,000	85,000
부천시	382,115	558,773	457,913	420,736	454,884
성남시	610,335	194,477	216,307	231,016	313,034
평택시	93,395	34,790	160,280	468,430	189,224
경기도 지자체 평균(24)	98,375	127,930	116,125	149,464	122,974

〈출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외,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2021.

고양시가 2020년 자활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은 저소득주민 장학사업과 기초생활보장증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증진사업은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 담당자가 집행하고 있다. 고양시 자활기금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와 장학금 지원사업과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포나 사업장 임대 용자금,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융자성 사업 등 자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주민 장학사업은 자활기금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4-25] 2020년 고양시 자활기금 사업

구분		사업내용	(단위: 천원)	
			집행액	지원가구
			83,123	118
장학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 장학금지원</li> </ul>	30,000	15
기초생활 보장 증진사업	내일찾기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5~39세(청년희망키움저축계좌 가입자)에게 국가기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li> </ul>	3,000	3
	안심케어 서비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취약계층 병원 간병서비스 지원</li> <li>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대상</li> <li>일 8시간, 최대 2주 서비스 제공</li> </ul>	2,42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아동(만3~12세)이 있는 일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li> <li>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대상</li> </ul>	3,191	5
	자립성공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및 유지자격려금 지원</li> <li>취업·창업 시 인센티브 지원</li> </ul>	4,600	26
	자활플러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험료, 구직활동비 등 지원</li> </ul>	21,280	55
	자활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컨설팅, 문화활동지원</li> </ul>	906	7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기금</li> <li>전담관리자 인건비</li> </ul>	17,718	-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 제4절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

자활사업은 궁극적으로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급권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취업 및 창업을 통한 탈수급 등 경제적 성과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자활사업의 취·창업률, 탈수급률, 자활성공률을 자활사업 성과지표로 평가한다.

또한 2004년까지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부의 예산 지원방식이 2005년에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성과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운영규모 평가는 3년을 평가주기로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규모, 지역자활센터 참여 수급자 등을 평가하여 규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 1. 자활사업 성과지표

#### 1)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자활사업 정책에서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율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과로서 측정하고 있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수급하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자의 비율이다. 탈수급률은 자활사업 참여 생계 수급자 중 탈수급한 자의 비율이며 자활특례가 포함된다.



탈수급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취·창업률은 2016년 30.30%에서 2018년 20.88%, 2019년 10.31%에서 2020년은 6.2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창업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4-28] 고양시 자활성공률, 탈수급률, 취·창업률(2016-2020)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활성공률	39.90	95.80	61.65	48.76	50.88
탈수급률	49.99	61.29	35.19	34.02	40.00
취·창업률	30.30	25.80	20.88	10.31	6.25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자활사업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계속 수정되어왔는데 2016년에는 취·창업률 산식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뿐 아니라 자활특례, 차상위자 수를 분모로 포함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취·창업률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생계 급여 수급자 수(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형)만 분모로 포함했고 자활성공률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증가비율을 가중치로 주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근로유지형 비율을 지표에서 제외하였다가 2019년부터는 근로유지형 기준비율을 준수할 경우(30%이하) 가점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자활참여자 성공률 산식은 계속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자활사업의 성과지표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 등 경제적 성과, 결과적 성과 중심이라 볼 수 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계량화 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기회주의적 전략 행동을 취하면서 사업에 잘 참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탈수급 및 취·창업 지표는 지자체가 좋은 성과평가를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탈수급이 용이한 1,2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단에 배치할 수 있고 탈수급 및 취·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식의 분모가 되는 업그레이드형 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 배치를 주저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역량이 떨어지는 수급자들을 위한 사업인 근로유지형 사업을 축소하게

만들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자활사업의 주요한 목표가 취·창업, 탈수급 등 경제적 자활이긴 하지만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자활의 다른 속성인 정서, 심리, 사회적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자활센터 운영 규모 평가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규모, 지역자활센터 참여 수급자 등 운영 규모를 결정하여 규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20년 평가에서는 연도별 해당 센터의 연간 자활사업 참여자 명단에서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한 후 최근 3년('17~19년) 평균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였다.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가 배치된 센터는 미반영),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파일럿, 인턴형, 시간제, 3년이 내 자활기업 유형의 참여자 수를 산출하였다.

[표 4-29]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천원)

계	확대형(20%)	표준형(54%)	기본형(24%)	최소형(2%)
개소수(개)	50	135	61	4
종사자 정원(명)	9	7	5	4
예산(천원)	363,354	295,765	225,625	182,032

〈출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2020.

고양시의 경우 2014년까지 표준형이었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형, 2018년부터 2020년 표준형, 2021년 부터는 확대형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자활센터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직무의 범위나 업무 강도가 타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 다양하고 높지만 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8.4%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93.5%에 달한다.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정원표상의 인원을 미채용으로 응답한 기관이 132개소이고 호봉삭감 종사자는 총 98명, 각종 수당 등 인건비 미책정 예산이 총 1,897,797천원이다.

규모평가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규모별 평가결과 적용시 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된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2021년 현재 확대형으로 인건비 기준이 9명이지만 8명만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양시는 2015년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규모평가 유형 하락을 했을 때 인원 감축을 해야 했으나 인원 감축 대신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호봉축소)을 선택했다.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인력운동을 위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포괄보조금 방식의 운영보조금 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한 항목별 예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고양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체인구의 2.91%이다. 고양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5년 이후 급증하였고 특히 사업단 배치 전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단 개발·운영과 사업 공간 및 인력확보가 급선무이다.

둘째,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50~60대 중고령 비중(68.2%), 1인 가구 비중(60.4%), 조건부수급자 비중(77.9%)이 높고 참여자들의 근로역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주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역량 강화 및 역량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양시는 자활센터 규모평가에서 2015년 기본형, 2018년 표준형, 2021년 확대형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활사업 예산이 2018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연동되어있는 자활 근로 예산이 2021년 현재 약 20억으로 경기도 내 26개 지자체 평균 예산(28억 6천만원) 및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고양시청의 자립지원팀은 타 시의 자활업무 담당부서와 비교해 볼 때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노숙인 지원 등 자활사업 외 추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많고 담당 공무원의 경력이 다소 짧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과 예산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대한 대응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력이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인력은 총 12명으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자활사례관리자와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없는 상태이고 자활도우미, 자활 사업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하고 사례관리 및 신규



사업 개발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충원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고양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대이다. 조건부 수급자 규모가 비슷한 부천, 수원, 성남시는 지역자활센터가 2-3개 있고 수급자가 고양시의 절반인 시흥시도 지역자활센터가 2개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치가 일산서구 끝자락에 위치하여 덕양구 거주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도 협소하므로 증가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수용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 또는 분소 운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2010년 (주)보광훼미리마트와 자활사업단으로 편의점 운영권을 협약 체결하여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슈퍼사업을 기반으로 물류(슈퍼,편의점)·유통(배송,택배)·도시락(식재료 사용)·카페(자원재사용) 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내 자활사업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 외 지역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및 세대간 통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양시의 강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신규 사업단 개발을 통한 사업단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고양시는 자활기금 조성액이 약 36억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조성금액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활기금 이자수입의 감소와 함께 자활기금 집행액이 매년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장학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점포나 사업장 임대 용자금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활기금 원금보전 보다는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과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여 자활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성 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후원 등 자활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고양시의 자활성공률은 2016년 39.9%, 2017년 95.80%로 급상승했다가 2020년 50.88%로 나타났다. 탈수급률은 2016년 49.99%에서 2017년 61.29%로 상승했다가 2018, 2019년은 35%내외, 2020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 탈수급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취창업률은 2016년 30.30%에서 2018년 20.88%, 2019년 10.31%에서 2020년은 6.25%로 점차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창업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기회주의적 전략행동을 취하면서 사업에 잘 참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활의 다른 속성인 정서, 심리, 사회적 측면과 사업 과정을 강조한 지표로 지표 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뿐 아니라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정서적 자활을 위한 사업에도 힘을 써야한다.

## 제 5 장

# 고양시 자활사업 운영실태 및 참여자 · 종사자 FGI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FGI 분석

제3절 자활사업 종사자 FGI 분석

제4절 소결



## 제절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자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 1) 조사방법

현재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을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에 성공하여 실제 분석대상이 된 참여자는 232명이다.

#### 2) 조사내용

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자활사업 참여 이전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견해와 같이 5항목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세부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참여자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구주여부, 주거형태, 동거가족수, 만성질환 유무,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형, 월평균 가구 소득, 보유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자활근로의 취업경험 여부, 창업(자영업)경험 여부, 행복도(삶의 평가)
자활사업 참여 이전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시기, 자활사업 참여이전 경제활동상태, 자활사업 참여전 일, 실직기간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센터까지 이동시간, 센터 이용 교통수단, 자활사업 참여 경로, 자활사업 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 전 정보의 충분성, 초기 자활계획 수립 시 충분한 논의 정도, 상담 및 교육 훈련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일반적인 소양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자활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 이용경험 여부 및 만족도, 취업 및 창업관련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이용경험 여부 및 만족도, 물리적 환경 만족도 (센터 위치, 센터 환경)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직무, 자활급여 수준, 근무시간, 근로강도, 참여기간, 근무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직원 및 동료관계 만족도(직원과의 업무적 관계, 직원과의 정서적 관계, 자활사업 참여 동료와의 관계, 자활센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경제적 변화(가계소득 도움 정도), 개인적 변화(일할 의욕, 기술습득, 자기효능감,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건강변화(건강, 우울감, 심리적 안정) 가족 사회적 관계 변화(가족관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보람), 탈수급 가능성, 자립가능성, 앞으로의 자립 대책
자활사업에 대한 견해	자활사업의 심리적-저서적 자활에 도움정도, 자활사업의 취 창업 도움정도,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 자활사업 관련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자활지원서비스 부족에 대한 인식, 자활근로에 대한 인식, 일자리 타서비스 연계에 대한 인식, 인식개선 관련, 경제적 보상 정책 필요도, 자활지원서비스 정책 필요도, 일자리 정책 필요도, 인식개선 필요도,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 2. 조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총 응답자 232명 중 남성은 129명(56.5%), 여성은 99명(43.4%)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18명(7.8%), 30대 6명(2.6%), 40대 36명(15.6%), 50대 87명(37.7%), 60대 84명(36.4%)으로 50대와 60대가 전체 응답자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 30대보다는 오히려 20대 인원이 많으며 응답자 평균 연령은 53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3명(10.2%), 중학교 졸업 32명(14.2%), 고등학교 졸업 122명(54%), 대학교 졸업 44명(19.5%), 대학원 졸업 5명(2.2%)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 75.7%로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는 미혼이 81명(36%), 기혼 33명(14.7%), 이혼 96명(42.7%), 사별·별거 15명(6.6%)으로 결혼한 응답자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비율보다 이혼한 경우가 3배 정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이혼과 관련하여 필요 시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가구주인 경우가 159명(73.3%), 가구주가 아닌 경우 58명(26.7%)으로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대상자 대부분이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89명(38.7%), 임대주택 76명(33.0%), 무상임대 20명(8.7%)로 월세와 임대주택, 무상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체		232	100.0
성별	남성	129	56.5
	여성	99	43.4
	모름/무응답	4	-
연령	20대	18	7.8
	30대	6	2.6
	40대	36	15.6
	50대	87	37.7
	60대	84	36.4
	모름/무응답	1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	10.2
	중학교 졸업	32	14.2
	고등학교 졸업	122	54.0
	대학교 졸업	44	19.5
	대학원 졸업	5	2.2
	모름/무응답	6	-
결혼여부	미혼	81	36
	기혼	33	14.7
	이혼	96	42.7
	사별, 별거	15	6.6
	모름/무응답	7	-
가구주 여부	가구주	159	73.3
	가구주아님	58	26.7
	모름/무응답	15	-
주거형태	자가	9	3.9
	전세	18	7.8
	보증부 월세	18	7.8
	월세	89	38.7
	임대주택	76	33.0
	무상임대	20	8.7
	모름/무응답	2	-



## (2) 만성질환여부

응답자의 만성질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명(49.6%)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만성질환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만성질환 있음	112	49.6
만성질환 없음	114	50.4
모름/무응답	2	-

## (3)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에서는 응답자의 39.4%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8%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47.4%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주관적 건강인식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매우 건강하지 않음	18	8.0
건강하지 않음	89	39.4
보통	98	43.4
대체로 건강함	19	8.4
매우 건강함	2	0.9
모름/무응답	6	-

## (4) 기초생활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와 관련하여 160명(71.1%)가 조건부수급자이고 일반수급자는

32명(14.2%), 자활특례자는 15명(6.7%), 차상위자는 16명(7.1%)로 나타났다.

[표 5-5] 기초생활수급여부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일반수급자	32	14.2
조건부수급자	160	71.1
자활특례	15	6.7
차상위자	16	7.1
기타	2	0.9
모름/무응답	7	-

(5) 월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평균 76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76	48.123	0	250

## (6) 보유자격증 여부

응답자의 보유 자격증 여부를 살펴보면 112명 전체의 49.6%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보유자격증 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자격증 있음	112	49.6
자격증 없음	114	50.4
모름/무응답	2	-

## (7) 직업훈련 경험여부

응답자의 직업훈련 경험여부는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60명(26.3%)로 나타나 직업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직업훈련 경험 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직업훈련 경험 있음	60	26.3
직업훈련 경험 없음	168	73.7
모름/무응답	4	-

## (8) 창업 경험여부

응답자의 창업 경험여부는 82명(36%)이 자영업과 같은 창업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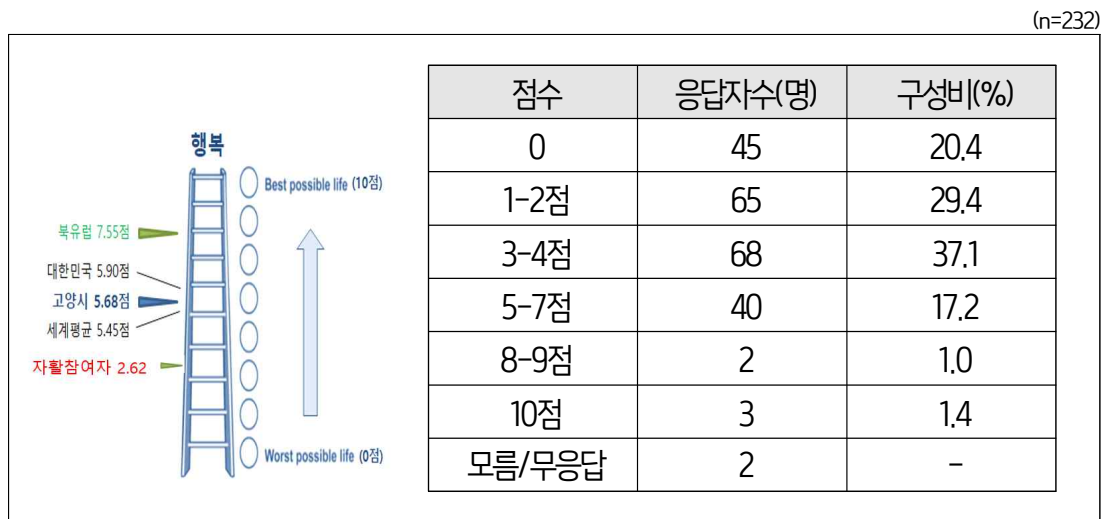
[표 5-9] 창업 경험여부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창업 경험 있음	82	36
창업 경험 없음	146	64
모름/무응답	4	-

## (9) 행복도

응답자의 행복도를 삶의 평가 척도로 조사한 결과 최악의 상태인 0점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45명(20.4%)로 나타났으며 1-2점은 65명(29.4%), 3-4점은 68명(37.1%), 5-7점은 40명(17.2%), 8-9점 2명(1.0%), 최선의 상태인 10점은 3명(1.4%)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2.62점으로 2020년 대한민국 평균 5.90점, 고양시 평균 5.68점에 비해 매우 낮아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행복도(삶의 평가)



## (10) 참여시기별 행복도

참여시기별로 행복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19년 이전 참여자는 행복도가 3.33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 신규참여자의 행복도는 2.26점, 2021년 신규참여자의 행복도는 2.25점으로 코로나19 발생을 기준으로 이전 참여자에 비해 이후 참여자의 행복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참여시기별 행복도

구분	응답자수(명)	(n=205)
		행복도(표준편차)
~2019년 신규 참여자	48	3.33(2.253)
2020년 신규 참여자	100	2.26(1.824)
2021년 신규 참여자	57	2.25(2.020)

## 2) 자활사업 참여 이전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 이전 주요 경력 영역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시기, 자활사업 참여이전 경제활동상태, 일, 실직 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자활사업 참여시기

응답자의 자활사업 참여시기를 살펴보면, 2000~2010년은 6명(2.5%), 2016년 2명(1%), 2017년 3명(1.4%), 2018년 5명(2.4%), 2019년 32명(15.2%), 2020년 101명(48.1%), 2021년 60명(28.6%)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규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21년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자활사업 참여시기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2000	1	0.5
2001	2	1.0
2009	2	0.5
2010	1	0.5
2016	2	1.0
2017	3	1.4
2018	5	2.4
2019	32	15.2
2020	101	48.1
2021	60	28.6
모름/무응답	24	-

## (2)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이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2개월로 나타났다.

[표 5-12]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2021년 4월 기준)

(단위 :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4	11.903	1	82

## (3) 자활사업 참여 전 경제활동

자활프로그램 참여 전 자영업과 같은 경제활동 경험여부는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2명(36%)으로 나타났다.

[표 5-13] 자활사업 참여전 경제활동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창업 경험 있음	82	36
창업 경험 없음	146	64
모름/무응답	4	-

#### (4) 자활사업 참여 전 실직기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전 실직기간은 평균 35.35개월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달, 최대 263개월 실직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자활프로그램 참여 전 실직기간

(단위: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5.35	41.403	1	263

### 3)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과 센터까지 이동시간, 교통수단, 자활사업 참여 경로 및 이유, 자활사업 참여 전 정보의 충분성 및 자활계획 수립시 논의 정도와 자활사업 관련 상담 및 교육 관련 만족도, 물리적 환경 만족도, 자활근로사업 만족도, 직원 및 동료관계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참여중인 자활사업

현재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게이트웨이가 159명(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슈퍼사업단 19명(7.5%), 디딤돌사업단 15명(5.9%), 편의점사업단 15명(5.9%), 내일키움통장 10명(3.9%), 인큐베이팅 9명(3.5%), 도시락사업단 8명(3.1%), 돌봄사업단 6명(2.4%), 택배사업단 5명(2.0%), 다운사업단 4명(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활기업 참여자는 5명(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사업단에 들어가기 전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참여중인 자활사업(중복응답)

(n=255)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게이트웨이	159	62.4
인큐베이팅	9	3.5
디딤돌 사업단	15	5.9
다운사업단	4	1.6
돌봄사업단	6	2.4
택배사업단	5	2.0
도시락사업단	8	3.1
편의점사업단	15	5.9
슈퍼사업단	19	7.5
자활기업	5	2.0
내일키움통장	10	3.9

## (2) 센터까지 이동시간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으며 자택에서 지역자활센터까지 왕복 이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30분 이내 25명(10.9%), 1시간 이내 80명(34.8%), 1시간 반 이내 60명(26.1%), 2시간 이내 45명(19.6%), 3시간 이상 20명(8.7%)으로 나타났다. 센터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응답자가 28.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응답자도 20명이나 있어 일부 참여자들이 센터까지의 이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6] 센터까지 이동시간(왕복)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30분 이내	25	10.9
1시간 이내	80	34.8
1시간 반 이내	60	26.1
2시간 이내	45	19.6
3시간 이상	20	8.7
모름/무응답	2	-



## (3) 센터까지 주 이용교통수단

자활지역센터까지 주 이용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199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차는 11명(4.8%), 도보는 8명(3.5%)으로 나타났다.

[표 5-17] 주이용 교통수단

(n=255)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도보	8	3.5
자차	11	4.8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199	87.7
기타(교회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9	4.0
모름/무응답	5	-

## (4) 자활사업 참여경로

자활사업 참여경로는 담당공무원의 권유가 90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기관 실무자의 권유 61명(26.8%), 스스로 희망해서가 36명(15.8%), 자활사업 참여자의 권유 21명(9.2%), 가족·지인 권유 등 기타가 20명(8.8%)로 나타났다.

[표 5-18] 자활사업 참여 경로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담당공무원의 권유	90	39.5
지역사회기관 실무자의 권유	61	26.8
자활사업 참여자의 권유	21	9.2
스스로 희망해서	36	15.8
기타(가족권유, 지인권유, 우편물 등)	20	8.8
모름/무응답	4	-

## (5) 자활사업 참여이유

자활사업 참여이유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가 96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54명(24%), 향후 취·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43명(19.1%)으로 참여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많은 만큼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참여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자활사업 참여 이유

(n=232)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96	42.7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54	24.0
다른 일자리보다 자활사업 참여가 나은 것 같아서	14	6.2
향후 취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43	19.1
기타(돌봄, 건강상 이유 등), 모름/무응답	18 7	8.0 -

## (6) 자활사업 참여 전 정보 확보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 확보 정도는 ‘보통’이 94명(42.3%)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못하다’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98명(44.2%),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30명(13.5%)으로 나타나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점 중 2.47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로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0] 자활사업 참여 전 정보 확보 정도

(n=222)

구분	전혀 그렇지 못함	←	보통	→	매우 그러함	평균(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수(명)	67	31	94	12	18	2.47 (12.06)
구성비(%)	30.2	14	42.3	5.4	8.1	

## (7) 초기 자활계획 수립시 담당자와 논의 충분성

자활사업 참여 초기 자활 계획 수립시 담당자와 논의 충분성 항목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45.1%)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88명 (39.2%), ‘전혀 그렇지 못하다’와 ‘그렇지 못하다’는 35명(15.6%)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5-21] 초기 자활계획 수립시 담당자와 논의 충분성

(n=224)

구분	전혀 그렇지 못함	←	보통	→	매우 그러함	평균(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수(명)	17	18	101	44	44	3.36 (1.115)
구성비(%)	7.6	8.0	45.1	19.6	19.6	

## (8) 상담·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자활센터의 상담·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상담은 전체 응답자의 75.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47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왔으며 연 4.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보, 교양교육 및 정신교육 등 일반적인 소양교육 이용경험률은 64.6%이며 만족도는 3.48점, 연 5.5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 이용률은 66.5%로 만족도는 3.39점, 연 4.3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창업 관련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이용률은 56% 만족도는 3.3점으로 연 3.7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상담·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n=232)			
프로그램	만족도(5점 만점)	이용횟수	이용 경험있음(%)
상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정도)	3.47 (1.052)	연 4.2 회	75.2
일반적인 소양교육 (생활정보, 교양교육 및 정신교육 등)	3.48 (.961)	연 5.5 회	64.6
자활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	3.39 (.985)	연 4.3회	66.5
취업 및 창업 관련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3.30 (1.172)	연 3.7회	56.0

### (9) 자활센터 만족도

자활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물리적 환경, 자활근로, 직원 및 동료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물리적 환경에 있어 고양지역자활센터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2.94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33.8%로 나타났다. 공간, 채광, 방음, 환기 등 센터 환경은 3.76점으로 만족 비율이 51.9%로 나타났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중 근무에 대한 관리가 3.55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다음이 근무시간 3.51점, 업무량 3.47점, 참여기간 3.39점, 직무(업무내용) 3.38점, 취업지원서비스 3.3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활급여 수준이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47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원 및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자활센터 직원과의 정서적 관계 3.87점, 자활센터 직원과의 업무적 관계 3.8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센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도 3.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 동료와의 관계는 3.49점으로 직원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23] 자활센터 만족도

(n=232, %, 점)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평균	
물리적 환경	1.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위치	15.0	18.3	39.4	11.7	15.5	2.94	
	2. 센터 환경(공간, 채광, 방음, 환기 등)	1.9	3.9	42.2	19.9	32.0	3.76	
자활 근로	3. 직무(업무내용)	3.1	8.8	53.6	16.0	18.6	3.38	
	4. 자활급여 수준	10.4	20.4	47.3	7.0	14.9	2.96	
	5. 근무시간	3.1	10.8	52.6	13.9	19.1	3.51	
	6. 근로강도(업무량)	2.7	8.6	50.3	16.6	21.9	3.47	
	7. 참여기간	3.1	7.3	56.3	14.1	19.3	3.39	
	8. 근무관리	1.6	6.5	49.7	20.0	22.2	3.55	
	9. 취업지원서비스	5.6	7.3	50.6	18.0	18.5	3.37	
	10.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1	10.3	45.1	20.0	21.5	3.47	
	직원 및 동료관 계	11. 자활센터 직원과의 업무적 관계	1.6	2.6	39.3	22.0	34.6	3.85
		12. 자활센터 직원과의 정서적 관계 (인간적관계)	1.1	3.7	38.1	21.2	36.0	3.87
13. 자활사업 참여 동료와의 관계		2.2	6.0	54.1	16.4	21.3	3.49	
14. 자활센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1.0	4.1	50.3	20.5	24.1	3.63	

#### 4)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는 경제적 변화, 개인적 변화, 건강변화, 가족·사회적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경제적 변화로 자활사업 참여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2.91점으로 ‘보통’은 40.3%,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27.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1.9%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도움이 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변화는 ‘일할 의욕이 생겼다’는 3.23점,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3.18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이 생겼다’는 2.94점으로 나타났고 ‘일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2.4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건

강변화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2.75점, ‘우울감이 줄었다’는 2.91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건강변화는 3항목 모두 중간점수인 3점 이하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적 변화는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가 2.85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2.83점,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2.76점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적 변화도 3항목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n=232,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			매우 그러함	평균
			←		→		
경제적 변화	1.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었다	16.2	15.7	40.3	16.7	11.1	2.91
개인적 변화	2. 일할 의욕이 생겼다	6.9	9.6	51.4	17.4	14.7	3.23
	3. 일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였다	29.6	18.2	36.5	7.9	7.9	2.46
	4. 자기효능감이나 삶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생겼다	11.0	18.3	47.2	12.4	11.0	2.94
	5.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8.8	12.9	45.2	18.4	14.7	3.18
건강 변화	6. 건강이 좋아졌다	15.8	18.6	47.9	10.2	7.4	2.75
	7. 우울감이 줄었다	12.6	18.1	45.6	13.5	10.2	2.91
	8.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12.3	19.0	42.7	13.3	12.8	2.95
가족·사회적 변화	9.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16.1	11.2	52.2	12.2	8.3	2.85
	10.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18.8	13.1	47.9	14.1	6.1	2.76
	11.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16.0	16.0	46.5	12.2	9.4	2.83

## (2) 탈수급 가능성 및 경제적 자립가능성

탈수급 가능성 및 경제적 자립가능성에 있어서 탈수급 가능성은 2.53점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음’은 24.6%, ‘가능성이 없음’은 16.1%로 40.7%가 탈수급 가능성은 보통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경제적 자립 가능성도 평균 2.60점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음’은 18.5%, ‘가능성이 없음’은 21.6%로 40.1%가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통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표 5-25] 탈수급 가능성 및 경제적 자립가능성

구분	전혀 가능성 없음	←	보통	→	가능성 높음	평균
탈수급	24.6	16.1	45.5	9.4	4.5	2.53
경제적 자립	18.5	21.6	45.8	9.7	4.4	2.60

## (3) 자립(생계대책) 계획

자립에 대한 계획은 취업 계획은 116명(57.7%)이고 자영업에 대한 계획은 27명(13.4%)으로 나타났으며 58명(28.9%)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26] 자립(생계대책) 계획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취업	116	57.7
자영업	27	13.4
아직 모르겠음	58	28.9
모름/무응답	31	-

## 5) 자활사업에 대한 견해

### (1)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자활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5점 만점 중 평균 3.23점, ‘자활사업은 실제 취업,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5점 만점 중 3.17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가능성 없음	←	보통	→	가능성 높음	평균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에 도움을 많이 준다	7.2	10.4	51.8	13.5	17.1	3.23
자활사업은 실제 취업,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6.4	16.4	46.1	15.5	15.5	3.17

## (2) 경제적 자립의 걸림들

경제적 자립에 대한 걸림들로 많은 나이가 90명(39.8%), 건강상태는 71명(3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자금의 부족 13명(5.8%), 일하는데 방해되는 가정환경은 12명(5.3%), 경력 및 기술의 부족 10명(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8] 경제적 자립의 걸림들

구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많은) 나이	90	39.8
건강상태	71	31.4
낮은 학력수준	6	2.7
의욕과 자신감 등의 결여	9	4.0
경력 및 기술의 부족	10	4.4
사업자금의 부족	13	5.8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관련 정보의 부족	2	0.9
생활습관 및 태도상의 문제	2	0.9
(양육부담, 간병부담 등의) 일하는 데에 방해되는 가정환경	12	5.3
돈 벌 수 있는 일자리의 전반적인 부족	6	2.7
기타	5	2.2
모름/무응답	6	-



## (3) 고양시 자활사업의 문제점

고양시 자활사업 문제점으로 물리적 환경, 자활지원서비스의 부족, 자활근로 사업, 일자리 타서비스 연계부족, 인식개선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간점수인 3점 이상으로 높게 나온 항목은 ‘지역자활센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3.09점,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가 다양하지 않다’가 3.21점,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3.22점, ‘지역과 개인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 3.22점, ‘자활사업 참여 종료 후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3.35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주로 지역자활센터 접근성을 비롯하여 자활사업 근로단 운영, 일자리와 타서비스 연계부족, 인식개선 항목이다.

[표 5-29] 고양시 자활사업 문제점

		(n=232, %, 점)					
구분		전혀 그렇 지 않음	←	보통	→	매우 그려 함	평균
물리적 환경	1. 지역자활센터 접근성이 떨어진다(위치 및 층수)	13.7	10.2	46.0	13.7	16.4	3.09
	2. 지역자활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18.6	14.0	49.3	9.5	8.6	2.76
자활 지원 서비스의 부족	3. 자활근로참여 이외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부족하다	15.8	15.3	50.5	9.5	9.0	2.81
	4. 자활사업과 관련한 (근로의욕 고취 등)심리적 지원이 부족하다	17.0	9.9	52.9	12.1	8.1	2.84
	5.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다	16.2	15.3	49.1	14.0	5.4	2.77
	6.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	23.9	14.4	49.1	5.9	6.8	2.57
	7. 자활근로에 참여하기까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21.9	13.4	47.3	7.1	10.3	2.71
자활 근로 (사업단)	8.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가 다양하지 않다	12.6	9.0	41.4	18.5	18.5	3.21
	9.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10.7	11.6	39.3	21.4	17.0	3.22

(n=232, %, 점)

구분		전혀 그렇 지 않음	← 보통 →			매우 그려 함	평균
	10.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	12.1	8.1	41.7	21.5	16.6	3.22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는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	15.9	12.3	47.7	13.2	10.9	2.91
일자리· 타서비스 연계 부족	12. 자활사업 참여 종료 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10.1	10.1	35.8	22.9	21.1	3.35
	13. 고양지역자활센터 이외에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연계가 부족하다	11.8	9.0	46.2	17.2	15.8	3.16
	14.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13.6	15.5	50.5	10.9	9.5	2.87
인식 개선	15. 고양시민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하다	9.7	8.8	49.8	17.1	14.7	3.18

#### (4) 필요한 정책적 지원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경제적 보상, 자활지원서비스, 일자리, 인식 영역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필요성을 4점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경제적 보상영역 중 ‘자활 및 자립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급여 인상’이 평균 4.11점, ‘열심히 자활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인센티브) 지급’은 4.1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영역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이 4.01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4.12점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른 항목들도 모두 3.5점 이상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0] 필요한 정책적 지원

		(n=232, %, 점)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 함	평균
경제적 보상	1. 자활 및 자립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인상	1.4	3.2	26.8	20.0	48.6	4.11
	2. 열심히 자활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인센티브) 제공	.5	2.7	25.1	27.9	43.8	4.12
자활지원 서비스	3. 취업 정보 제공 확대	1.8	2.8	30.7	25.7	39.0	3.97
	4. 창업자금 적극 지원	3.3	4.7	34.0	21.2	36.8	3.83
	5. 취·창업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강화	2.4	2.4	31.8	27.5	36.0	3.92
	6.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확대	2.3	1.4	40.4	20.7	35.2	3.85
	7. 자활참여자를 위한 가사 및 돌봄지원 강화	7.0	4.7	47.4	17.7	23.3	3.46
일자리	8. 직업훈련과 연결되는 일자리 마련	3.3	1.9	33.5	26.5	34.9	3.88
	9.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2.3	.9	29.6	27.3	39.8	4.01
	10.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1.4	2.3	25.3	24.9	46.1	4.12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2.8	.9	31.2	24.8	40.4	3.99
인식	1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1.9	2.8	34.4	21.9	39.1	3.93

## (5) 고양시 자활사업에 대한 의견

고양시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조사에서는 총 47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사업단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5명, ‘자활센터 추가 설치’가 13명, ‘개인 적성 및 역량 특성에 맞는 취·창업 자리 및 직업훈련 실시’가 11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견교환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가 4명, ‘개인맞춤형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3명으로 나타났고, 이외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과 ‘작업시간에 비해 임금 적음, 최저임금 충족 필요’에 대한 의견을 각 2명이 제시했다. 그 외 ‘신용불량자 취업 방안 모색’, ‘게이트웨이 교육일 수 확대’, ‘나이 많은 사람의 취업 정책’,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직원 충원’, ‘자활사업 활동시

간대 선택 확장', '대기시간', '직원의 전문성', '시의 적극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림 5-2]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중복응답) (n=47)

- 사업단의 다양성 필요(15)
- 자활센터 추가 설치(13)
- 개인 적성 및 역량 특성에 맞는 취창업 자리 및 직업훈련 실시(11)
- 의견교환 및 심리정서 지원 (힐링) 프로그램 필요(4)
- 개인맞춤형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3)
-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2)
- 작업시간에 비해 임금 적음, 최저임금 충족 필요(2)
- 신용불량자 취업 방안 모색(1)
- 게이트웨이 교육일 수 확대(1)
- 나이 많은 사람의 취업을 위한 대책(1)
-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1)
- 직원 충원 필요(1)
- 활동시간대 변경(1)
- 대기시간이 김(1)
- 직원의 전문성 확대(1)
- 시의 적극적 지원(1)

##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FGI 분석

###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양시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과정 및 어려움, 자활사업의 효과성(경제적, 심리적)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고양지역자활센터 담당자의 추천을 받았으며, 연구진이 성별, 연령, 참여 사업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중장년 여성, 중장년 남성, 청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5월 18일, 고양지역자활센터 교육실에서 그룹당 6명이 참석하여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고, 인터뷰 방법(심층 인터뷰, 녹음 진행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내용의 비밀 유지 및 참여를 중단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인터뷰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은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 되었다.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내용들끼리 범주화하여 소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쳐 분석결과를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FGI 주요 질문은 자활기업 참여자와 고양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31]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FGI 주요 질문

인터뷰 대상	주요 질문 내용
자활기업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li> <li>· 자활기업 운영 또는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li> <li>· 자활기업 창업을 주변사람에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li> <li>· 3년 후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인터뷰 대상	주요 질문 내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li> <li>· 사업단에서 일하시면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li> <li>·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떠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을 받으셨습니까?</li> <li>·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li> <li>· 자활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고양시 자활사업이 개선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 2. 자활기업 참여자 FGI 결과

### 1) 참여자 특성

2021년 5월 현재, 고양시에는 총 5개의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각 기업들은 도배, 장판 등 집수리, 특수청소 및 청소용역, 편의점 업체, 정부 양곡, 경로당 배송 등 배송, 택배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자활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자활기업 창업 과정 및 운영 현황, 어려움,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고양시 내 5개 자활기업에서 모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인 중 30세 1인을 제외하고 모두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자활기업 근무기간은 1년 5개월에서 15년 3개월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여자 중 2인은 탈수급한 상태였다. 인터뷰에 참석한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5-32] 자활기업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근무기간	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 여부	수급여부
1	남	51	15년 3개월	상용직	가입되어 있지 않음	수급
2	남	57	13년	상용직	전부 가입	비수급
3	여	51	10년 7개월	상용직	가입되어 있지 않음	수급
4	여	30	10년 7개월	상용직	전부 가입	비수급
5	남	64	4년 10개월	상용직	일부 가입	수급
6	남	60	1년 5개월	상용직	일부 가입	수급

## 2) 분석결과

FGI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 창업 과정, 운영 현황,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기업의 장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활기업 창업 과정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고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하며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가 있거나, 자활사업 참여 가능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적립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자활근로 사업단과 유사 업종의 자활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자활기업을 창업하던지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던지 두 방향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하게 된거죠.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활근로로 들어왔죠. 개인적으로 사업실패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2007년에 학교청소 활성화 많이 됐었는데... 자활근로할 때 청소했어요. 사업단에서 청소 배워가지고 창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활기업 참여자 2)

“지역자활센터에 편의점사업단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됐고, 한 1년 지나서 자본이 모여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자활에서 나와서 개인사업으로 사업자 내고, 일하는 건 계속 같은 상황인데 좋은 상권이 있어서 나가게 되고, 당시 수급이 유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급여가 높은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단에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독립하게됐고, 운영하게됐고, 그상태가 계속... 자활사업단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자활기업으로 온 케이스예요.” (자활기업 참여자 3)

“자활센터에서 5년 있으면 나가야돼요. 조건이 되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창업자금으로 모아놓은 게 8000만원있는데, 안고 나가라. 이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안고 나가는거예요.” (자활기업 참여자 6)

“5인가족이었는데, 직장 다니다가... 자활근로 있다고 사회복지사가 근로 배워서 해보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사업단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이 들고 이런 분들 다 관두고,

자립금도 없어서. 있는 사무실 안고 나와서 기술 습득하고 센터랑 교류하면서 근로능력키우고 (중략) 일한 것에 대한 것을 적립시켜줬다가 나갈 때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활기업 참여자 1)

## (2) 자활기업 운영 상황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대부분 매출액이 높지 않은 업종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이 대표로서 초과 근로 등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 개선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 경우도 있고,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점포 준비를 위해 적립해 놓은 적립금을 이용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자활기업으로 창업한지 10년 7개월째였는데, 대표를 제외하고 함께 자활공동체로 나왔던 동료들이 모두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배운 거 활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부가가치 높은 게 아니다보니 1년 매출 600만원 정도였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혼자 영업하고 하면서 올라간거죠. ...중략...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됐어요.”(자활기업 참여자 2)

“추가근무 안하면 최저시급이죠. 편의점은 매출액 자체는 의미가 없고... 저는 자활특례로 있고, 팀원들은 모두 탈수급했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3)

“편의점 월급이 뻥하니깐. 밑에 동생이 같이 돈을 버니깐 그걸로 버티는 거죠. ...중략...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자리 잘 잡고 있을 때 일부러 월급을 적게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1인 1가게를 운영하고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걸 모아놔서 아직까지 버티는 거예요.” ...중략... 처음에 장사가 되게 잘됐어요. 알바생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다 그만뒀어요. 알바생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월급 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알바생 월급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다 그만두고. 점주가 4명이니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는거예요. (자활기업 참여자 4).



“2명 인건비 지원받고있는데, 처음에 위협해서 안할려고했죠. 자가격리 물품 들어온거에  
요. 운영이 안돼. 자가격리 물품 작년 1월부터 하다가 지금 쪽 하고있어요.” (자활기업 참여자6)

### (3)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자활기업의 업종 특성상 노동 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점포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는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배송 및 택배 업종 참여자들은 최근 배송료 인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자활기업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 운영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출 확대 방안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과 관련하여 수취인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점은 판로개척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구요. 지금은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영역 이다보니 드러나지만, 2-3년 전까지만해도 거의 몰랐어요. 지금도 복지부분 공무원만 자활을 알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자활기업이 소외되어있다고 느껴요.” (자활기업 참여자 2)

“편의점 하고 있는데 24시간 근무에, 혼자 근무에... 그런 게 힘들죠.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엔 어려워져. 한 분이 그만두고, 안맞다고 생각한분들 나가시고 남은 사람이 저희예요... 사업단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어렵고... 그래서 몇 분이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4).

“우리는 배송이라 힘이 들어가지고... 양곡 배송하는데... 매출금이 100만원씩 줄어들었어요. 배송료 자체를 낮춰서... 중략... 수급자 쌀배송 하는데 4명이 있는데 사업이 이 정도로 뻘

셀지 몰랐어요. 또 거의 25%가 세금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전에 사업할 때는 절세도 많이됐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없이 다 내야돼요. 우리가 쌀 2300개 가지고 하는데 쌀배송료를 다 깎아 버렸어요 ...중략... 자가격리물품때문에 다른 팀 추가해서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 대면 하면 안돼죠. 자가격리자들 간혀있으니 예민해요. 내려와서 전화하면 별 소리 다 들어요. 초창기에 시작했을때에 비해 배송비 절반으로 깎였어요. 많이 깎였어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 2인을 받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답답해요.” (자활기업 참여자 6).

#### (4) 자활기업 참여의 장점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자활기업 창업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활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활기업 설립 후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활기업이 평소 사업을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활기업을 통해 매출 발생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할 때에 비해 자율성이 높아졌으며,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점을 장점이라고 표현하였다.

“자활기업 장점이 기업이라는 게 수익 창출해서 사회환원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건 어렵고... 좋은점은 기술 습득, 자격증도 습득. 기술을 배워서 나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인테리어쪽 배워서 했던 게 좋았어요 ... (중략)... 타 업체와 경쟁해야하고 하니깐... 기술 습득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활기업 참여자 1)

“사업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젊기 때문에 빨리 탈피해서 사업해보겠다는 의지가 커서 센터에서 떠밀려서 나가지 않고, 스스로 빨리 나가서 내 사업하겠다 하는 게 컸죠. 그래서 고생도 많이했고...” (자활기업 참여자 2)

“일한만큼 급여를 가지고 가니깐. 근데 불안정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으니깐. ...중략... 어떤 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독립한 거. 그에 대한 지원 자체로는 되게 좋고. 그 안에서는 모든

나의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매출 안나오고 하면 힘들지만 이걸 할 수 있다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자활기업 참여자 3).

“자활기업으로 나온 것에 대해 후회없죠. 수급자였으니 급여도 얼마 안되고, 혜택도 못받고 꾸역꾸역 알바비 정도 받는 상황이었으니...” (자활기업 참여자 4)

“자유로우니깐 그게 좋죠. 버는 한도 내에서 수익도 가져가고... 그게 좋죠.” (자활기업 참여자 5)

“센터에서 터치 안받는 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일할 욕심 많으면 키울 수 있죠...(중략)... 버는 만큼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죠. 초창기에 자가격리 물품 시작해서 많이 벌었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6)

이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자활기업 창업 또는 자활기업으로의 취업을 추천할만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시장에 있는 기업과의 경쟁과 영업 압박, 행정 업무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단에서 나올 때 좋은 조건은 맞지만, 일단 나가면 시장에 있는 기업과 경쟁, 영업도 해야하고 일처리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거죠.” (자활참여자 2)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센터에 있는 게 나아요. 법 테두리에 있는 게 낫죠. 나이 먹고 나오는 거 권하고 싶지 않죠. 연세있고 근로 능력 떨어지면 여기(센터)에 있는 게 나아요. 근로능력 있으면 그런 분들은 나갈려고 하겠죠. 막상 나가보면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깐 여기 있을 때보다 노력 안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자활기업 참여자 6)

#### (5)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공공 부문의 우선구매나 기회 제공 등을 희망하였으며, 공공의 지원 없이는 기업 운영이 어렵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한시적 인건비<sup>20)</sup> 지원대상의 수 및 기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연계 가능성이 적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업 대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실업급여 등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시에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할때 자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자활기업 참여자 1)

“아무리 요구해도 시 조례에 반영 안되면 공무원이 법적근거 없어서 지원 못하는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시 조례 바꿀 때 센터랑 자활기업 대표 의견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 우선권 주는 부분... 그래야 지속가능성 있으니. 한시적 인건비 부분도 몇 년까지가 아니라 길게... 인건비, 인력지원 부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활기업 참여자 2)

“편의점은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독립업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특별한 지원 같은 거 없고, 어떤 사람이 창업했을 때 도움 같은 거 기대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작했을 때 유지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 (중략)... 자활기업 지원해준다면 세금 혜택이나 4대보험 지원되면 좋겠고.. 기업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할 게 있는데 편의점은 지원할 것이 별로 없어서...” (자활기업 참여자 3)

“저도 같이 운영하니깐 저희는 다른 자활기업처럼 국가 연계 입찰 받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보니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건 세금 아니면 인건비... 평생은 아니고 완전 자활, 독립될

20)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활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을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간 및 재원을 달리 정함. 수급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2년까지는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고,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보건복지부, 2021년 자활사업안내, p. 121, 2021.)

때까지는... 밑바닥에서 시작한거기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할때까지 경제적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4)

“배송이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 마련해주시고 시청에서 나오는 물량을 주시면... 차량이 노후되어가지고 이런 거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한시적 인건비 지원 부분 지침에 나와있는 것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시 재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 2명 50%만 지원받고 있어요 6개월 더 받으면 2명 2년 지원 받은 거예요 자리잡기 전까지는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신생 기업들은 시에서 지원 안해주면 운영할 수 없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6)

“인건비 지원 거의 못받았어요. 재량이라고 거의 안해줬어요. 6개월 1명 지원 받았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5)

“사업주로서 불이익이 있어요. 고용보험도 못들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못받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협동조합으로 해야 했는데. 사업유지가 국가에 도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지원을 늘려야돼요.” (자활기업 참여자 3)

“자활기업협의체 있고 이러면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활기업도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자활 쪽에 관심 가지고 나와주시고 하면 좋은데 모임 한 적이 없어요. 이럴 때 협의체 구성해서 요구해야 돼요. 찾아가는 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열정적이기때문에 지금 뭉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자활기업 참여자 2)

### 3. 자활근로 참여자 FGI 결과

#### 1) 참여자 특성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장년 그룹의 경우 대부분이 1,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남성그룹의 경우, 6인 중 4인이 1인 가구인 것이 눈에 띈다. 청년 그룹은 중장년과는 달리 3, 4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장년 그룹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

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원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청년 그룹 참여자는 전원 고졸로 나타났다. 참여자 18인은 근로유지형 3인, 디딤돌 사업단 3인, 도시락 사업단 4인, 편의점 사업단 3인, 슈퍼 사업단 5인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로 구성되어 각 사업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의견 수집이 가능했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여사업단을 명시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아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33] 자활근로 참여자 FGI 대상자 일반현황

구분	그룹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참여자 유형
1	중장년 여성 그룹	여	54	대졸	1인가구	조건부
2		여	64	중졸	1인가구	일반
3		여	57	고졸	2인가구	차상위
4		여	55	고졸	3인가구	차상위
5		여	48	고졸	2인가구	조건부
6		여	63	초졸	1인가구	일반
7	중장년 남성 그룹	남	63	중졸	1인가구	일반
8		남	64	고졸	1인가구	조건부
9		남	64	고졸	1인가구	일반
10		남	65	대학원졸	2인가구	일반
11		남	59	초대졸	1인가구	조건부
12		남	44	중졸	2인가구	조건부
13	청년 그룹	여	25	고졸	3인가구	차상위
14		남	22	고졸	4인가구	일반
15		여	26	고졸	3인가구	조건부
16		남	22	고졸	4인가구	조건부
17		여	23	고졸	4인가구	조건부
18		남	26	고졸	2인가구	조건부

## 2) 분석결과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 이유, 사업단에서의 경험,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에 대한 내용, 참여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 참여의 장점,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자활의 의미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중장년 여성, 중장년 남성, 청년 각 6인씩 세 그

룹으로 나누어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1) 자활근로 참여 이유

참여자들의 자활근로 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높은 연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마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되지 않아 지역자활센터로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어 의료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락사업단이고 그전에는 마두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일하다가 여기서 도시락사업한다고해서 탈수급했다가 자활특례로 다시 여기 들어왔어요. 내일키움통장받으면서 탈수급했고. 아이도 미성년자 끝나서 탈수급했다가 다시 특례로 들어왔어요.” (참여자 3)

“참여자 3과 도서관 식당에서 같이 일하다가 여기로 왔고. 외국 살다가 애가 아파서 오게 됐어요. 외부 일자리는 알아보긴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쉽게 취직이 안돼요.” (참여자 4)

“1년 반 정도 전에 자활센터에 왔어요. 집에 처박혀있으면 뭐합니까. 활동하고, 돈도 벌수 있고.” (참여자 6)

“쇼핑몰 했어요. 하다가 접고. 영원히 잘되진 않잖아요. 거기는 자유스럽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참여자 1)

“저는 그동안 공장도 다녀보고 안해본 게 없어요. 재개발하면서 고양시로 이사오고 집에서 놀았죠. 시청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상담하고 수급자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수급자 된 지 얼마 안됐어요.” (참여자 2)

“수급자로 있었는데 생계급여 받기위해 조건부수급자라 참여했어요.” (참여자 10)

“다리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됐어요. 생계급여 유지해야해서... 당장 취업할 수 있는 몸상태 아니고.” (참여자 11)

“일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1년 6개월 치료받고 산재처리 나와가지고. 힘이 안나고 인력이 위험하고 무서워요. 10년정도 넘게 다니다가 결국 여기 지원해서 된거죠.” (참여자 9)

“인큐베이팅 있다가 나가고, 다시 오고 노동도 해보고 다들 사정은 비슷할꺼예요. 목 디스크도 있고 일하는데 지장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하는 게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8)

“민속음악공연하다가 코로나때문에 공연 없어지니깐 일자리 찾다가 이쪽으로 오게됐어요. 여기서 2021년 2월부터 인큐베이팅사업단 들어갔다가 도시락 사업단에서 일한지 한달됐어요.” (참여자 12)

“한 5년정도 됐고. 뭔지도 모르겠어.” (참여자 7)

“직장 다니다가 군 문제 때문에 취업 못하게 되었다가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머니가 여기 나오시다가 병세 악화되어 제가 대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아프시다보니 병원비 지원이 중요해요.” (참여자 18)

“취업성공패키지 끝나고 취업이 안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됐어요.” (참여자 17)

“몸이 나이에 비해 약하고 체구도 작아서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활사업을 우편으로 안내문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수급자였는데 우편으로 자활사업 안내받고 시작했고, 그전에는 취업하기 힘들었어서 포기하고 있었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중략... 차상위 계층이었는데 저까지 일하면 수급이 끊긴다고 연락이 와서 못하고 있었어요. 자활근로 몰라서 못하고 있었고.” (참여자 13)



“자활사업 19년도 말부터 참여했고, 취업성공패키지하다가 기간 끝나고 몇 달 있다가 여기서 연락 오더라구요.” (참여자 16)

“2018년도에 집안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수급자 됐고, 그때부터 여기서 일 시작했어요.” (참여자 15)

“2018년도 5월에. 게이트웨이로 왔고, 원래 부모님이 수급자셨어요. 제가 취업성공패키지 하고나서 취업하고싶었는데 안되서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전화받아서 오게됐어요.” (참여자 14)

## (2) 사업단에서의 경험

참여자들은 본인의 희망이나 센터 직원의 권유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단 참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활사업 참여 종료 후에도 같은 분야에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사업단에 들어간지 이틀째예요. ...중략... 사업단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직종도 있고 한데 그거 하기 전에 나이 더 들어서라도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보자 해서 스스로 편의점 가겠다고 해서 이틀됐어요. 처음 가니깐 제가 생각할게 너무 많고, 배울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게 있어요.” (참여자 11)

“슈퍼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 배우고 싶어서 처음 들어갔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런 업무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자활 선생님들(직원)한테 묻고, 바로 피드백 받고... 슈퍼사업단이라 GS협약이기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점장한테 연락해서 업무도 배울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8)

“센터 선생님이 도시락 배달하면 어떨까해서. 운전도 배우고.” (참여자 12) .

참여자들은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성격에 따라 반찬 준비, 도시락 배달, 상품 진열, 손님 응대, 상품 발주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전 사업단 참여 경험과 비교하여 현재의 사업단의 업무가 단순하지 않고 활동적이라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고, 함께 일하는 참여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편의점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업무 강도가 세고, 고객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슈퍼사업단 참여자도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표현하였다.

“지금 슈퍼사업단이고, 물건 진열, 상품 정리하는 거 주로 해요. 일하는 거 좋아요. 여러 가지 업무 하고, 일이 어렵지 않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전에는 자활에서 디딤돌에서 볼펜 작업했어요. 그거하다가 슈퍼사업단으로 갔는데 저는 슈퍼가 나아요.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고... 디딤돌에서는 앉아서 볼펜만 끼우니깐 답답하죠. 10분 쉬는시간 있지만, 슈퍼는 말하고 갔다올 수 있잖아요. 말하고.” (참여자 6)

“저는 편의점사업단에서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 처음 창업할 때 10여명이 오픈했어요. 제작년 11월에. 장항동 1호점, 2호점 그 옆에. 사람이 모자라서 뽑았죠. 나름대로 시행착오 있었지만 CU본사랑 센터에서 생각보다 잘한다고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죠. 고객 문제 있고 한테 비교적 만족해요.” (참여자 8)

“아직까지는 만족해요.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했어요. 경험도 없고.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서 힘들게 안하고 잘 가르쳐주면서 하니깐.. 같이 있는 분들도 잘 도와주고. 처음에는 외국인이니깐 걱정했었어요.” (참여자 12)

“지금은 도시락 사업이고. 일단은 메인 선생님들 서포트 하고 있어요. 석달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그 외는 아직 할만해요. 공휴일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깐 몸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하루에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힘에 부치게는 안해요.” (참여자 13)

“상품 진열, 운영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드는데...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중략... 어려운 고비 거의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9)

한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2교대 근무 등 비교적 센 업무 강도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편의점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역시 1, 2인이 근무하는 것과 발주 업무 등 업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은 아니고 사람 모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힘들죠. 하루에 5시간. 힘들어... 사람이 딱 일을시키면 일을해야하는데 그 일 못하고 있으면 힘들죠.” (참여자 7)

“슈퍼는 종다기 보다는 업무강도 차이가 있어요. 슈퍼사업단이 업무강도가 세죠. 오전에 출근 8시부터 5시, 오후는 1시부터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 시간표대로 돌아가면서.” (참여자 17)

“편의점은 마트보다는 좁으니깐 1-2명이 근무하는데 발주하는 게 날짜도 다르고 들어오는 날짜, 시키는 날짜 그렇다보니 복잡하고...” (참여자 14)

“또 시즌별로 물건 바꾸거나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식 없다보니 힘든데 차차 나아지지않을까...” (참여자 18)

### (3)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에 대한 내용 및 욕구

현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원활한 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했으나 현재는 한달에 2-3회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주로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심리상담 관련, 취창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에서 강사가 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들어와서 2개월을 게이트웨이.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센터 와서. 불펜작업했어요. 설명회 같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코로나 없을 땐 교육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정도. 교육.” (참여자 2)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자활근로 전반 교육, 심리상담 교육도 있고. 강사님 오셔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고.. 취업 교육, 창업 교육.. 한달에 4번 정도. 코로나때문에 지금은 없고. ...중략... 직원하고 개별 상담해서 탈수금계획 세우고 그런 거 있었어요.” (참여자 6)

“게이트웨이는 지금도 한달에 두 세번은 해요. 교육을 영상으로 한달에 두 세 번.” (참여자 1)

“센터에서 하는 교육 받으면서 도움되는 부분 있었던 것 같고, 교육 대상자에 따라 저희를 위해 해주는 부분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 횟수의 충분성 및 도움 정도,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자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이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고,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담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단 선택 시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불안하고한테 확신도 들게 해주고.. 상담을 주기적은 아니고 처음에 상담하고 문제 있고 그러면 상담해주고. 주기적이랑기 보다는 어느 정도..” (참여자 3)

“(상담) 상당히 많이했죠. 동료 문제, 애로사항 상당히 상담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사업단 선택할 때에도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것도 있고, 마음 가고 해서 선택한거죠.” (참여자 11)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은 없죠.” (참여자 9)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대상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육 및 상담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한 참여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로 의욕, 인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 교육의 수준으로는 일반 노동시장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자활(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집중적인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우선이다...” (참여자 10)

“그런 프로그램(상담, 교육)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따라 배우시는 분들, 치료 받는 분들이 솔직히 애매할 것 같아요.” (참여자 18)

“어차피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교육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기술 배우는데 누가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 인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 교육은 중요하지 않고, 인문교육 강화하고 할 수 있다.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중략... 진정한 자활을 위해서는 여기서 하는 걸로는 어렵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 인력 투입되서 사업아이템 개발해서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던지 해야...” (참여자 10)

#### (4) 참여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만사항

##### ① 사업단의 수 및 다양성 부족

현재 센터에 의뢰되는 대상자 대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의 수와 종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사업단 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게이트웨이 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사업단 배치를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트웨이에서 디딤돌까지 1년 넘게 걸린대요. 요즘, 게이트웨이는 돈 못받고 디딤돌에 가야 돈 받으니까. 한 달에 60-70만원 나오거든요. 게이트웨이에 계속 있어서 수입 적은걸로 컴플레인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어떻게... 사정이 안되니까... 중략... 제가 아는 분이 1년 2개월 만에 사업단 들어왔어요.” (참여자 1)

“부평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양시는 너무 없어. 센터장님하고 사회복지사님하고 사무실에서 영업을 뛰셔야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사업단에 비해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요..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야하는 거고..”(참여자 6)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야돼요.” (참여자 2)

## ② 사업단 배치 시 명확한 기준 부재

한 참여자는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본인이 참여했던 사업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업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제시한 패널티적인 성격의 대안에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러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작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슈퍼사업단의 매니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편의점이 슈퍼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됐어요. 사무실측에서 그냥 그만두고 떠 데로 가면 다른 사람도 막 그만두고 하니 패널티 줘야하겠다 하는 개념에서 3개월을 근로유지 형에서 있다가 떠 데로 가라.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유지형. 만근을 해야 70만원. 이걸로 생활 됩니까? 생활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죠. ... 중략 ... 이런 행정에 있어서 너무 왔다갔다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참여자 1)

“작년 7월에 이미 슈퍼사업단을 10명 뽑았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미 수습 단계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사람들은 8월부터 매니저가 됩니다. 우리는 그사람들 아래서 일하게 됐어요.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냐. 시험을 보든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대.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있습니다. 매니저는 자율적으로 일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공정하지 않죠. 공지를 해주던가. 매니저 수당도 있고, 똑같이 불펜작업하던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컴퓨터 다룰 줄 아는 걸 물어봤습니까?” (참여자 1)

### ③ 일관성이 부족한 센터의 행정처리 방식

참여자 중 일부는 지역자활센터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일관적이지 못한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과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안내 사항이 자주 바뀌는 점에 대하여 운영상 체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인 게 행정이에요. 도시락사업단도 인큐베이팅-도시락, 불펜, 옥상텃밭이 망했어요. 만들었다가 뭐 2개월도 안됐는데 없애버리고... 계획 잘짜고 아이디어 잘짜서 해야하는데 좀잡을수가 없어요. 다음 날가면 틀어지고... 도시락사업단이 불펜 하고 있어요.” (참여자 1)

“황당할 때가 많아요. 체계적인 게 없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많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비체계적으로 막 해버리면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이런 부분 변경됐으면 좋겠고.” (참여자 3)

### ④ 급여의 불평등

참여자 중 일부는 각 사업단의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교육, 상담 횟수 축소 등에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사업단 참여자와 실습으로서 참여하는 참여자 사이의 업무 강도를 동일하게 평가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같은 사업단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자신보다 적게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자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같은 참여자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반장과 같은 새로운 역할 부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근로유지형도 70만원, 게이트웨이 60만원. 게이트웨이 급여 받고 한달 간 계속 나오는거예요. 3시간 이상 하면 100만원 조금 넘어요. 3시간 이하로 하면 그 반. 저희같은 경우는 5시간 하는데 70만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사업단하면 130만원 이상” (참여자 1)

“도시락 사업단 토요일 근무하는데 수당을 좀 더 줘야되지 않나. 주말특근 수당 없는데 줘야 되지 않나...” (참여자 3)

“도시락사업단 대부분이 디딤돌 도시락사업단이에요. 그래서 급여가 달라요. 택배도 마찬가지로요. 택배도 디딤돌 택배. 슈퍼는 전체가 사업단. 택배나 도시락이나 편의점이나 완전 사업단이 아니라는거죠. 원래 계시던 분이랑 급여차이가 있죠. 그러니깐 그게 문제죠. 사업단이 너무 없으니깐 거기에 물리잖아. 사업단이 많으면 같텐데. 같은 일 하면서 급여차이 나는 거 불만이에요.” (참여자 1)

“몸이 안파라주는 사람도 있겠죠.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 중략... 그런 사람이 적으면 괜찮은데 그게 같듯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주하려는 마음이 크기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1)

“복지사의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작업분량과 차별적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어떤 사람은 역량에 비해 의도적으로 게으르고... 그렇게 때문에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복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작업윤리의 심층 현실을 자활인력 가운데 작업반장격인 ‘부업지도사’와 같은 제한적이나마 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 ⑤ 근무 환경

특정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중 일부는 현재 사업단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장소의 협소함과 휴게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소 협소하고, 도시락사업단이 센터 옆에 있는데 장소 협소하고 사람 많고, 편의점사업단 세 사람 도시락 만들려고 도시락사업단 6명이 나가야한대요. 비효율적이에요.” (참여자 3)

“도시락사업단에서는 설 수있는 장소가 없어요. 세 명 정도만 있으면 편하게 설수있지만 사람 많으니깐 에어컨도 없고 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울 것 같고...” (참여자 12)

### ⑥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청년그룹의 일부 참여자는 연령이 높은 참여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업무 교육, 의사소통 과정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새로 오신 분들? 나이가 어리다보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명령하듯 하고, 고객 응대할 때도 자기 뜻 안 꺾으려 하는 그런 거... 새로운 분들 오시면 교육 하는 경우 있는데 10번, 50번 말씀드리는데 잘 안되고... 중략... 나이 어린 사람이 왜 가르칠려고 하냐, 내가 더 많이 안다... 마찰이 많이 있어요... 중략... 일할 때 바로 고객 피해 가는 상황이라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기때문에 말씀 드리면 참여자 분들 어린애가 말이 많다. 이려고 나가요.” (참여자 18)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버릇없다, 예의없다.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참고 있는 거죠.” (참여자 15)

### ⑦ 워크넷 구직활동 의무 부과

코로나 19 이후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건강상태, 경력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합리함을 표현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정말 이해 안갔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가져가서 체크 안받으면 근무불이행 원아웃.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참여자 1)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건데, 나이 있어서, 건강, 경력 없어서 안되고...” (참여자 6)

“우리가 자활 활동 하는게 복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거기에 강제하기 위해 취업의지 있는지 그거 조사하기위해서 취업활동하라고 하는거예요. 고용을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하는데 일단 수급 받으려면 취업활동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 중략.... 이력서 내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전혀 의미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용 관점에서 강제고, 어찌 보면 인권 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참여자 10)

“구직활동 해야한다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 있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이랑 보시고 해야...” (참여자 12)

##### (5) 자활급여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자활급여의 적정성에 관해 참여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의 강도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도 있었다. 자활급여 수준에 대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비교적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디딤돌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급여 수준이 60만원에 그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편의점 일 시작할 때 센터장님한테 금액 듣고 수급했어요. 성과급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참여자 8)

“일에 비해 만족합니다. 일정소득 이상이면 수급 탈락. 사실상 그 정도의 노동으로 그 정도의 수급받는다고 하면 만족합니다.” (참여자 10)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테 일을 빠르게 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임금 부분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정상적인 직장 갖고 싶은데 안되서 못들어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다소 적다...” (참여자 11)

“급여를 올려줬으면... 사업단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는데 작년 1월1일 급여랑 올해 1월1일 급여가 반정도 차이나요. 110만원 받다가 60만원 받게 된거죠. 근무시간 줄여서. 생계비 수준 밖에 안된 거. 디딤돌이 된거고. 다시 사업단 선택해서 편의점 선택해서 이틀된 거예요. 급여 나아지면 좋겠어요. 지금은 편의점 급여를 전혀 모르고 성과급도 모르고... 디딤돌에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급여가 조금 올랐으면...” (참여자 11)

“월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다보니깐 아들이랑 살면서 부족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월급이 올라갔으면 어떨까...” (참여자 12)

## (6) 자활사업 참여의 장점

참여자들에게 자활사업 참여의 장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친구를 사귀기도 하는 등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 간의 소모임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자활사업은 비교적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돼요. 혼자 살거든요. 강아지하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여기 나오면 규칙적 생활이 되고. 저는 친구도 만나고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참여자 1)

“규칙적인 생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자 5)

“친구 사귀어서 좋아요.” (참여자 6)

“많은 사람 만나다보니 혼자있을 때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른데서는 수급자 이런 이

야기 잘 못하잖아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게 좋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말하기 껄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깐 집에 있었을때보다 활발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래랑 지내는 게 서툴다보니 어른이랑 있는게 편해서 그분들이랑 이야기 하는게 더 재밌다고 해야하나.” (참여자 13)

“집에서 있는 것보다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고. 편의점 손님으로 많은 분 만날 수 있고.” (참여자 14)

“여기서 일하면 마음은 편해요.” (참여자 4)

“활동으로 인해 우울감 감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죠.” (참여자 10)

“스트레스 안받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죠.” (참여자 2)

일부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장점으로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 생계 안정. 현금 지급 받는 것보다 일을 매개로해서 돈을 받는 게 그걸로 수급 지속 하는 것. 지속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참여자 10)

“경제적 지원 되서 좋아요.” (참여자 1)

“돈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안정적이고.” (참여자 14)

“생각 안해봤는데... 생계급여가 들어오니깐.” (참여자 16)

“자활사업 통해서 근무하면서 돈 받고, 집 형편 개선 되었으니깐 좋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8)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요리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 등 다양한 기술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점에 만족감을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력으로 볼 수 있는 직업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향후 이 경험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커피 학원, 요리쪽 자격증 딸 수 있게 도와주고, 택배사업단 경우 운전도 도움은 많이 돼요. 기술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자 3)

“여러 가지 직업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이 따로 없더라도 일을 하면서 배우는게 많죠.” (참여자 17)

“편의점 관련 업무 배울 수 있고” (참여자 14)

“일단은 새로 경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고, 경력 쌓았으니깐 매장관리, 백화점, 옷가게 이런 데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참여자 15)

“1년 6개월간 사업단에 있으면서 다양한 연령, 성별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었고, 2호점 다음 달에 열게 되었는데 불만을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내 경험만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8)

## (7) 향후 계획

참여자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단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본인의 원래 전공 분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년 참여자도 있었다.

“여기 은퇴 후에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떨어져서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나름대로 능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 편의점 근무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

아는 사람 많아지고 하다보니 우리 가게 와서 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취업 등 가능성 있어보여요.” (참여자 8)

“편의점 사업단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는 부분 염두해두고 과연 이 일 할 수 있을까 생각들고 우선 열심히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1)

“편의점 일이 마음에 들고 창업할 계획도 있어요. 사업 참여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창업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참여자 15)

“제가 가고 싶은 분야로 가고싶은 것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디자인쪽으로. 전공이 디자인쪽이라서. 그런데 그쪽은 페이가 좋지 않죠.” (참여자 17)

“처음에 바리스타 배우고 공연했던 사장님이랑 커피숍 할려고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코로나 지나면 다시 공연. 다시 공연하러 가거나 바리스타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2)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면 뭐할지 생각 중이라... 나가야죠. 그래도 여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언젠간 나가야하니깐.” (참여자 16)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중 일부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아픈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수급 유지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생계급여 유지가 나올 것 같아서. ... 중략 ... 창업이라는게 자영업도 힘들고 혼자서 빚도 생기고. 창업은 간이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전이 힘들 것 같고.. 정보 잘 몰랐고. 정보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고.” (참여자 17)

“수급 유지로 의료비 지원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의료비 지원 못받으면 월급 받아도 50, 60%가 병원비로 들어가니깐.” (참여자 18)

## (8)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 ① 센터 추가 설치 등 규모 확대 필요성

참여자들은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위치 및 규모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일산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덕양구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참여 인원에 비해 센터 규모가 작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센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활센터가 너무 작거든요. 두 군데로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 공간은 지금 코로 나때문에 오전/오후로 나뉘어서 괜찮지만 끝나면 부족하죠. 인원이 많아서 덥고 불편하고. 환경이 안되는거예요. 문열어놓고 해야 하잖아요. 이게 안되잖아요. 에어컨 틀어도 냄새가 빙빙 돌아요. ... 중략 ... 자활센터를 둘로 만들었으면. 덕양구에. 지금은 거리 멀고.” (참여자 6)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은 3번 갈아타고. 시간 안맞으면 너무 오래걸리고. 덕양구쪽에 하나 더 생기면. 덕양구 사람들이 많아요. 행신에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게이트웨이나 디딤들은 사업장 아니고 센터로 가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들은 덕양구에 살아도 센터로 가야돼요.” (참여자 1)

“지금 여기 오는데 교통이 복잡해요.” (참여자 3)

“편의점에 있으면서 들은거는 게이트웨이 250명 정도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인구, 파주 비교해서 보면... 지금 109만이라면 덕양구 그쪽에 하나 더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사업장도 센터도 만들필요 있다. 사람도 정체되어 있으니... 직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참여자 8)

“자리가 모자란 경우 많았어요. 자활센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쪽으로 다른쪽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많았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룸에서도 의자가 모자라서 다른 교실에서 가조오고 하는 경우 많았고, 바깥에서 서서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센터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4)

“위치상 문제라서 삼송에 사는 분들도 있을꺼고. 관산동, 고양동... 교통편 어려워서 왕복 2시간 걸리니까 서브(공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구요.”(참여자 18)

## ②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통한 사업단 확대의 필요성

사업단 확대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현재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사업단에 배치되지 못하고 게이트웨이에 머무를 경우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참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의 수가 적어 특정 사업단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단이 적다는 점도 사업단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 그룹에 속한 참여자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사업단 확대와 관련하여 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센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다양한 사업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맞는 사업단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사업아이템 개발한다던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 자활중앙회가 사업아이템 개발할 필요있다고 봐요.”(참여자 10)

“사업단을 화정이나 원당에 하나씩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수급자 뽑아만 놓고 어쩔꺼냐고. 차라리 사업단을 어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하게 하면... 중략 ... 내 생각은 자활센터를 확대해서 볼펜조립 뿐만 아니라 다른 일 찾아가지고 생계 이어가게 해야돼요. 센터가 너무 작잖아요. 여기랑 백석에 하나 있는데.”(참여자 9)

“일자리가 더 많으면 어떨까. 요즘에 외국인이지만 한국인도 일자리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 많다고 들었어요. 자리 더 만들어서 가능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빨리 주시면 어떨까...”(참여자 12)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 사람들이 계속 오시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다시 게이트웨이로 가고 ... 중략... 안젤로사업단에 비해 슈퍼사업단이 업무강도가 선편이거든요. 업무강도가 약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7)

“취업 프로그램, 청년을 위한 자리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불편만 끼우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참여자 14)

### (9) 자활의 의미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참여자가 자활을 자활센터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센터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3)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곳, 센터가 있어서 일할 수 있고...” (참여자 4)

## 제3절 자활사업 종사자 FGI 분석

###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FGI와 함께 고양시 자활사업 운영 현황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고양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5월 21일, 고양지역자활센터 교육실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 센터장과 실장을 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직원을 4~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총 세 그룹,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은 참여자 대상 FGI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고, 인터뷰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내용의 비밀 유지 및 참여를 중단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 내용 전사 과정을 거쳐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후, 유사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소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FGI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5-34]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대상 FGI 주요 질문

주요 질문 내용
·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각자 맡고 계신 업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현재 자활사업이 고용과 복지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고양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FGI 결과

### 1) 참여자 특성

인터뷰가 진행된 2021년 5월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에는 총 11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센터장과 실장은 센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1인당 1~2개의 사업단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5-35]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근속연수		고용형태	담당업무
		현 기관	총 사회복지 관련 기관		
1	남	9개월	9개월	비정규직	돌봄사업단, 자활근로
2	남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정규직	도시락사업단, 근로유지형, 자활기업 행복나누리
3	여	11개월	11개월	비정규직	희망디자인사업
4	남	4년 5개월	4년 5개월	정규직	편의점사업단, 백석작업장 총괄, 게이트웨이
5	남	2년 1개월	2년 1개월	정규직	디딤돌사업단, 인큐베이팅사업단
6	남	1년 5개월	1년 5개월	정규직	슈퍼사업단, 교육지원사업
7	여	1년 7개월	6년 10개월	정규직	다운사업단, 게이트웨이
8	남	3년 2개월	4년	정규직	택배사업단
9	남	15년 7개월	15년 7개월	정규직	센터업무 총괄
10	남	1개월	1개월	정규직	자활기금사업
11	남	12년 8개월	17년 1개월	정규직	센터업무 총괄

### 2) 분석결과

FGI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현황(사업단,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단 운영 현황

문서화된 자료로 파악이 어려웠던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 종사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인터뷰 결과, 2021년 5월부터 인큐베이팅 사업단과 디딤돌 사업단이 하나로 합쳐져 디딤돌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개의 사업단이 하나의 사업단으로 통합되는 배경으로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두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이 5월부터 없어졌어요. ...중략...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취성패 참여 후 자립 못한 분들이 주로 오시고, 디딤돌은 게이트웨이 이후에 근로능력 미약자가 주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인큐베이팅과 디딤돌을 합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종사자 3)

“인큐베이팅 사업단 참여자가 근로능력 있어서 취업 강조하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다보니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디딤돌 분들이랑 비슷하다고 판단하여서 합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2)

신규 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일럿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기존에 파일럿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시락사업단이 최근 정식 사업단(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고양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슈퍼사업단이나 편의점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을 지점 형식으로 확대할 때에는 따로 파일럿 단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단을 만드는 것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 사업단 계획은 현재는 없고, 슈퍼나 편의점은 2호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하던 사업단을 확대할 때에는 파일럿 없이 가능합니다.” (종사자 2)

“도시락 사업단이 파일럿 사업단에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바뀌었고, 현재 파일럿 사업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단 만들 때 파일럿 사업단 한 후에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전환하려면 예산대비 매출액이 10% 나온 후에 시 허가 후에 전환 가능합니다.” (종사자 3)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자들 사이에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종사자들은 사업단의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같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라고 하더라도 도시락사업단은 일반적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서 성과금 지급, 자격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형태이고, 디딤돌 사업단은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비수익형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같은 사업단에서 일을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맡게 되는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슈퍼사업단을 그 예로 살펴보면, 디딤돌사업단 참여자가 슈퍼사업단에 실습 형식으로 나가게 될 경우 기존 슈퍼사업단 참여자가 전산, 매장 운영 등 주체가 되는 업무를 맡게되고, 디딤돌사업단 참여자는 단순 진열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참여자 입장에서는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

“같은 사회서비스형인데 도시락사업단은 자격수당도 나오고, 성과수익금 성과배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단 성과금은 사업단에 속한 분들에게 그 안에서 배분 가능하고, 도시락사업단에서 실습하더라도 배분은 사업단 속해 있는 사람만 배분합니다.” (종사자 3)

“슈퍼로 이야기 드리면 담당하는 매대 있는데 실질적 관리, 슈퍼 같은데 전산 업무, 매장 운영에 주체되는 업무는 사업단 소속이 하고, 실습은 말 그대로 단순 진열,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것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

“참여자들은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죠.” (종사자 3)

## (2) 센터 내 교육 운영 현황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 담당자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로 사업단 담당자가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은 외부 강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관련 교육으로 이력서 작성, 마인드맵 그리기, 면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은 종사자 교육 및 참여자 교육 모두 포함입니다. 참여자는 직능교육, 예를 들어 슈퍼 상품 관리 관련하여 상품진열사 자격 취득 지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세무회계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단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들 기획하면 서류 총괄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 중략... 정서 지원, 인문학 교육, 사업단 이외 취업 교육은 주로 외부 강사 섭외해서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못하고 있다가 6월 중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1)

“취업교육같은 경우는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내용은 강사 분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희망디자인 사업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로 구직활동 관련 이력서 작성, 마인드맵 그리기, 면접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3)

## (3) 사례관리 운영 현황

최근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게이트웨이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담당자를 통해 현재 사례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게이트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3회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자활사업 안내, 기초면접지 작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참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참여 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요청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법인 내 산하 시설 기관이 모여 월 단위로 사례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인력과 관련하여 현재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의뢰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며, 센터의 담당자는 의뢰된 대상자에게 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를 권고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에 3회 운영해서 사업안내, 기초면접지 기록, 초기에 필요작업하고, 후에는 공동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면접기록지에 다 포함해서 IAP, ISP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웨이 231명을 제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혼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상담하는게 제한이 있어 요청하시는 분만 상담하고 있고, 사업안내 같은 것은 공동 진행이 가능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들어오셨는데 시청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분은 자활센터 사업비로 고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제 업무 차이는 그 분은 지자체 위탁의뢰 되었을 때, 상담하고 센터로 의뢰하는 역할이고, 저는 의뢰된 분들한테 센터 참여 요청을 합니다.” (종사자 7)

“사례관리는 각 사업단 담당자가 하고, 우려있으면 집중상담하고 있습니다. 월 사례회의 통해서 법인 내 산하시설 기관 모여서 진행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외부통합사례회의 고양시 유관기관과는 진행된 적 없습니다.” (종사자 3)

“저희 센터에 사례관리담당자가 없는 이유는 지침상 게이트웨이도 150명 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승인도 있고 법인 내에서도 운영위원회 승인 받아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6)

사례에 대한 공유는 월례회의를 통해 센터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업단 담당자가 사례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담당자의 역력이 되지 않아 현재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부통합사례회의 역시 코로

나로 인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월례회의 통해서 사례 공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단이 거의 여기 있기 때문에. 상황 공유만 하는 정도이긴 하죠.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뢰 후 종결, 사후관리까지 가야 사례관리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점검은 되지만, 그분에 대한 가계도 생애도, 그전에 상담하고 해야하는데 실무자가 현재 상담할 여력이 없고 업무로 인한 파생되는 업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종사자 7)

“외부가 지자체,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인데 2019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참석했었는데.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랑도 사례회의 안하고. 회의 진행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죠. 위탁의뢰 주실 때 많게는 50명 이라서...” (종사자 11)

#### (4) 업무 수행 과정의 어려움

##### ① 근로능력 미약자의 증가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담당자로 일을 하며 겪는 고충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종사자들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공존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역량때문에 근로능력 미약자와 함께 공존하는 체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종사자 1)

“디딤돌 사업 취지가 근로능력 미약자 대상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어요. 사업단으로 전환  
배치했더니 나 아프다. 못 해먹겠다. 멀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예요.” (종사자 6)

“신규사업단 만들어 가야하는 입장인데 사업단에서 일을 하실 분이 없으세요. 실제로 의지  
를 가지시고 개선하려는 분들을 만드는 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을 위해 민관이 노력  
해야돼요.” (종사자 2)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타지역보다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았어요. 소통해보면 이렇게까지 미약한 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 안하세요. 팔도 못하시는 분, 시력저하, 손가락 문제, 대화가 안되는 분들, 분노조절장애... 이런 분들도 오세요. 이런 분들로 사업단 꾸리기 어려워요. 평가나 이런 부분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

“참여주민이 쓰러지셔가지고... 그 분 대학병원 갔는데 진단이 안나와서. 거동 자체가 안되는 분이예요. 그런 분들이 센터에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센터에서 사고 발생하면 책임져야하는 부분, 실무자 입장에서 체력 소모, 그 분들 한 분만 케어하더라도 한달이 날아가고... (종사자 3)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주민들의 역량이 바뀌면 그 역량에 맞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자활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근로능력 미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가공 사업을 최대화시키고, ‘부업관리사’라는 자격증 과정도 만들었으며 이를 타 지역자활센터와 공유하기도 했다.

2010년, 2012년에는 편의점사업단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근로능력 미약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사업단 등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단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공 사업 부분도 최대화시킨 것도 저희예요. 지금도 목표이기도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장 설치운영 편의점 하고 있다가 근로역량 떨어지다보니 편의점을 못 만든거예요. 자활이라고 하는 부분 가치가 주민들의 역량이 바뀌면 우리가 사업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업관리사라고 자격증 과정도 만들었어요. 임가공사업 최초로 하고, 필요한 부분 타 센터에 다 오 픈했어요.” (종사자 10)

“편의점 사업단을 10년도, 12년도에 자활기업으로 내보냈단말이에요. 그걸 따라한 게 12년도에 나갔는데저희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안되는 거예요. 참여주민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임가공 만들었어요.” (종사자 11)

## ②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참여자의 증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가 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머무르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단 참여하면서 본인 스스로 나아갈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안주하려는 생각 커졌어요. 급여가 높은지 판단하고... 센터에 오시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안주하려는 생각 가진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략 ... 저희 자활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 안보이시고 안주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으시고, 수급 유지위해 참여하고 있다...” (종사자 2)

“외부시장에 취업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해서 여기 혜택으로 생계를 꾸리려는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기금이나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을 간구해서 자활근로 선택하는 것 만큼 외부시장 취업 시에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사자 6)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급여 혜택... 포기 못하다보니 여기서 특례 유지 한다거나 여기서 의료급여 혜택 받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 중략 ... 참여주민분들께 선생님들 취업하셔야 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안내 하는데, 이러면 병원비는 선생님이 줄꺼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월 200이상 받지 않으면 수급권 유지가 낮다라고 하시죠.” (종사자 7)

“슈퍼사업단 희망하시면 실습 언제든 가능하고 편의점도 언제든지 실습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막상 가시면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하시고... 결론은 디딤돌 사업단으로 가시고 ... 중략... 주로 자활센터에 월에 1,2회 나오면서 수급유지가 희망이라고 하세요.” (종사자 6)

“최종목표가 수급유지라고 하니깐 1인가구의 경우 취업하면 안되니깐. 취업의사가 전혀 없으시거나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취업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수급자격 포기하면서까지 그돈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의료급여 받을게요 하시거든요. 합격해도 취업 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어요. 그런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나가셔야 필요한 분들이 또 들어 오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안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종사자 4)

“슈퍼같은 경우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70만원인데 독려해도 하시는 과정

중에 튕겨져 나오거나 거부하는 참여자가 다수세요.” (종사자 3)

### ③ 급격한 참여자 증가로 인한 어려움

한편 종사자들은 최근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되는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센터 의뢰 전 초기 상담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경우에도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종사자는 무분별하게 의뢰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단 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참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참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너무 많은 의뢰자, 참여자들이 있다보니 이분들이 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도 있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계속 2호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사자 6)

“계속해서 신규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쪽 고층이라함은 의뢰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활사업 총괄하면 300명 넘는데 자활근로사업(게이트웨이 빼고) 참여자 수는 현저하게 적은게 사실인데, 신규사업 발굴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참여자수가 없다보니 근로능력높으신분한테 끌려다녔는데 신규사업 추진하기에 사람이 너무 없었다면, 현재는 준비없이 사람이 너무 늘어나서...” (종사자 6)

센터 종사자들은 고양지역자활센터가 경기도 내 인구가 비슷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자활사업 참여자 수 및 사업단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자활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사업단에 배치하여 사업단을 운영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초에 기존 참여자들을 게이트웨이로 전환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참여자 증가에 대한 준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음을 인지하

고 있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 배치 및 종결 등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되는 참여자는 계속 증가했던 상황이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그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참여자 수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센터 의뢰되지 해주려 하고 자립관련 활동 푸쉬하면 역정내고 참여 미희망하는 경우 많은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존 분들을 게이트웨이로 다 전환 시켜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종사자 2)

“신규사업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리도 만들고 계약도 하고 준비할 과정 많은데 솔직히 물밑듯이 의뢰자가 밀려왔어요. 한번에 20-30명 의뢰되었고, 이걸 재정립하려고 21년에 다 게이트웨이로 전환했어요. 게이트웨이에서 한 번 걸려져야하는데 안걸리고 다 사업단으로 넣으라고 하니깐... 이 분들 다 사업단에 넣었더니 운영이 안돼요. 그러다보니 다시 게이트웨이로 간 거예요.” (종사자 6)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게이트웨이가 많은 이유가 참여주민분들이 사업단 배치되고, 안하는 분은 종료되고 이게 됐어야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뢰됐는데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진 거예요. 운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랬죠. 저희 시는 홀딩을 안하고 운영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넘겼다는 거죠.” (종사자 11)

종사자들은 신규 사업단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퍼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단으로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외 사업단은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참여자가 원해도 사업단으로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임가공 사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재 단순 임가공 사업 발굴을 위해 업체와 미팅이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신규 사업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1, 2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신규사업단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만 지나도 사업단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사자 2)

단순노동하면서 급여 받아가는 분들 있어야 하고. 임가공 사업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되기전에 너무 많이 의뢰가 되시니깐. 단순임가공 관련해서 업체 40개 방문 예정입니다.” (종사자 6)

“인턴형 부분 통해서 게이트웨이에서 실습참여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했을 때, 막 가서서 괜찮으시고 기존 분들이랑 잘 어울려지고하면 슈퍼사업단은 전환 가능한데 택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 대비 매출이 많지않기 때문에 시장진입형만 유지할 만큼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해도 그 사업단으로 가기는 어렵죠.” (종사자 6)

그러나 일부 종사자는 현재 종사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참여자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단만 늘어날 경우, 종사자가 이를 담당할 여력이 없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자를 지원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신규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없고, 근로 의지가 약해 참여를 독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무자 한명 당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센터도 하나고, 사업단 늘어난다고 해도 (실무자가 부족해서)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종사자 7)

“저희 센터 내에 수용인원이 50명. 외부작업장 얻어야하는데 그쪽으로 넘어갈 실무자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백석에 100명 나가는데 한달에 인건비가 1억 나갈텐데 실무자 인원이 반 정도밖에 안되다보니...” (종사자 3)

“게이트웨이 많은 거 인지하고 있어요. 5월20일자 265명인데 실무자 규모에 비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 많지만. 사업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올해 신규사업단 예정인데 설립한다고 해도 근로능력 미약자 오시고요. 어쩔 수 없이 단순근로활동 진행하는 건데, 이 분들이 안주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운영 주체가 없어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사자 1)

“근로능력 미약자 욕구가 대부분 저희센터에서 볼펜작업 같은 단순노동하면서 수급유지가

목적이에요. 불펜공동작업. 실질적으로 사업단 가시더라도 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가면 급여가 동일하거든요. 성과급, 자립성과급 이런 부분 있는데 그거 하나로 독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종사자 1)

#### ④ 사업단 배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참여자들을 사업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단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참여자가 민원 제기를 통해 참여를 고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딤돌사업단 등 강도가 낮은 업무를 하며 자활급여를 받다가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센 사업단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이 사업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배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 강도가 낮은 사업단에는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종사자도 있다.

“참여주민 분들의 근로욕구. 이 사업단에 가고싶다. 이런 분이 도시락사업단에 계시긴 한데 도시락에서 조리를 하실 분인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무조건 사업단 넣어달라 민원 넣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종사자 9)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며 자활급여 완급여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경우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사업단(택배, 배송, 슈퍼, 편의점 등)으로 배정을 거부” (종사자 3)

#### (5)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사항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하는데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봉이 낮은 종사자의 경우, 참여자가 자활성과급을 받는 경우 그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표현하였다. 현재 자활사업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합쳐져 있고, 기존 직원의 호봉 승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직원의 업무에 따라 급여 테이블이 상이하여 업무 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종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중견기업 근로자 지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센터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없어서 초과근무 할 경우, 대체휴가로 대체되고 있는데, 슈퍼 오픈했을때 8시 출근 10시퇴근해서 대체 휴가가 8-10개 생겨도 현실적으로 못쓰고 통합임금 체계로 변동되면 좋지 않을까.” (종사자 3)

“급여 부족하고, 실무자 분들이 자괴감 느끼기도 해요. 슈퍼사업단에서 성과금까지 받고, 월차 주차 수당, 사회보험 환급 등 포함하면 참여주민이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종사자가 참여주민보다 적게 받기도 하고. 여기에 내일키움통장 3년 뒤에 만기되면 2000만원 가져가는데, 내일채움공제 받고 하는 부분 보면 자괴감 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중견기업 근로자 지원)도 보조금 사업 인건비 받고 있어 해당안되고, 이렇다보니 이직률 높고, 참여주민 개선은 매년 이루어지는데 실무자를 위한 부분은 개선 없어서 이직률 높은 것 같아요.” (종사자 2)

“실무자들이 오래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합쳐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승급하면 호봉승급을 못 쫓아가요. 실무자가 승진하는 거 반영 안되어 사업비 나오니깐. 이 친구들 나가면 경력자를 못 뽑고. 호봉승급은 해주는데 나가면 신입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종사자 10)

“사회복지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고양시 시비로 전액 지급해주고 있고. 사업비, 운영비 별도... 인건비 만큼은 채용되는 인원만큼 보조해주고 있어요. 얼마전까지 일반직과 계약직 급여테이블 차이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고유 업무 배정이 어려운 부분있었고. 실무자끼리 연대해야하는데 희망디자인 기금사업 다 연계해야하는데 급여테이블 자체가 차이 나는게 엄청 불편했어요. 지금은 급여테이블 맞추고, 계약직 처우개선비 지급되서 일반직과 계약직 차이 없어졌어요. 올해 시에서 해주셨고, 자활사업 활성화 1순위는 자활전문가 양성. 경력자가 오래 일하게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해요.” (종사자 10)

## (6)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 인정 문제와 근로능력 미약자의 배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생소한 부분 있어요. 협동조합 하게 되면 네트워크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네트워크 활성화는 좋기는 한데,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 떨어진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협동조합 교육 다녀왔는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건데 전환하면 ... 약간의 반감은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 2)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해결방법인가 의문이에요. 협동조합 장점이 역량 되는 주민분들 취업시키는 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활기업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 중략 ... 근로능력이 높은 사람만 가지고 갈 것 같은 염려도 되고, 협동 조합으로 가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너무 집중해서 나온게 아닐까...” (종사자 11)

## (7) 자활센터 운영 관련 향후 계획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사업단, 슈퍼사업단, 택배사업단, 도시락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사업단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고, 근로 환경이나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도 자활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슈퍼사업단은 근로역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어 사회통합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편의점과 슈퍼에서 배송 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택배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슈퍼사업단을 통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식자재를 쉽게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도시락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은 손님이 찾아주는 거. 청소 이런 거 했을 때 거울에 흡고... 참여주민분들은 깨끗한 곳에서 일하길 원하시고, 처음에 편의점 시작했을 때 그때 엄청 좋아했어요. 점장 명찰 달고 깨끗한 환경에 밝은 곳에서 일하는 것... 중략... 3000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기금이나 추가 예산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했던 게 편의점. 결국에는 도전해야 했던 거고 기업연계형이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중략... 관목표로 하면 안되고 일반고객 상대하는 거.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제일 안정적인 건 편의점.” (종사자 10)

“편의점은 역량 높은 사람만, 슈퍼는 역량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슈퍼사업 시작할 때 배송사업 늘어날 것 예상하고 배송사업 바로 함께 간 거고, 편의점도 배송 넣고 그래서 배송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안에 생태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사자 10)

“슈퍼하면서 도시락사업단 생각하게 되었고, 자활 생태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반고객 수익구조 만들어야하고 내부 고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소비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고, 슈퍼 식자재를 도시락사업과 연계, 슈퍼 폐기물, 신선하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재료 활용하고, 향후 주유소도 에너지 사업. 생태계 만드는 것에 있어 붙여가는 거예요.” (종사자 10)

한편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비를 활용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전문가 채용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꺼렸고, 전문가로 채용된 인력이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기 용이해졌으며, 이에 따라 슈퍼사업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썼었어요. 마두도서관 구내식당 했을 때 기능적 부분때문에 쓰긴했는데, 사업비 많이 쓰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제공이 안되다보니... 사업비 적게 쓰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거죠. 2019년 하반기에 개정되고 이제는 사업비를 쉽게 쓸 수 있으니깐 이제 쓸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슈퍼사업단은 사회통합적 가치가 있고 역량이 분포가 넓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전문가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실무에 대한 부분 필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활에 있는 주민 이해 못하면 안되고... 현재 참여주민 중에 전문가로 채용하는 거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자분들이 인정해 줘야하는 부분... 하반기에 4명 훈련 시키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10)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와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은 자활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즉 참여자의 사회통합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은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스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8)

“스스로 근로 의욕을 가지는 것” (종사자 9)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심을 갖게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과정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 (종사자 4)

“자활은 개인의 의지로 살아가자는 뜻.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적응 및 훈련과 자활센터의 도움, 연계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의지로 취창업하여 나아가자라는 뜻이라고 생각” (종사자 2)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등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전적 의미인 ‘자기 힘으로 살아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 대인관계의 회복 등을 통하여 스스로 고립시키던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사자 3)

“자립.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종사자 7)

“자활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활사업에서 역할은 자활이란 참여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부 사업 추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6)

“자활은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탈빈곤(예방), 사회통합” (종사자 10)

한편 현재의 자활사업이 고용과 복지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고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일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사자 중 일부는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이 최우선으로 안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사자도 있었다.

“체계를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가라도 오셔서 볼펜 끼우는 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시는데 그런 역할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복지나 고용이냐가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 높아지고 수급자 많아지고 차상위 많아진 상태에서 고용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바뀌는 건 희망디자인 통해서 상담하고 연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2)

“자활사업에서의 자활은 여기 오시면서 일상생활 나아지도록 지원받고 상담 통해 취업활동도 하시면서 나은 여건도 찾아가는 게 자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사자 3)

“물론 자활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시죠. 근로유지형 사업 참여 하시면서 그렇게 수급혜택 받으면서 그분들이 꼭 참여하시면서 일반참여자로 전환되실 때까지 여기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사자 6)

## (8)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① 공간 및 인력 확대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센터 공간 및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일부 종사자는 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 확대 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사업단을 담당하고 있어 신규 사업 개발 등에 대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 충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리적 위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동 작업장 하나 확장했는데 거기를 거점 개념으로 그곳에 많은 참여주민이 상주하는데 실무자 2~3명 정도 거기 파견되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는 접근성 떨어지고, 공간도 부족합니다.”(종사자 3)

“센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교육장 공간 있으면 자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가 오고싶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때문에 현재는 15인 정도만 오시고, 센터가 1개인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종사자 4)

“백석작업장 1개를 혼자 감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에요. 인력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종사자 4)

### ②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종사자들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식개선은 자활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 모두를 포함한다.

“자활센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여기오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종사자 4)

“참여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종사자들은 센터에 의뢰되기 전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이 참여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활센터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에 대한 공유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가 사업에 대한 이해 높여야 돼요. 지자체에서 안내될 때 자활센터에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다 이렇게 안내되면 안되고, 불펜끼우면 130만원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되고, 초기 안내될 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단순한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활계획 수립을 위한 곳이라고 안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7)

“참여자분들 의뢰 되시기 전에 상담과정에서 그쪽(동주민센터) 자체에서 설명 잘못해주는 경우 많아요. 여기 있으면서 자활근로 하고 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오세요. 주민센터, 구청,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기 계신 분들이 자활센터에 대해 잘 아시고 설명이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중략 ... 인식개선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활센터 잘 모르는데 이 곳이 어떻게 참여주민과 나아가는 곳인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중략 ...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민센터 담당자 모아서 자활센터에 대한 교육, 어떻게 상담해야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 인식 개선 자체가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무원들도 공유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하시는 담당자가 자활사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종사자 1)

### ③ 자활사업 참여 의뢰자에 대한 초기 상담 강화

현재 종사자들은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참여자들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의뢰 전 단계에 참여자에 대한 근로역량 평가가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에 적합한 참여자가 의뢰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 분들(근로무능력자)은 조건제시 유예나 무능력으로 다시 검토해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분도 센터로 넘기다보니... 그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의뢰되니까.” (종사자 3)

“의뢰된 분들 중에 60% 정도만 9시-18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몸이 아프시다, 집에 사연이 있고 공부중이고... 자활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프로그램 이런 참여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건데 본인 사정이 안되는 분들이 자활사업 위탁 의뢰가 되고 있어요.” (종사자 10)

### ④ 지역자활센터의 행정상 권한 확대

한 종사자는 최근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참여자 종결 과정의 행정적 절차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조건제시유예자의 행정 처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건별로 전화로 확인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센터 직원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희 센터 권한 커졌으면 좋겠어요. 종결할 때 즉각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서명 받아서 종결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1차, 2차 안내하고, 3차는 지자체에서 해야하거든요. 또 사통망 확인 못하는 상황이라 참여자가 조건제시유예 신청했다면 제출하신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고, 승인이 안됐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또 확인해야하고... 센터에서 참여자 관리하고 있고 하니깐 행정적 절차 줄이자라고 한다면 그런 권한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략 ... 종결할 때 참여 비희망자, 우체국 가야하고, 세 번째는 지자체... 통보서 작성, 아예 자활사업 희망 안받는다 이런 거 다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참여 희망 안하면 그냥 서명해서 종결해도 하지 않을까... 타 센터 양식도 공유 받고 했는데 저희쪽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 간소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7)

### ⑤ 참여자의 정신건강검진 필요

최근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상담이나 타 기관 연계 등을 거부할 경우, 자활센터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료소견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여주민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어떤 상태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 중략 ... 참여주민 중에 몸 아프셔서 진단 필요한 분들,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블루도 있고... 주민들 상담하고 정신건강상태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어떨까...” (종사자 11)

“저희 참여주민이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많고, 자활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하면 일반수급 전환해야하는데 무조건 다니겠다 이러시는 분 많고. 저희 쪽에서는 의료소견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으면 좋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죠.” (종사자 3)

### ⑥ 근로유인 및 탈수급 제고 방안 마련

FGI가 진행되는 동안 종사자들이 자활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참여자들이 제도 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종사자들이 보기에 참여자들 중 일부는 수급제도 유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단 내의 업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쉬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기 원하는 참여자가 많아서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에 비해 자활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종사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종사자는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분들을 위한 근로유지형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이 경우 외에는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단을 만들도록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근로유지형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자들이 업무 강도가 약한 사업단에 참여하고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종사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장되는 사항이 많아 제도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종사자는 현재의 자활사업이 자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안주하기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급여 대비 노동강도가 높여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펜작업하면서 120 받아간다. 업무강도가 낮은 거. 자활사업에서 배제 시켜야하지 않나. 그런 사업 운영하더라도 근로유지형 이런 쪽에 주고 그 외에는 상위사업으로 가게끔. 지침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사자 3)

“저는 수급제도가 무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활센터 참여자가 계획성이 있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자활사업이라는 제도가 더 안주하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 7)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는데 일의 강도가 있어서 근로시간 조정 필요가 있어요. 근로강도에 차이 나면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로 다 돌려서 참여 시간조절하고 3시간 미만 사회서비스형 급여의 반, 3시간 초과하면 사회서비스형 완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침에 있는 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정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종사자 7)

“외부 시장에 나가서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일어서 사는 게 자활이라 하면 가능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서 지원하는게 너무 많으니깐... 주에 22시간 근무하면 되니깐. 그만큼만 하고 놀아야지. 이런 분들 있다보니 근로활동이 성실하신 분들을 자활근로로 전환해서 그 분들이 신규사업 만들면 보내드리고 결원 발생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성실근로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부시장 나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나갈 바에 자활근로나 낫다고 생각하니깐. 외부에 나가더라도 이 분들이 6개월 후 재의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들이 외부시장 나가서 취업하더라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원되는 게 많다보니깐 자활을 위한 방해 요소가 된다... 너무 임금도 높고.” (종사자 6)



“인원이 300명 넘으니깐 자활 가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 수급제도나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분들 많으세요. 연령이 낮으시거든요. 현재 저의 3년이랑 수급자 3년이랑 누가 더 운택한 삶을 살 수 있을가 생각하면 제가 저요. 근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외 지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여자도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해요. 자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안주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 7)

### ⑦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가 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참여자의 근로역량 약화로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성과금 등 자활급여 인상과 낮은 수준의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FGI에서 한 종사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활전문인력 양성을 꼽기도 했으나 현재와 같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종사자도 있어 종사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 제4절 소결

자활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참여자, 종사자 FGI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232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주요 경력,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주민의 행복도 증진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양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들은 행복도가 0점에서 10점 중 2.62점으로 2020년 고양시민 평균 5.68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2021년 신규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가 많고 이혼 및 사별한 경우가 약 4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양시는 지역자활센터가 파주와 접경지인 일산서구에 1개소가 있으며 고양시 기초수급자 규모, 자활센터 공간 협소, 덕양구에서 센터 접근성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참여주민의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참여주민들이 본인의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개별 자활역량에 대한 재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자활 가능성 및 방법을 제시·관리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활근로 사업단의 다양성과 일자리 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게이트웨이에 있는 많은 인원에 대한 사업단 배치와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단

확대가 필요하다.

고양시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자,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FGI 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 참여자 6인을 대상으로 자활기업 창업 과정, 운영 현황,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기업의 장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활기업 대표들은 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자활기업 운영에 있어 판로개척, 시장에서 타업체와의 경쟁, 육체 노동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업 운영의 지속 여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활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현재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 설립 전인 자활근로사업단에 머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조례를 통해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자활기업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활근로 참여자 18인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 경험, 어려움, 자활사업의 장점,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들을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활근로 참여 과정에서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수가 부족하고 사업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행정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점,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자활급여의 불평등성, 열악한 근무환경,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장점에 대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친구를 사귀는 등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업단의 근로환경이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마음이 편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탈수급이나 취창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으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 업무 관련 지식 습득, 향후 경력으로 인정되어 일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현황(사업단,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종사자들은 근로능력 미약자 증가 등으로 인해 편의점 사업단 등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단의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의지가 낮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있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고양시의 자활근로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계에 놓인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로 인해 일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종사자 다수가 현재의 자활사업이 고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일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종사자들은 자활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사회통합이 중요하며, 자활사업이 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FGI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활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지원(한시적 인건비 지원, 공공부문 참여 기회 제공)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자활기업 참여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신규 아이

템 개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사업단을 만들 때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업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청년층의 경우 청년에 적합한 사업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참여자 입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일 사업단 내 또는 사업단 간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자활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참여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업무 강도가 낮은 사업단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였다.

다섯째,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모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센터 추가 설치 등 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GI를 통해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참여자 증가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소 형태로 추가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덕양구에 교육 및 사업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곱째, 주민센터와 시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안내가 필요하다. 자활센터로 의뢰되기 전 자활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자활센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오는 참여자들로 인해 센터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활사업 참여 의뢰 전, 근로역량평가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뢰 후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건유예처리 등 일반수급자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근로능력이 미약

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종사자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며, 원활한 자활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홉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초과근무수당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사자가 자활사업 영역에서서 경력을 쌓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최근 참여자의 급격한 증가 및 근로능력 미약자 및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 증가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제 6 장

##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고양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

제2절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제절 고양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민간에서 빈민지역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시작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workfare)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왔다. 근로연계복지는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을 일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어 스스로 복지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유급노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목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지와 자활역량 향상을 통한 탈수급의 확대’로서 이러한 자활사업의 목표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탈수급율, 취·창업률을 통한 빈곤 탈피 등 경제적 지표로 평가해 왔다. 이에 실무자들도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본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50~60대의 중고령층이 많고 무엇보다 근로역량이 매우 낮아 경제적 자활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능력 미약자를 대상으로 근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실적에 초점을 두어 사업으로 수행했을 경우 자활사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사업의 성과를 내는 크리밍(creaming) 효과와 취업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파킹(Parking)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박노옥, 2013), 이로 인해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자활사업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고용 등이 모두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이다(권지성 외, 2020). 자활사업의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활사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우울,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이라는 성과를 보여준다. 자활근로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를 넘어서 빈곤의 어려움을 경험한 참여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만 의존하여 자활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 아닌 참여주민이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근로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자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Two-Track)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자녀 양육 및 돌봄 등 취업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취·창업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게는 지역자활센터의 근로 기회를 통해 신체, 심리,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자활을 위한 심리적 변화를 도모해 사회통합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탈수급과 취·창업이라는 결과지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실무자의 노력과 함께 참여자의 변화를 주요 성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활사업에서 참여주민의 ‘이용자 중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 이용자 중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서비스 제공자인 자활센터 전문가가 정해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등 취업 역량 강화 과정, 자활계획 수립과정, 사업단의 선택 과정,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1. 자활사업단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1) 수요처 발굴(신규 아이템 개발) 및 자활사업단 확대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업단 배치 전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 수가 많으므로 이들의 근로를 위해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과 자활사업단 확대가 필요하다. 자활참여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서 신규 사업 개발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자원조사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예: 나와 관계 맺은 5명에게 자원 조사 하기) 신규아이템 개발에 있어 필요 시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한 근로역량평가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가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근로능력 미약자의 능력에 맞는 임가공업 또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20~30대)의 비율이 18.8%로 이들을 위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자활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활사업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던 돌봄서비스의 경우, 병원의 통합돌봄제도의 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현재 직접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의 변화에 맞게 자활사업도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 중심의 업종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고양시 특화 사업 추진

고양시에서 기존에 특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전·확장시키고 고양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고양시는 자활사업 최초로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으로 보급했다. 보광훼미리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GS리테일과 협약하여 슈퍼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GS 리테일은 자활사업단에 점포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발주지원금 등 개설 투자비용과 입문교육, 영업노하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은 상호협동을 통한 가치 창출과 보증금, 개설투자 비용, 교육, 운영 등에 있어 자활사업단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자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양시의 기업연계 자활사업의 강점을 살려 편의점, 슈퍼 등 기존 사업의 영역 확대 뿐 아니라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자활사업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슈퍼, 편의점 사업단과 함께 유통으로 배송, 택배 사업,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 사업, 자원을 재사용한 카페 사업 등을 연결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파생되고 연결되어 자활사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간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자활사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의 특수한 상황과 참여자의 욕구에 기반한 고양시 특화 사업 개발이 중요하다. 향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중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관련 지표 추가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도농복합단지’라는 특성을 살려 치유농업 형식의 농장을 운영, 계절채소, 토마토하우스, 버섯하우스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공공운영 구내식당 등에 판매하는 사업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에 창고가 많은 특성을 활용하여 쇼핑몰 등에서 주문받으면 창고를 활용하여 포장, 택배 발송을 하는 등의 사업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역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 추진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 3)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확보

#### (1) 적극적인 공공자원 활용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생산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민간기업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된 시장’의 차원에서 자활상품이 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공공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자활사업지원 조례 중 자활사업 지원 관련 조항이다.

[그림 6-1] 고양시 자활사업 자원에 관한 조례 중 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근로사업단은 보호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에 카페, 매점, 아동복지관 도시락 작업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이후 급성장한 지역자활센터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 지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2)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현재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 이후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보편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자활사업의 5대 표준화 사업의 하나로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사업 운영 경험을 많이 축적한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지역자활센터 3개 곳에서 지역통합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세탁, 이동지원, 케어팜, 미니가든, 주거환경 사업 등 직접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한 매출액도 상당하며 다양한 파생사업이 생겨났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참여주민의 자긍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한 소규모 집수리, 청소, 소독, 간병, 긴급주거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지역의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돌봄은 보다 더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시청의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강화

### 1) 정서적 자활 강화

본 연구를 통해 본 고양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50~60대의 중고령층이 많고 무엇보다 근로역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근로능력이 미약한자에게는 근로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이중적

(Two-Track)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게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로 기회를 통해서 신체, 심리,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자활을 위한 심리적 변화를 통해 사회통합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 탈수급,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자활사업 실무자 역시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참여자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이혼, 별거, 사별한 사람이 전체 참여자의 49.3%를 차지하고 있고 1인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수준(삶의 평가\_0~10점)이 매우 낮게(2.62점)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최근에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행복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장점에 대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친구를 사귀는 등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즉,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많다는 점과 자활사업의 정서적 효과 그리고 자활사업이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고용 등이 모두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주민의 정서적인 자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 사례관리 강화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별 욕구 및 문제에 맞추어 접근하는 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역의 자활근로와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고양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하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없고 게이트웨이 인원이 너무 많아 실제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기 힘들다. 사례관리는 인력 1인이 담당할 수 없고 4~5명의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전체 참여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를 선별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외부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 3) 동아리활동, 자활공제협동조합 결성 등 사회적 관계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모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년층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한 지자체에서는 자활 참여자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송년회, 동아리 활동으로 매년 기금에서 연간 7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들간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자활공제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주민들과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출자금을 조성하고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으로 대출하여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협동하여 돕는 자조운동으로 서울에 9개, 경기 10개, 인천 4개 등 전국에 46개의 조합이 운영중에 있다.

소모임, 동아리 활동, 자활공제협동조합 등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3. 자활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초과근무수당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자활센터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직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8.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3.5%에 달해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정원표상의 인원 미채용, 호봉삭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미책정 예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센터 3호봉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5% 수준이지만 실장은 86%, 센터장은 82%정도로 경력이 올라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진다. 참여주민이 성과금과 4대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책임감이 높고 업무량이 높은 종사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종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표 6-1]은 16개 지자체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현황이다.

[표 6-1] 16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현황

	명칭	정규직	비정규직
강원	사회복지수당	5년미만 15만원 5년이상 18만원	5년미만 15만원 5년이상 18만원
경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년 미만 5만원 5년 이상 10만원	-
	처우개선비	5만원	5만원
경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만원(명절 각 10만원)	-
경북	종사자 수당	14만원	-
광주		10만원	-
	단일임금구축	'21년 95%, '20년 98%, '23년 100%	-
대구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20만원	-
대전	종사자 수당	10만원	10만원
	정액급식비	5만원	5만원
부산	복지수당	5년 미만 21만원, 5년 이상 26만원	-
	복지포인트	10만원	-
서울	정액급식비	10만원	-
	조정수당	단일임금 차액보전	5만원
	관리자수당(센터장)	20만원	-
	복지포인트	10호봉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
울산	복지포인트	3년~5년 미만 20만원, 5년 이상 30만원	-
인천	단일임금구축	'21년 94%, '20년 97%, '23년 100%	-
	복지포인트	10호봉 이하 15만원 10호봉 초과 20만원	10호봉 이하 15만원 10호봉 초과 20만원
전남	종사자 특별수당	9만원	
전북	종사자 특별수당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처우개선비	센터장 15만원 1년~5년차 17만원 6년~10년차 18만원 11년차 이상 20만원	1년~5년차 17만원 6년~10년차 18만원 11년차 이상 20만원
충남세종	처우개선비	3년미만 9만원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
충북	종사자 대우수당	3년 이하 14만원 3년~7년 15만원 7년 이상 16만원	

<출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지자체별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없애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용, 자기개발비, 식대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2023년까지 단일임금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경우 종사자가 총 12명이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 2) 지역자활센터 인력 효율적 활용

지역자활센터는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 사업단 운영, 취·창업 지원 및 알선, 자활기업 창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금사업, 상담, 사례관리, 조사 및 연구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자활사례관리사와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없는 상태이고 자활도우미, 자활 사업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하고 사례관리 및 신규 사업 개발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과 자활도우미사업단을 통해 종사자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부업지도자 양성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자활사업 전문가 활용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자활사업비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지역별 전문가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센터당 평균 2.2명, 부산은 2.6명, 인천은 4.8명을 사업단에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다. 고양시도 전문가를 채용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6-2] 지역별 센터별 전문가 채용사업단 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세종	충북
1.7	1.9	0.55	1.9	1.3	0.8	0.2	2.6	2.2	0.6	4.8	1.1	1.2	1	0.2	0.8

〈출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 (2) 자활도우미 채용

자활사업지침에 따르면 자활도우미는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관리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원칙은 1년이지만 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단가로 지급하되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평택시의 경우 자활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센터 실무자의 행정업무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노동을 방지하고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도우미의 급여상한은 월 250만원이지만 센터 기관 운영비에서 다른 수당을 지급하여 직원들과 맞추어 지급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활도우미를 활용한다면 성과와 실무자 업무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부업지도사 양성

자활기업 참여자의 경우 근로능력, 근로의지, 작업분량, 성과의 편차가 크지만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참여자 간 갈등이 많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업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여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당사자성’도 확보하고 사업단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3)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자활사업 종사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 사례관리, 상담에 대한 사회복지역량 외에도 경영 마인드도 필요하고 시장경쟁력과 관련된 기술력도 있어야 한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증가 및 근로능력 미약자,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 증가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도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며 번아웃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4. 거버넌스의 강화

### 1) 고양시청 자립지원과 역할 강화

자활사업은 국고보조가 비율이 높은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상황, 지역주민의 특성,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및 조직간의 관계 등 현장성이 강조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청 자립지원팀은 타 시의 자활업무 담당부서와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적고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노숙인 지원 등 자활사업 외 추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경력도 다소 짧은 편으로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매우 높을 수 있는 구조이다.

연구결과 자활사업이 활성화된 지자체 뒤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활담당 공무원은 관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에 카페, 매점 설치 시 사업장 무상임대 및 운영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 전체 부서에 자활사업에 대해 홍보하며(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우선구매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정보(생산품목 등)도 리스트화하여 공유 등), 지역자활센터가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임을 알리는 등의 노력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자활사업은 사업과 예산이 복잡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고양시는 현재 증가하는 참여주민을 수용하고 자활사업 확장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경력이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 2)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자활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양시와 고양지역자활센터와의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가 필요하다. 이 회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참여자에게 자원을 연계하고, 센터와 집행부가 자활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고충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서로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지역자활센터 의뢰 과정에 있어서도 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자활센터가 업무 과중 등 센터 내부 정비가 필요한 기간 동안 대상자 의뢰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최소한으로만 의뢰하도록 하는 조정기능도 필요하고 근로역량평가, 자활 계획 등에 대한 논의 및 공유도 필요하다.

자활센터로 의뢰되기 전 자활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자활센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오는 참여자들로 인해 센터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39개 동행정복지센터 자활담당자에게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추진함에 있어 100대 국정과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도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및 관리 기술, 자원조달, 유통망 확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취약계층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취업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개발, 판로 확보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병원 및 사회복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유관기관과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 5. 자활기금 적극적 활용

### 1) 자활기금 운용 조례 개정

고양시의 자활기금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자활기금뿐 아니라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관리·운용 관련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사업’ 으로 자활사업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자활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모호함이 있다.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기금활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집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실제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서 자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나 사업장 임대 용자금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 운용 조례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를 분리 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자활기금 적극적 활용 및 확보

고양시는 자활기금 조성액이 약 36억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조성금액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활기금 이자수입의 감소와 함께 자활기금 집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도 자활기금 사용액이 낮다.

자활기금 원금보전보다는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과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여 자활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성 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후원 등 자활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양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기능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6. 자활기업 육성

### 1) 자활기금 및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적극적 활용

고양시는 자활기업이 현재 총 5개로 자활기업 수 및 자활기업 종사자 수가 적고 영세한 편이다. 연구결과 현재 자활기업은 운영에 있어 판로개척, 시장에서 타업체와의 경쟁, 육체 노동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업 운영의 지속 여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주민에게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고자하는 의욕을 불려일으킬 수 있다. 자활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 수익증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활기금 및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1년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자활기금으로 사업자금융자 및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금 이자보전도 가능하며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도 지원가능하다.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과 수급자, 비수급 참여자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년까지는 100%, 2년 초과는 50%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1년 지원 가능하고 6개월까지는 100%, 6개월 초과는 50%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운영지원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우선임대지원 및 민간위탁사업 우선 위탁 지원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 구매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업 담당자를 지원하는데 자활기업 담당자는 회계지원, 각종 공모제안사업 기획서 작성, 사업연계, 컨설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무비용절감, 계획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앞서 제시한 항목 모두를 지원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외 자활기업 참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및 자립의

지 개선을 위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 2) 자활기업 협의체 구축

고양시 자활기업은 구성원이 각 기업당 2명에서 최대 6명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편이다.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관리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창업기업으로서의 속성이 있다. 자활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정책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협의체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7. 자활사업 인프라 점검 및 확충

##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유형변환 검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감소 및 근로능력 저하,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적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백학영 외, 2018; 유비 외, 2020).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많은 기관들이 전환 이후 실제로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이 증가하였고, 지자체 우선 지원사업 대상,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국고 지원 비율 감소로 인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단의 매출액 발생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근로능력 미약자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에 대한 훼손 우려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인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유형변환이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 2)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치

고양시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치가 일산서구 끝에 위치하여 덕양구 거주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도 협소하다. 자활사업참여자 중 센터까지 왕복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인 참여자가 약 28%에 이르고 있으며 설문조사 및 FGI에서 센터 추가 설립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립 또는 분소 운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 이외에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

[표 6-3]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구분 (연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15	2017	2018	2020	2021
총계 (개소)	5	70	169	192	209	242	251	249	249	250	250
지정 (개소)	5	50	99	30	17	33	6	1	0	1	1
취소 반납				7 (취소 4)			2 (취소 1)			1 (취소 1)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안내」, 2021, p. 146.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가지정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도 추가지정 검토 후 신규 설치가 아닌 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지역자활센터 부족에 대한 추가설치 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6-4] 지역자활센터 센터 추가 설치(안)

구분	내용
1 안	지활자활센터 분소 설치
2 안	신규 자활센터 추가 설치
3 안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

1안은 현재 고양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총괄하고 덕양구에 분소를 설치하는 안이다.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센터 신규 설치에 비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센터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고양시 자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안은 신규 자활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간 마련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 기준 최소 1억 8천만원(최소형)에서 최대 3억 6천만원(확대형) 정도의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2안의 경우 기존 지역자활센터와 신규 센터와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관간 사업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표 6-5]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

(단위: 개, 명, 천원)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종사자 정원(명)	9	7	5	4
예산(천원)	363,354	295,765	225,625	182,032

<출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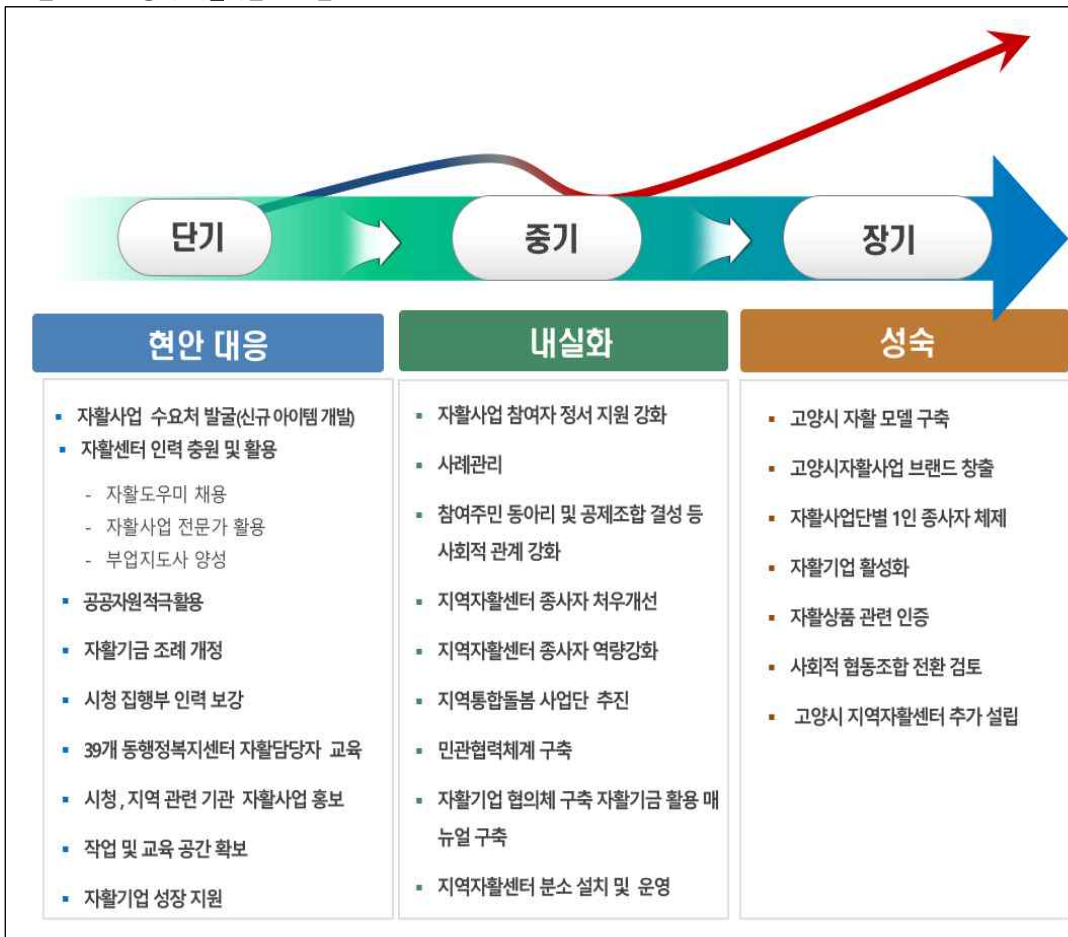
3안은 자활근로사업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하되, 지역자활센터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등에 사업 전 과정을 일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시 사업별로 개별 위탁 가능하다. 인천서구의 경우 현재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봉제사업단, 임가공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3안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3가지 안 중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위탁을 받을 기관을 찾기 쉽지 않고 자활사업이 핵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분소 설치 후 신규 설치로 전환하는 순차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2] 고양시 자활사업 로드맵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현주·조성은·곽유나(2015).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정원·이문국·강병노(2020).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표준모델 방안 연구. 사회투자지원재단.  
 권지상·조준용·정선옥·장연진. (2020). 자활사업 실무자들이 경험한 자활사업의 맥락과 패탄: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32-250.  
 김준현(2012). 서울광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연구, 13(4), 183~204.  
 노대명·이현주·최현수·강병구·박노옥·이병희·장원봉·전병유·우선희·박형준(2013).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노옥(2013). 고용연계 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백학영·김경휘·한경훈(2018).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4), 265-299.  
 (사)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경기자활기업협회·경기광역자활센터(2021). 2020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서광국(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2.  
 인천광역시,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2020.  
 장대철·김효영·윤성, ·조상균·김정현(2018).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리지 협동조합.  
 최병근(2020). 자활기금 관라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최조순·홍서인(2019). 경기도 자활기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20a). 201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20d). 2020년 자활사업 안내(1).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자활사업 안내(1).  
 서울광역자활센터(2021), 서울시 자활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유바·김경휘·이선정·조부현·김지민·곽은하·이예인(2020). 인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20).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황덕순, 노대명, 김재진(2009).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해외문헌]

- Hong, P. Y. P., Sheriff, V. A. and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Voices from low-income jobseekers", *Qualitative Social Work*, 8(3), 357-376  
 Goldsmith, M. & Page, E. (Eds.). (1987).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l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Ward, I.* (1998). *Sedimentary history of the Pandora wreck and surround*. James Cook University, Townsville, Australia.

### [기타자료]

-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2021). <https://sosajh.modoo.at/?link=4gk9h2dx&messageNo=7&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1>, (검색일: 2021.6.16.)  
 경기도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2011). 자활사례관리사업센터 비전. <https://bcnum.or.kr/>. (접속일 2021.6.16.)  
 경기도청(2020). 지역자활센터 현황(2020.1. 기준)  
 경기도청(2021). 내부자료(2021년 자활근로 국도비 변경내시 국비, 도비, 시군비)  
 고양시(2021). 자활사업 관련 내부자료(행복e음에서 추출).  
 고양시(2021). 고양시 통계자료.  
 고양시(2021). 고양시 2010-2021 합본예산서, 본예산.  
 고양시(2021). 고양시 자활기금 운영 계획.  
 고양시청홈페이지(2021). 직원검색 [http://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Emplnfo.do?q\\_domainName=394041700](http://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Emplnfo.do?q_domainName=394041700) (접속일 2021.4.29.)

- 고양지역자활센터(2021).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내부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보건복지부(2017).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 보건복지부(2020b).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 보건복지부(2020c).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2019.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1.12. “자활사업 제도화 20주년-자신형성지원사업 10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201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2019.9.
-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2021). <https://bcnnum.or.kr/>. (접속일 2020.1.22.)
-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2021). <http://www.jahwal.or.kr/?Page=p03c01>. (접속일 2021.1.26.)
- 사회보장통계(2020.12). 기초생활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수.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IframePopup.do?pageIndex=1&datsCIcrit=WS&datsCINo=1011&pCINo=&datsNo=1&searchCondition=1&searchKeyword=&pageUnit=10>. (접속일 2020.5.28.)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2020). 내부자료.
- 인천뉴스(2020). 인천시, 2020년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dxno=126545>, (접속일 2021.4.29.)
-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2021). 내부자료.
-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2021). 내부자료.
-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2021).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2020).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 인천광역시자활센터 홈페이지(2021).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https://injiwon.or.kr/html/self\\_biz03.html](https://injiwon.or.kr/html/self_biz03.html). (접속일 2021.5.11.)
- 평택지역자활센터(2021). 내부자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20) 자활근로 전국 표준화사업 제안서
- 행정안전부(2021).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 부 록

고양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대상 설문지







## A. 일반적 사항

A1. 현재 동거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_\_\_\_\_ 명

A1-1.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빈칸에 그 수를 적어주십시오.(없는 경우는 0으로 응답)

1.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 ) 명
2. 취학 자녀(고등학교 재학생까지)	( ) 명
3. 65세이상의 노인	( ) 명
4.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정신질환 포함)	( ) 명
5.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기질환자	( ) 명
6. 취업하여 돈을 벌고 있는 가구원	( ) 명

A2. 귀하께서는 현재 만성질환(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병, 투약하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A3.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건강함  
 ⑤ 매우 건강함

A4. 귀하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일반수급자                       ② 조건부수급자                       ③ 자활특례  
 ④ 차상위자                               ⑤ 기타( )

A5.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_\_\_\_\_ 만원

※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연금 및 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인 금전 지원 포함

A6. 귀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① 자격증 있음

▶ 보유자격증의 종류: \_\_\_\_\_

(예: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지게차기사 등)

② 자격증 없음

A7. 귀하께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직업훈련 분야: \_\_\_\_\_)

(예: 커피바리스타, 공동주택 회계실무, 컴퓨터활용능력, 간호조무사, 유통관리사,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② 없음

A8. 귀하께서는 자활근로 이외에 취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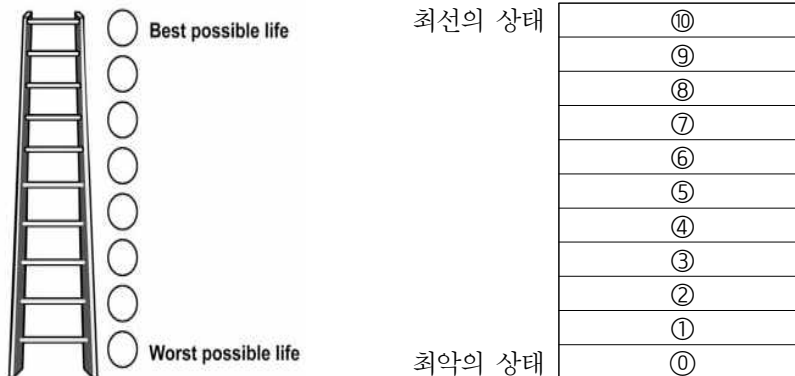
② 없음

A9. 귀하께서는 창업(자영업 등 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A10.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 B. 자활사업 참여 이전 주요 경력

B1. 귀하께서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언제부터 참여하였습니까?

▶ 참여 개시 년월: \_\_\_\_\_년 \_\_\_\_\_월  
(2021년 4월 기준 : 총 ( ) 개월 간 참여)

B2. 이 곳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이전의 (직전 한달)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셨나요?

- ① 일을 하고 있었다(▶ B2-1 문항으로)  
 ②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B2-2 문항으로)

B2-1. 귀하께서는 당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직업: \_\_\_\_\_  
(▶ C1 문항으로)

B2-2.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2021년 4월 기준 : 실직기간 총( ) 개월)

## C.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만족도

C1. 귀하는 현재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게이트웨이  | <input type="checkbox"/> ② 인큐베이팅사업단 |
| <input type="checkbox"/> ③ 디딤돌사업단 | <input type="checkbox"/> ④ 다운사업단    |
| <input type="checkbox"/> ⑤ 돌봄사업단  | <input type="checkbox"/> ⑥ 택배사업단    |
| <input type="checkbox"/> ⑦ 도시락사업단 | <input type="checkbox"/> ⑧ 편의점사업단   |
| <input type="checkbox"/> ⑨ 슈퍼사업단  | <input type="checkbox"/> ⑩ 자활기업     |
| <input type="checkbox"/> ⑪ 내일키움통장 |                                     |

C2. 귀하의 집에서 고양지역자활센터(일산서구 덕이동)까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동 시간(왕복)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1시간 반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3시간 이상

C3. 고양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차  
 ③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④ 기타( )

C4.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담당 공무원의 권유  
 ② 지역사회기관 실무자의 권유  
 ③ 자활사업 참여자의 권유  
 ④ 스스로 희망해서  
 ⑤ 기타( )

C5.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②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③ 다른 일자리보다 자활사업 참여가 나은 것 같아서  
 ④ 향후 취·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⑤ 기타( )

C6. 귀하는 자활사업 참여 전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인터넷 검색,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을 통해)

전혀 그렇지 못함	←	보통	→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C7. 자활사업 참여 초기 자활계획 수립 시 지역자활센터 담당자는 귀하와 충분히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함		←	보통		→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는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상담 및 교육·훈련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이용 경험 없는 경우 맨 끝 칸의 '이용하지 않음'에만 체크하세요.)

프로그램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이용 횟수	이용하지 않음
상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정도)	①	②	③	④	⑤	년 ___회	⑥	
일반적인 소양교육 (생활정보, 교양교육 및 정신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년 ___회	⑥	
자활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	①	②	③	④	⑤	년 ___회	⑥	
취업 및 창업 관련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①	②	③	④	⑤	년 ___회	⑥	

C9. 귀하께서는 지역자활센터 이용 및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비해당
물리적 환경	1. 고양지역자활센터의 위치	①	②	③	④	⑤	⑥	
	2. 센터 환경(공간, 채광, 방음, 환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자활 근로	3. 직무(업무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활급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5.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6. 근로강도(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⑥	
	7. 참여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8. 근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9. 취업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직원 및 동료관계	11. 자활센터 직원과의 업무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2. 자활센터 직원과의 정서적 관계 (인간적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3. 자활사업 참여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4. 자활센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 D.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D1. 귀하께서는 자활사업 참여 후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	보통	→	매우 그려함
경제적 변화	1.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적 변화	2. 일할 의욕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기효능감(나는 삶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건강 변화	6. 건강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우울감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사회적 변화	9.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께서 앞으로 탈수급 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탈수급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보통	→	탈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보통	→	자립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께서는 어떤 형태의 자립(생계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취업(취업분야: \_\_\_\_\_)
- ② 자영업(창업) 또는 공동창업(사업분야: \_\_\_\_\_)
- ③ 기타(\_\_\_\_\_)

## E. 자활사업에 대한 견해

E1. 자활사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	보통	→	매우 그려함
1.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에 도움을 많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자활사업은 실제 취업,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2. 귀하가 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되는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많은) 나이
- ⑦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관련 정보의 부족
- ② 건강상태
- ⑧ 생활습관 및 태도상의 문제
- ③ 낮은 학력 수준
- ⑨ (양육부담, 간병부담 등의) 일하는 데에 방해되는 가정환경
- ④ 의욕과 자신감 등의 결여
- ⑩ 돈 벌 수 있는 일자리의 전반적인 부족
- ⑤ 경력 및 기술의 부족
- ⑪ 기타(\_\_\_\_\_)
- ⑥ 사업자금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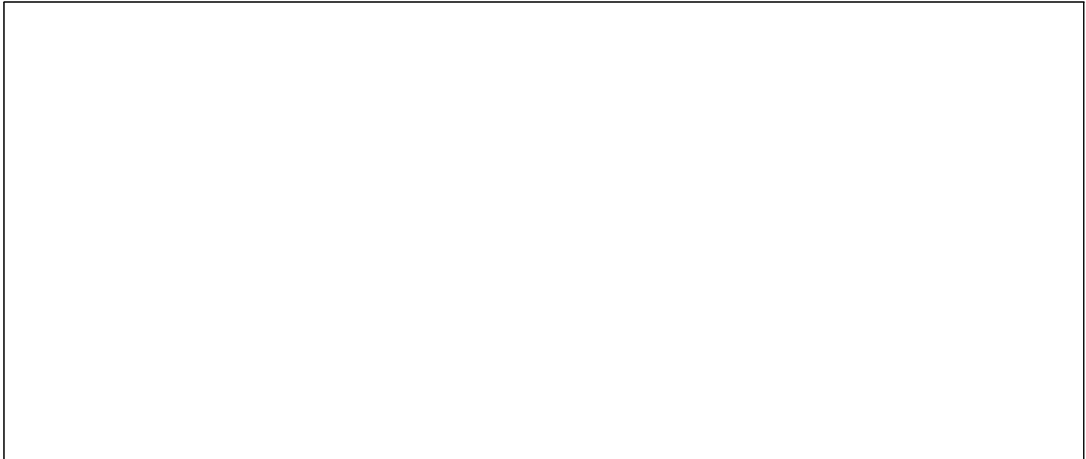
## E3. 귀하께서는 고양시 자활사업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	보통	→	매우 그려 함
물리적 환경	1. 지역자활센터 접근성이 떨어진다(위치 및 층수)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자활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활지원 서비스의 부족	3. 자활근로참여 이외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자활사업과 관련한 (근로의욕 고취 등)심리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활근로에 참여하기까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①	②	③	④	⑤
자활근로 (사업단)	8.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가 다양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는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 타서비스 연계 부족	12. 자활사업 참여 종료 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고양지역자활센터 이외에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연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인식개선	15. 고양시민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16.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E4. 귀하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각각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경제적 보상	1. 자활 및 자립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열심히 자활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자활지원 서비스	3. 취업 정보 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창업자금 적극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취·창업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자활참여자를 위한 가사 및 돌봄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	8. 직업훈련과 연결되는 일자리 마련	①	②	③	④	⑤
	9.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①	②	③	④	⑤
	10.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①	②	③	④	⑤
인식	1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①	②	③	④	⑤

E5. 고양시 자활사업의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Junghwa Moon\*, Ahra K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the policies on the self-support programs for low-income group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programs in Goyang City, thus providing basic data for self-support policies in Goyang City and presenting ways to promote the self-support programs.

To this end,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yeonggi Province on self-support programs were examined.

Second, case studies on self-support programs were performed in the cities such as Pyeongtaek, Incheon, and Bucheon.

Third,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local self-support centers and, the operation of the self-support fund, and the outcome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Fourth, a survey was conducted for one month, from April 1 to April 30, 2021, on

---

\* Senior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32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associated businesses in Goyang City.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on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ir work experiences before participating in self-support programs, current statu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changes experienced after joining the project, future plans, opinions on the programs, and so on.

Fifth,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arried out with a total of 24 interviewees—consisted of six workers of the self-support companies in Goyang City and a group of 18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programs who were chosen based on their sex, age, and the type of the participating program. We asked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companies about the process of operating self-support companies, difficulties in running or participating in the companies, expectations on future changes in their lives, and suggestions for policy support to promote self-support companies. Meanwhile, the participants in self-support programs were asked about the process for their participation, work experiences, academic and counseling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the advantage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policie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grams.

Sixth, a survey was conducted on all eleven employees of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in Goyang City to ask them ab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center (e.g., business groups,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direction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meaning of self-support, and suggestions on policy support to further promote the programs.

Seventh, an advisory meeting was held for academic experts in relevant fields, government officials, and administrators of the project in order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identify the ways to promote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promoting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require multidimensional efforts such as: providing jobs for the participants, supporting employment or creation of new businesses, development of new job positions for their economic independence such as exiting from government support, support for self-support businesses,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re is also a ne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one-stop service that covers employment, social welfare, and social services for low-income groups through emotional self-support support for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e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promote the self-support programs in Goyang City.

First, we need to ensure the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self-support organizations. To that end, we should develop new initiatives, and the self-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to spearhead a specialized program for Goyang City. In addition, sustainable public jobs such as through active public resource utilization and community care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capacity of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ir emotional self-support, promote case management support, and strengthen the participants' social relationships.

Third,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he employees i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this end, the treatment of the employees at the local self-support centers should be improved, and there should be activ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such as by recruiting experts with the provided funds or hiring "self-support assistan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establish progra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employees.

Fourth, the governance for the self-support project must be improved. To that end, a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to facilitate civilian-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the City Hall of Goyang City and the local self-support centers, as well as expanding the role of

the City's Department of Self-support Support. Moreo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network and raise awareness of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Fifth, the self-support fund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mending the municipal legislation.

Sixth, in order to foster self-support companies, it is required to actively utilize the self-support funds and financial support for local self-support programs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nsultative body for self-support companies.

Lastly, it is essential to specifically review the transition to social cooperatives in the operation of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infrastructure should also be expanded, such as by installing additional local self-support centers.